주요 언론보도

[2016. 1. 13(수) 보도기획담당관]

□ TV 방송

○ K B S

- 안전한 대한민국? 소방 인력·장비 지원부터 (뉴스광장경인)
- 경기도 누리과정 예산 지원 '법령 위반' 논란 (뉴스광장경인,930경인)
- 성남시 '3대 무상복지' 결국 대법원으로? (뉴스광장경인,930경인)
- 농촌에서 겨울을 (930경인)
- 신분당선 연장선 30일 개통‥강남~수원 30분대 (뉴스12)
- 경기도 누리과정 예산 긴급 편성 수정안 제출 (뉴스7경인,뉴스9경인)
- 경기도 돼지 10마리 중 7마리 구제역 면역력 갖춰 (뉴스7경인,뉴스9경인)
- 경기도-성남시, GTX 성남역 건설비 분담비율 놓고 갈등 (뉴스9경인)

○ S B S

- 경기도 누리과정 예산 갈등 '증폭' (뉴스퍼레이드)

○ O B S

- 남경필 도지사 "누리과정 도비 투입"‥도교육청.야당 반대 (뉴스740,뉴스940)
- 성남시 무상복지 재의거부, 경기도 제소 (뉴스740)
- 지자체·주민이 만드는 안전한 골목길 (뉴스&이슈)
- 정부-지자체 무상복지 갈등‥법정 다툼으로 (뉴스M)

○ Y T N

- 2개월분 누리과정 포함 수정예산안 제출 (네트워크)
- 경기소방, 지난해 오인 출동 하루 45번 (네트워크)

□ 라디오 방송

○ 불교방송

- 경기도 '누리과정 910억 포함된 수정예산안' 도의회 제출
-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지자체 늘어

○ 평화방송

- [인터뷰] 남경필 "보육대란 터져야 진짜 대책 나온다?...납득 못해"

○ 경기방송
-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1월 12일 뉴스브리핑
- 일산병원 병문안 문화 개선 실천한다
- 경기도, 누리과정 2개월분 910억 원 수정예산안 의회 제출
- 황해청, 성과중심의 전략적 투자유치활동 본격 착수
- 경기도의회, 强 對 强 대치 계속, 본회의 '불투명'
- 사립유치원 연합회, "이재정, 남경필 제안 받아들여야"
- 道유치원연합회 "교육감.의회, 누리과정 예산 즉각 편성해야"
- 이재정, "교육부 이름 '누리교육부'로 바꿔라"

○ 경인방송
- 경기도 장미 시장성 입증...외국품종보다 고가로 팔려
-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 공모...한 곳당 최대 2천500만 원 지원
- 경기도, '해외마케팅대행사업' 참가기업 모집
- "바우처 이용자 만족도 79점, 공급량 늘려야"<경기복지재단>
- 황해청, 성과중심 전략적 투자유치활동 본격 착수
- 경기도, 2개월분 누리과정 예산 담은 수정예산안 제출
- 작년 경기도내 화재발생 건 수 전년대비 6.8% 증가
- 경기도, 전국 최초 산하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경기신보 1위
- "보육대란 막자"...평택시, 누리과정 102억 예산지원 검토

□ 중 앙 지

○ 조선일보
- 27명 死傷 '판교 환풍구 사고' 부실시공·행사주최자에 실형
- 광교~강남 40분… 미리 타본 신분당선 연장선

○ 중앙일보
- "보육대란은 막아야" 평택·강릉·영월도 자체 예산 지원
- 복지부 "청년수당 사업 대법원에 제소"
- 1시간 걸리던 광교~강남 37분, 출퇴근 편하겠네
- 연천 빙하시대, 포천 얼음동굴 … 추위가 반가운 겨울축제

○ 동아일보
- 작년 남은 예산 1219억-전입금 2015억 누리과정에 반영 안해

- 의회-교육위-예결위 모두 야당이 다수
- “정치권이 해법 모색을 김무성-문재인 만나야”
- 경기 북부-강원 올겨울 첫 한파경보
- 신분당선 연장선 30일 개통 앞두고시운전
- 경기주민센터, 취약계층 일자리도 찾아준다
- 부천시 “노인 2000명에 일자리 제공”
- 다보스포럼 빛낼 K팝 홀로그램 콘서트

○ **국민일보**
- 교육부 “누리예산 미편성 교육청 제재”
- ‘청년수당 갈등’ 결국 법정으로 간다
- “기업유치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
- 신분당선 시승은 즐거워
- [사설]지방채 제로, 고양시의 재정건전성 추구노력 돋보여

○ **한겨레신문**
- 서울·성남 ‘청년정책’ 결국 법정으로

○ **경향신문**
- 교육부, 누리예산 옥죄면서 교부금 물쓰듯 ’이중 행태’ 도마
- "누리예산 추경 편성계획 없다"
-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도 ’인재’
- 서울시 ’청년수당‘도 법정다툼 비화 복지부 "제소… 예산 집행정지 신청"

○ **한국일보**
- 개통 앞둔 신분당선 연장선
-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는 人災” 시공업자·행사 주최자 실형
- 잘나가는 경기도 개발 장미... 외국 품종보다 비싸게 팔려

○ **세계일보**
- 판교 환풍구 사고’ 시공업자 2명 징역형
- 서울·전남교육청 "누리예산 일부 편성"
- 서울 청년수당 헌법재판소 심판 받는다

○ **서울신문**
- 법원 “판교 환풍구 사고 원인은 부실 시공”… 시공사 대표 실형
- 남경필 “여야 대표 만나 누리과정 풀자”

□ 경 제 지

○ 매일경제
- 최경환·박원순·최태원… 한류 알린다
- "보육대란 막자" 지자체 누리예산 편성 확산

○ 한국경제
- “정부 예비비 지원 전제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할 것”

○ 머니투데이
- 복지부 vs 서울시 '청년수당' 갈등… 결국 법정다툼으로

○ 서울경제
- 결국 법정 가는 '청년수당'
- 남경필 지사 "정치권이 누리과정 갈등 풀어야"
- 외국품종보다 뛰어난 '경기도 장미'
- 수원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기능성 자재' 의무화
- 경기도 '해외마케팅 대행사업' 참가사 모집
- 22일까지 경기도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 공모
- 복지부·경기도·고양시 등 '병문안 문화개선' 맞손
- "K컬처 알린다"... 다보스 향하는 재계 총수들

○ 파이낸셜뉴스
- 누리과정 시·군 예산 투입 자치단체장들간 갈등 확산

○ 아주경제
- ‘사람 중심 안산’ 더 빛나는 30년 향해 힘찬 도약
- 고양시, 탄소포인트 가입자에 2652만원 인센티브
- 황해청, 평택 포승·현덕지구 투자유치 본격화

○ 전자신문
- 꽉 잠긴 전기차 시장 조례 제정으로 푼다

□ 지 방 지

○ 경인일보
- 신분당선 연장선 복선전철 시승
- 공직 사퇴기한 D-1 '국회 가는 길' 몰려든다

- 오늘 임시회도 불투명 누리과정 어디로 가나
- 점수가 높아서 탈락?
- 고양 '한류월드 꿈' 한발짝 성큼
- 경기신보.道가족여성연구원 '가장 청렴'
- 연천군 백학산단 분양률 100% 달성
- 커져가는 보육대란 급한 불… '정부 책임론' 불지피는 도교육청
- 유치원총연합회 '누리과정 예산 편성' 목청
- 필기 결과 양성 포함땐 최종합격자 성비불균형 무시
- 경기도발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치권 대립 격화
- 경기도농기원 장미 '귀하신 몸' 외국 품종보다 최고 32% 비싸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 9개월새 15억매출
- 글로벌 개방 시대 경기섬유산업 점프
- [기고] 책임을 따지기 보다 보육대란부터 막아야
- [기고]아이 키우는것 떠넘기는 무책임한 박근혜 정부
-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행사 주최자.시공업자 실형

○ **경기일보**

- "보육대란 막아달라"
- 여야 '마이웨이'... 해법 못찾는 누리과정
- 남경필표 '공유적 시장경제' 윤곽
- 킨텍스 제3전시장 본궤도 고양시, 건립 추진 공식화
- 道 '일자리 재단설립 조례안' 입법예고 철회 마음만 앞서 오락가락 '망신살'
- 포승지구 관심 국내외 100여개 기업 '타깃'
- 경기도·복지부·고양시·일산병원 '병문안 문화 개선 실천' 양해각서
- "첨단시설에 승차감·속도 만족"...일부는 "요금 너무 비싸다"
- '해외마케팅 대행사업' 희망기업 모집
- 與는 교육청 압박, 野는 대책위 맞불... 전면전 치닫나
- 김제 구제역 양성 확인 '비상'
- 도립의료원 서수원 이전 반년 넘게 '깜깜'
- 바우처 사업, 만족도 높지만 접근성 낮아
- 환풍구 추락사고 시공업자 등 실형
- "道, 무상복지 제소 포기하라" 성남시, 강행 땐 연정파기 요구
- 한민족 지켜온 '오산 독산성' 세계문화유산 만든다

- 클래식부터 팝·탱고까지... 귀가 즐거운 '환상의 앙상블'
- 아빠 육아휴직 급여 3개월로 확대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강화
- 청소년 건전여가활동 프로그램 사업자 공모
- 도건강가정지원센터 블로그 기자 지원하세요

○ 중부일보

- 충남도행심위 이상한 몽니 '합의해오라' 5개월째 유보
- 道, 누리예산 담은 수정안 제출
- 도내 공공기관 청렴도 1위 '경기신보·가족여성硏'
- 道 일자리재단 설립조례 스스로 철회
- 경기소방, 2015년 오인출동 1만6천여건 '전국 최다'
- 野 "누리예산 전액삭감 하겠다"... 與 "반드시 막아내겠다"
- "아이들 볼모로 네탓 공방 그만하라"
- 평택시 누리예산 102억 선편성
- 南 "누리과정 갈등 국회·정치권 나서라"
- 李 "교육부 이참에 '누리부'로 바꿔라"
- 공연부터 숙박까지... 고양 한류월드, 2020년 복합관광지 도약
- 野 "누리예산 전액삭감" vs 與 "반드시 막아낼 것"
- 정조대왕 효심 깃든 독산성... 세계유산 만든다
- "3대 무상복지 대법원 제소땐 南지사 명백한 연정파괴 행위"
- 道 장미 몸값 껑충
- 道기능경기대회 참가자 모집
- [사설]성남시의 이중적 잣대
- 월드컵재단, 수도권 축구장 방문 수익모델 발굴 등 소통 강화
- 화성방문의 해' 신호탄... 20일 수원관광포럼 연다
-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시공업체 대표 등 실형
- 개관 10년... 수도권 넘어 세계와 소통

○ 경기신문

- 오산시, '독산성'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동'
- 道, 누리과정 수정예산안 제출 도의회 오늘 임시회 '이목집중'
- 경기신보·경가연, 道 산하 공공기관 중 청렴도 으뜸
- 남지사, 도 육상운송단체協 축사
- 작년 도내 매일 28건 이상 불길 치솟았다

- 道, 병문안 문화개선 실천 앞장선다
- 해외마케팅 대행 참가 中企 모집 선정시 발굴~거래성사까지 지원
- 도내 돼지 70% 구제역 면역력 보유 축산위생연, 백신 양성율 68% 향상
- 유치원총연 道會 "도교육청·도의회, 누리과정 예산 편성하라"
- "올해엔 신성장 경제신도시 발전 노력하자"
- "남경필 지사, 예산공부 좀 더하시라"... 교육연정 '삐끗'
- "판교 환풍구 끔찍한 人災 원인은 부실시공"
- 막 오른 '5色 향연' 도민 눈과 귀 사로잡는다

○ **기호일보**

- 도의원들 "여의도 갑니다" 줄사퇴 예고
- 누리과정 910억 담은 수정예산안 오늘 도의회 처리 가능성은 희박
- 연장구간 30일 개통… 미리 타 본 '신분당선'
- 도,갈피 못 잡는 '일자리재단' 설립
- "누리예산 우회지원 될 말인가"
- 도지사 직속' 재난본부 광교신청사 들어가고파
- 도 "누리과정 예산 지원 위법 아니다"
- 보육현장 목소리 듣겠다…도의회 새누리, 유치원 등 릴레이 방문
- 도내 화재사고 절반이 '부주의'
- 도내 스타트업 25억 투자유치 성과
- "무상복지 대법원 제소 말길" 성남시장,도지사에 촉구
- 평택상의 신년인사회… "활발한 기업활동으로 더 많은 고용 창출"
- 도문화의전당,경쾌한 연주로 한 해 시작
- 환자 배려하는 병문안 에티켓 지키기 약속
- "누리과정 예산 즉각 편성하라"
- 성남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주최·시공업자 등에게 실형

○ **인천일보**

- 수원-서울 강남 '30분 시대'
- "누리과정 갈등 정치권이 나서야"
- 道 일자리재단 설립·운영 조례 입법예고 이틀 만에 '돌연 철회'
- 與·野 합의점 도출 '뾰족수' 있나
- "새해에도 희망차게"
- "남 지사,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제소 포기를"

- 고양시 '한류월드 사업' 10여년 만에 개발 윤곽
- 도, 돼지구제역 백신항체 양성률 크게 향상
- 독산성 예전모습 되살려 세계문화유산 편입 추진
- [사설]준예산, 언제까지 방치하나
- 신선하고 친근하게 대중 곁으로
- 경기 신보·道가조여성硏 도 산하기관 중 가장청렴
- 성남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시공업체·행사 주최자 실형

□ 통 신 사

○ 연합뉴스

- "보육대란은 안돼"...누리예산 편성 지자체 확산
- 경기도의회 13일 임시회...누리과정 놓고 재충돌 예고
- 경기도 2개월분 누리예산 910억 담은 수정예산안 제출(종합)
- 누리과정 예비비 3천억 바로 푸나...보육대란 해법 기대
- 의정보고하는 김학용 의원
- 경기소방, 지난해 오인출동 하루 45번꼴...전국 최다
- 이재명 성남시장 "경기도 '무상복지' 제소 포기하라"
- 판교 환풍구 부실의 '민낯'..."무등록업체가 대충 시공"
- 신분당선 연장선 요금 논란...인터넷서 '갑론을박'
- 고양 한류월드에 2천석 규모 공연장·7개 호텔 들어선다
- GTX 성남역 건설비 분담비율 놓고 경기도-성남시 갈등
- 남경필 "정치권이 누리과정 갈등 해결해야"
- 경기창조혁신센터 12개 스타트업 9개월 간 15억 매출
- 경기도 2개월분 누리예산 910억 담은 수정예산안 제출

○ 뉴시스

- 7개 교육청, 누리과정 추경계획 제출거부...'강vs강 힘겨루기 여전'
- 경기교육청 "누리과정 추경 편성? 우리는 해당 없어" 교육부 회신
- 경기도, 해외마케팅지원사업 참가 중소기업 모집
- 경기도 장미, 외국 품종보다 '잘 나가'
- 경기 안성 돼지 농가, 구제역 예방 소독
- 경기 유치원연합회 "누리과정 예산 편성·집행하라" 촉구
- 이재명 "道, 3대 무상복지 제소하면 '연정' 파기 요구"

- 이재정 교육감 "남 지사 '누리 예산' 공부 좀 더하라"

○ **뉴스1**

- 경기일부·강원·충북·경북에 한파특보...당분간 -10도 내외 강추위
- 이재명 시장 "경기지사, 3대 무상복지 제소 포기하라"
- 개통 앞둔 신분당선 연장 '광교에서 강남 39분'
- 경기도의회, 道 수정예산안 반려..."문서형식 미비"
- 경기농기원 개발 장미품종 시장성 인정받아
- 경기도, 지난해 화재 1만333건 발생에 사망자 63명
- 경기혁신센터 첫 졸업기업 배출...25억 투자유치 성공
- 경기도, '해외마케팅대행사업' 참가기업 연중 모집
- 경기도 누리예산 우선 지원'에 기초단체 입장 '엇갈려'
- 경기도·시군 누리과정 지원 '난항'...더민주 반대·절차위반
- '12첼리스트 콘서트', 23일 경기문화전당서 펼쳐져
- 이재정, "무지한 교육부, '누리교육부'로 이름 바꿔라"

KBS

2016년 01월 11일 (월)
사회

경기도 누리과정 예산 지원 '법령 위반' 논란

경기도가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지원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법령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무상보육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 즉 국가가 부담한다는 의미로 명시돼있어 도의 예산 지원은 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해당 시행령이 경기도 등 다른 주체의 부담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행법상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경기도는 이같은 해석에 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 910억 원을 증액한 본예산안 수정안을 만들어 오는 13일 예정된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

14.4 X 6.7 cm

KBS
2016년 01월 12일 (화)
사회

성남시 '3대 무상복지' 결국 대법원으로?



<앵커 멘트>

성남시가 이른바 '3대 무상복지사업' 예산안을 재의해 달라는 경기도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경기도가 대법원 제소를 검토하고 있는데, 결국 해당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해 첫날 아기를 출산한 성남시 주민 31살 홍지은 씨는 산후조리비 24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성남시가 정부 반대에도 올해부터 전면 시행에 나선 '3대 무상복지사업'의 수혜자가 된 겁니다.

해당 사업을 위해 확보한 예산은 산후조리사업비 56억 원, 무상교복 25억 원, 청년배당 113억 원 등 모두 194억 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정부와 협의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위법하다며 예산안 재의 요구를 지시했고, 성남시는 끝내 이를 거부했습니다.

<인터뷰> 김남준(성남시 대변인) : "성남시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지방자치권 침해 조치에 응할 명분도,이유도 없습니다."

경기도는 오는 18일까지 성남시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대법원에 제소하고, 예산집행정지 결정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본안 소송은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지만 집행 정지 결정은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이르면 이달 안에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지난 8일 전액 지급을 마친 무상교복 사업에는 영향이 없지만 당장 다음 달부터 지급할 예정이었던 청년 배당 등 다른 복지사업들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청년 수당제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법적 공방이 예고된 가운데 성남시 3대 무상복지의 시행 여부도 결국 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

KBS

2016년 01월 11일 (월)
사회

겨울철, 실내에서 농촌 배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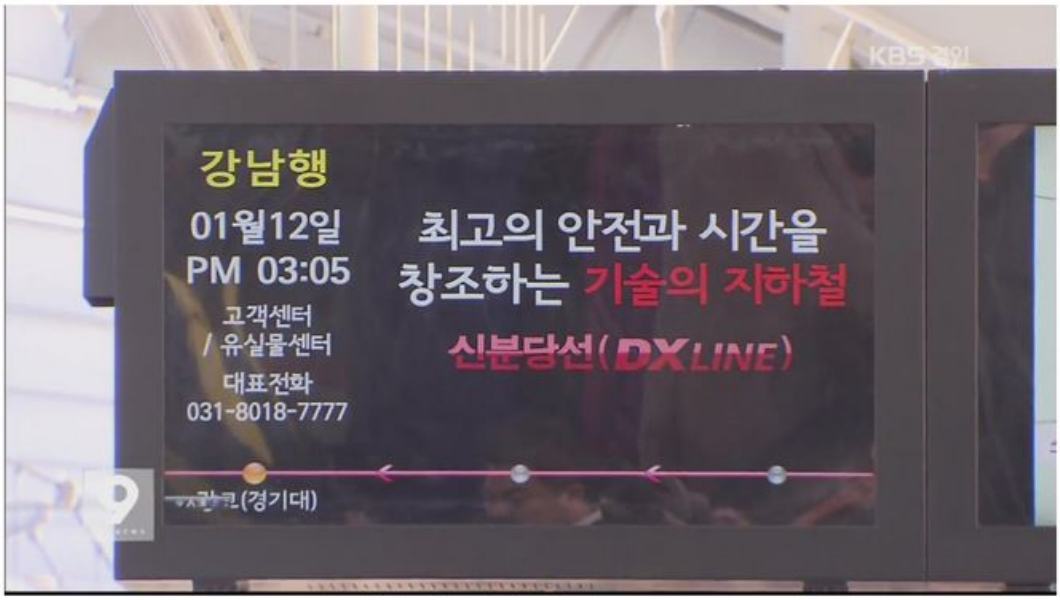


.

14.4 X 10.1 cm

KBS
2016년 01월 12일 (화)
사회

신분당선 연장선 30일 개통...강남~수원 30분대도



<앵커 멘트>

경기 성남 분당에서 수원 광교신도시를 잇는 신분당선 연장선이 오는 30일 개통을 앞두고 시승행사를 열었습니다.

연장선이 개통되면 광교에서 강남까지 30분대에 오갈 수 있게 됩니다.

송형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설 광교역에 열차가 들어옵니다.

오는 30일 개통을 앞둔 신분당선 연장선 시승행사에 시민 15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기존 신분당선 정자역에서 광교신도시까지 12.8km 구간입니다.

<인터뷰> 조향연(경기 수원시 광교동) : "늦은 귀갓길에 저희가 조금 불안했는데요, 저녁에 전철을 타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기다리기에 마음이 좀 안심이 됩니다."

용인시 동천역부터 상현역을 거쳐 광교역까지 모두 6개 역이 신설됐고, 착공이 늦어진 미금역은 내년 10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기존 신분당선과 같이 전 구간 자동 제어 시스템으로 운행되고, 안전 운영요원이 1명씩 탑승합니다.

기본요금은 1회용 교통카드 기준 2,250원이며 이용자가 많은 신용카드 겸용 후불 교통카드의 경우 2,15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특히 용인과 수원 서북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에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터뷰> 정지면((주)경기철도 경영관리팀 이사) : "광교에서 강남까지 30분대 진입이 가능하게 되므로 용인수지 및 광교 지역 주민들의 교통난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총 1조4천38억 원이 투입된 신분당선 연장선의 첫 운행은 오는 30일 오전 5시30분부터 시작됩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

KBS

2016년 01월 12일 (화)
사회

경기도, 누리과정 예산 긴급 편성 수정안 제출

경기도가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담은 수정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경기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치 910억 원 등 당초 본예산안 보다 2천억 원 정도가 늘어난 19조 8055억 원 규모의 수정 예산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최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지 않으면 경기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지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 입니다.

수정 예산안은 내일 오전 11시 개최 예정인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며,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난해 말 상정된 원안은 자동폐기됩니다.

.

14.4 X 7.9 cm

KBS

2016년 01월 12일 (화)
사회

"경기도 돼지 10마리중 7마리 구제역 면역력 갖춰"

지난해 경기지역 돼지 열 마리 가운데 일곱 마리가 구제역 면역력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는 지난해 돼지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68.2%로 나타났다며, 지난 2014년 44.7%보다 23.5%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면역력이 생긴 돼지가 늘었지만 여전히 구제역을 안심할 수는 없다며, 항체 양성률이 80% 수준은 돼야 효과적인 면역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14.4 X 6.0 cm

KBS

2016년 01월 12일 (화)
종합

GTX 성남역 건설비 분담비율 놓고 경기도-성남시 갈등

2021년 개통 예정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의 성남역 건설비 분담비율을 놓고 경기도와 성남시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 분담액을 사업비의 50%로 정해 시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성남시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시 분담액을 20%로 줄여달라며 협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같은 노선에 역사를 신설하는 용인시와 화성시가 이미 지난해 5:5 비율로 공사비를 납부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남시는 현재 분당구 백현·이매동 일원으로 확정된 가칭 '성남역' 건설비용의 지난해분 127억5천만 원을 도에 납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다영기자 (mauverine@kbs.co.kr)

14.4 X 7.1 cm

SBS
2016년 01월 12일 (화)
종합

[수도권] 경기도 누리과정 예산 갈등 '증폭'

<앵커>

수도권뉴스 소식입니다. 오늘(12일)은 누리과정 예산 갈등으로 준예산사태를 맞고 있는 경기도 소식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원지국에서 이영춘 기자입니다.

<기자>

네,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봉합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도비로 우선 편성하자는 남경필 지사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보시죠.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2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도비로 지원한 뒤, 정부 차원에서 보육 대란 해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도가 올해 전체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는데요,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대표단회의를 열고 남 지사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중앙정부가 추후에 지원하겠다는 보장도 없고, 더욱이 올해 누리과정 예산 5천459억 원 전액을 도가 부담하겠다는 것은 법령 위반 논란도 뒤따른다"고 밝혔습니다.

[강득구/경기도의회의장 : 경기도 재원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지방재정이 지금도 열악한데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 현실 속에서 나름대로 대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남 지사의 제안한대로 2개월분 누리과정 예산 910억 원이 포함된 수정 예산안을 오늘 도의회에 제출했는데요, 경기도의회는 내일 오전 11시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이를 심의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유치원연합회 측은 오늘 수원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당국과 정치권의 다툼으로 아무런 잘못도 없는 35만여 어린이와 학부모가 고통받아야 하는 황당한 사태가 방치되고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과 수원 광교신도시를 연결하는 신분당선 연장선이 이달 말 개통하죠, 그에 앞서 오늘 오후 시승행사가 열렸는데요, 오는 30일 개통하는 신분당선 연장선은 총 연장 12.8㎞로 정자역과 연결되는 동천역을 포함해 모두 6개 역사가 들어섭니다.

요금은 광교역에서 정자역까지는 2천250원, 광교역에서 강남역까지는 3천50원입니다.

수원시는 "신분당선 연장선이 개통되면 수원 광교에서 강남역까지 30분대에 오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영춘 기자(choon@sbs.co.kr)

14.4 X 20.1 cm

OBSNEWS
2016년 01월 12일 (화)
종합

남경필 도지사 "누리과정 도비 투입"...도교육청.야당 반대

【앵커멘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경기도 예산을 누리예산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설득하라고 촉구했고, 도의회 야당은 법에 저촉된다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런가운데 정부는 시도교육청 세출예산을 조정하면 누리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유재명 기자입니다.

【리포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자체 예산 투입 방안에 대해 "해법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누리과정은 국책사업인만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새누리당 대표 단체장으로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해법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남경필 지사가) 국민을 사랑하시고 경기도민을 사랑하신다면 대통령께 얘기하시고, 새누리당에게 얘기를 해서 이 해법을 찾아달라는 거죠."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남 지사의 제안은 "인기 영합 주의 발상"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국가의 부담이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아니며, 이는 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화싱크】 김현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법상으로 치면 위반 소지가 있는거고, 한편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예산편성을 침해하는 문제도 있고…."

이에 따라 오는 13일로 예정된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도 누리과정 예산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보육대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시도 교육청의 자체 예산 분석 결과를 내놓고, '여론몰이'에 나섰습니다.

세출 예산 항목을 조정하면 경기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6개월치를, 서울시교육청은 7개월치를 각각 편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교육청은 예산 분석도 엉터리인데다,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면 학교 지원 사업이 줄어들어 '공교육 대란'을 가져오게 된다며 맞서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OBS 뉴스 유재명 기자입니다.

<영상취재 전종필 조성범/ 영상편집 임아영>

유재명 yjm@obs.co.kr

14.4 X 20.5 cm

OBSNEWS
2016년 01월 12일 (화)
종합

성남시 무상복지 재의거부, 경기도 제소

【앵커멘트】
경기도 성남시가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3대 무상복지사업 예산안에 대한 경기도의 재의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경기도가 대법원 제소방침을 밝히면서 무상복지 공방은 법정으로 이어지게됐습니다.
이동민 기자입니다.

【리포터】

성남시는 지난 7일 산후조리 무상지원사업 첫 수혜자를 시작으로 지원사업에 들어갔습니다.

또, 무상교복 지원금도 각 중학교에서 신청서를 받아 18일부터 지급합니다.

청년배당은 오는 20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1분기 배당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들은 아직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성남시는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주 경기도에서 보내온 재의요구 시한이 오늘까지지만 이 역시 거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남준/성남시대변인
"경기도는 현재 헌법을 훼손하는 재의요구를 해 왔습니다. 이에대해 성남시는 재의요구에 응할 명분도 이유도 없음을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경기도는 법적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오는 18일까지 대법원에 성남시를 제소하고, 예산집행정지결정 신청을 하겠다는 겁니다.

【싱크】 경기도관계자
"오늘이 재의요구 기간이었기 때문에 18일까지가 제소기간 이니까 검토해서 방침 받고 조치를 해야하는 상황이라서."

예산안 집행 정지신청은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절차를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규정된 기간이 없어 심리가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 적지않은 시일이 걸릴 우려도 있습니다.

승인하지 않은 무상복지는 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과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지자체 입장이 맞서면서, 공방은 법정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OBS뉴스 이동민입니다

<영상취재:이동민, 영상편집:송수연>

이동민 leedm35@obs.co.kr

14.4 X 19.7 cm

OBSNEWS
2016년 01월 12일 (화)
종합

[네트워크 경인] 지자체·주민이 만드는 안전한 골목길

【 앵커멘트 】
어둡고 인적이 드문 골목길은 범죄사각지대죠.
이런 골목길을 지자체와 주민들이 힘을 합해 살고 싶은 안전한 곳으로 탈바꿈 시켰습니다.
경기 GTV 오소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부천시 펄벅마을.

재개발 사업 무산으로 폐공가가 늘면서 범죄에 취약한 지역이었습니다.

화사한 벽화로 골목길을 새 단장하고 주민들의쉼터를 조성하면서 불과 1년 만에 따뜻한 정이 느껴지는 마을로 재탄생했습니다.

【 인터뷰 】 이세규/부천시 심곡본동
"어둡고 건물들도 낙후돼서 위험 요소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 맑고 깨끗하게 또 환하게 그림도 예쁘게 그려져서 주민들이 아이들 데리고 손잡고 나와서 산책도 하고 또 많은 주민들이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긴급상황 시 이용할 수 있는 비상벨이 달린 지능형 CCTV도 마을 곳곳에 설치했는데, 실제로 지난 한 달간 범죄사고발생률이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차량이동이 많은 학교주변 골목길에도 보행신호음성안내장치와 제한속도표지판을 설치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했습니다.

도는 지난해부터 도내 취약지역을 안전하고 따뜻한 마을로 조성하기 위해 지자체, 주민들과 함께 안전골목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양주시와 가평군, 안성시, 양평군이 선정돼 도비와 시, 군비 총 15억 8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 인터뷰 】 김정훈/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안전관리실장
"지난해 부천, 파주 등지에서 안전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실시한 결과, 주민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 사업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안전 골목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도내 4곳은 올해 6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GTV 오소은입니다.

정진오 jino52@obs.co.kr

14.4 X 17.8 cm

OBSNEWS
2016년 01월 12일 (화)
종합

정부-지자체 무상복지 갈등...법정 다툼으로

【앵커멘트】
협의 없이 사회보장 사업을 시행하려는 서울시와 성남시를 정부와 경기도가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하자, 서울시와 성남시도 헌법 재판소에 권한심판을 청구하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무상 복지 예산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이 법정으로 가게 됐습니다.
보도에 이재상기자입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는 서울시를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수당 무상복지사업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사전 협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9개 지자체의 14개 사회보장 사업을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협의가 없었던 만큼 해당 지방의회에 예산안 재의를 요구하라는 지침을 보냈습니다.

【전화싱크】 보건복지부 관계자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사회보장사업은 새로 만들 때 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하여…"

경기도 역시 성남시에 대해 법적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성남시의 무상 산후조리원 등 3대 무상복지사업에 대해 재의를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습니다.

【전화싱크】 경기도청 관계자
"지방자치법상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소기한이 18일로써 기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시와 성남시는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수원시와 경남, 제주 등 7곳은 협의를 계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OBS뉴스 이재상입니다.

<영상편집 송수연>

이재상 leejs@obs.co.kr

14.4 X 17.8 cm

YTN
2016년 01월 12일 (화)
종합

[경기] 경기도, 2개월분 누리과정 포함 수정예산안 제출

경기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 910억 원을 담은 수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남경필 지사가 2개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도비로 지원한 뒤, 2개월 이내에 정부가 보육 대란 해법을 마련하지 않으면 올해 전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도가 책임지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

수정예산안은 내일 오전 예정돼 있는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14.4 X 5.6 cm

BBS
2016년 01월 12일 (화)
사회

경기도 '누리과정 910억 포함된 수정예산안' 도의회 제출

박준상 기자 amuronae@naver.com



남경필 경기도지사

경기도가 오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 910억원을 포함한 수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1월 제출했던 본예산안보다 2천억원 많은 19조8천55억원 규모로 수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늘어난 2천억원은 지방세 추가분으로 충당하고, 이 가운데 교육협력국 교육협력사업에 2개월분 누리과정 예산 910억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의회 관계자는 "내일 오전 11시 임시회 본회의에서 올해 본예산안을 심의하기로 했다"면서 "수정예산안이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남경필 지사는 지난 10일 "보육대란의 급한 불은 끄고 해법을 찾는데 힘을 모으자"면서 "최선을 다한 이후에도 문제 해결이 안되면 경기도의회와 협의해 이번에는 경기도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14.4 X 18.1 cm

BBS

2016년 01월 12일 (화)
사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지자체 늘어

전영신 기자 ysjeon28@hanmail.net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사태와 관련해 '보육 대란'이 우려되자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오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 91억원을 담은 수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경기 평택시도 추경을 통해 누리과정 6개월분 예산 102억원을 확보하기로 했으며, 수원시도 경기지역 31개 시군 가운데 최초로 시비 159억원을 투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영월군과 강릉시가 잇따라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교부금으로 지원하게 돼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법령위반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14.4 X 6.7 cm

PBC 뉴스

2016년 01월 12일 (화)

종합

[인터뷰] 남경필 "보육대란 터져야 진짜 대책 나온다?...납득 못해"



▪ 남경필 경기도지사, PBC 표طططططط

99.9 경기방송

2016년 01월 12일 (화)
종합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1월 12일 뉴스브리핑

[앵커] 오늘 아침 주요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보도국 문영호 기자 함께 합니다.

[기자] 문영호입니다.

[앵커] 새누리당이 4월 총선의 공천룰을 사실상 확정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공천투표는 1차 경선에서 1.2위 후보간 치지불 리사기 10% 포인트 이내일 때 시르기로 했습니다.

경선에서 가점을 받는 정치신인의 가이드라인에지 나왔는데요.

전현직 국회의원, 광역 기초단체장, 교육감은 정치신인에서 제외됩니다. 전현직 재선이상 광역 기초의원, 정관급 정무직 공무원, 국회 안시청문회 대상 공무원, 총선 출마경험이 있는 자, 3회 이상 당내 경선에 참여한 자 등은 정치신인이 아닙니다.

특히 보훈선거를 위해한 광역기초단체장은 20%, 기초의원은 10% 감점을 하고, 여성과 청애인은 전현직 국회의원에 구분없이 10% 가점을 추기로 했습니다.

[앵커] 나경원 의원이 경우는 3선인데도 가점을 받게 되는 경우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현주 의원 얘기가 나오는데요, 인검복 전 청와대 대표와 안친 연수구에서 맞붙을 포인로 보입니다. 안 전 대변인이 10% 가점을 받게 되는데, 안친주 의원 역시 여성이기 때문에 10% 가점을 받게 됩니다.

이춘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서울 노원병에서 안철수 의원의 대항마로 꼽히고 있는데요, 신인이면서 40세 이하의 청년이어서 20%의 가점을 받게 됩니다.

새누리당은 외부 영입 인사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 의결에 따라 100% 국민여론조사로 경선을 치르도록 했습니다. 기본 원칙은 당원 30%, 국민여론조사 70%지만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앵커] 새누리당 쪽에서 일명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강화한 내용이라면서요?

[기자] 의장의 직권상정 오건이 지나치게 강화됐기 때문에 쟁점법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건데요.

직권상정 요건에 천재지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 등 3가지 외에 "체적이정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태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그동안 야권의 반대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게 새누리당의 얘기입니다.

한가지가 더 있는데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대해 체계나 자구심사를 15일 이내에 마치지 않으면, 다음날 본회의에 무의장 상으로 보고, 그로부터 7일 내에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야치만,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은 지금의 국회선진화법에 근거해서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야권의 반대로 통과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기자] 말씀하신대로 현행 선진화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법안이 처리가 됩니다. 야당이 반대하면 사실상 처리는 어렵습니다. 이한데다 청의화 국회의장 역시 새누리당의 개정안 직권상정에 대해 여야

협의를 우선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서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입니다.

[앵커] 의청무경전철.....문을 닫을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위기를 넘긴 모양이네요?

[기자] 의청무경전철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적자폭 이로로 협약 해지권을 발동하려고 했었는데요, 관리 명시를 점서 연출습니다.

운영사인 UI라인이 의청무시에 계약 해지환급금을 분할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인데요, 2천 500억원 규모의 환급금 중에서 90%를 20년간 분할해서 지급해달라는 게 UI라인의 요구입니다.

의청무시는 일단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이 방안이 타당한 지 검토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투자기관들이 협약 해지권 발동을 염둘기 때문에 금전 몰은 큰 잽이지만, 4월쯤 나오는 검토결과에 따라서 의청무경전철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앵커] 협약 해지권을 발동할 정도로 의청무 경전철의 경영상태가 안 좋은가요?

[기자] 의청무경전철은 GS건설과 동양증권 등 7개 투자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설립한 '나라안'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의 협약에 따라 2012년 7월 1일에 개통한 이후에 30년 동안 의청무경전철을 운영하기로 돼 있는데요.

계통 이후에 매년 200억원 ~ 300억원의 적자가 발생고, 실치어 지난해 7월에는 자본금까지 잠식당해면서 누적적자가 2천 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앵커] 오늘 안산 단원고등학교 졸업식이 열리네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명예졸업식을 연다은 얘기도 있단데, 진행되는건가요?

[기자] 유가족협의회는 오늘 졸업식에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리 '겨울방학식'을 열었습니다.

아직 찾지 못한 2명의 선생님, 4명의 친구들이 돌아올 때까지 학교를 떠날 수 없다는 경청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외에도 지금 학생들이 시용하던 교실 10곳을 그대로 남겨 둘 지 여부를 놓고 유가족들은 존치를, 도교육청은 이전 후 추모관, 4.16 안주시민교육원을 건립해 그대로 돌기겠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올해 신입생들을 받기 위해서 8개의 교실을 더 확보해야 하는데, 교실 10곳을 그대로 남겨둔다면 이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유가족들은 교실을 충족해서 무족한 수업공간을 확보해라, 대신 기억교실과 체적생 수업공간 일구를 따로 만들면 된다며 협복하게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졸업식은 어복모면 반쪽짜리 졸업식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단원고 졸업식에는 세월호 생존학생 75명을 포함해서 86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무 학생들은 불참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요.

외무언의 출입은 통제가 됩니다. 미리 신언적 확인서를 작성해서 이를 받은 사람만 출입이 가능하고, 취재진도 일절 금지시키기로 했습니다.

학교도...생존학생 학무모들도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리고 있습니다.

[앵커] 누리과정을 둘러본 논쟁.... 교육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교육청 예산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네요?

[기자] 네, 결론적으로 각 교육청들이 자체재원으로 1년치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편성할 수 있고, 교부금과 지시단체 전입금을 사용하면 1년치를 안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앵커] 교육청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예상대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얼터리" 자료로 "호도하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교육부 주장은 여전 건치, 그리고 교육청들은 여전 반박을 하는 지 살펴보지요. 먼저 교육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기자]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이 자체 예산을 점검하면 3천 59억원을 누리과정에 투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올해 경기도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5천 459억원이 필요한데 6개월치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정부지원 목적 예비비 614억원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2천 15억원을 합하면 조은 오케이 남는다는 겁니다.

자체 재원 3천 59억원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지난해 쓰고 남은 예산, 순세계잉여금은 천 219억원입니다.

인건비...경기도교육청이 회계자의 인건비와 신규 임용자의 인건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반영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교사 정원을 천 89명이나 늘였으니, 이 정도의 거간세교시를 줄여서 인건비를 아낄 수 있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기도교육청이 "얼터리"라고 비문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교육부가 회계한 인건비를 통해서 53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이미 반영해 있는데다, 교육부가 말하는 회계자 증가분 천 589명은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정의 거간제 교원 감축으로 500억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는 교육부의 주장.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거간제교원 감축으로 준 파청이 발생던 곳입니다. 지금 정정의 거간제 교사는 2개월에 불과하고 오히려 신일학교가 많아 400 여 명의 중등교원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도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에 천 89명을 추가로 배정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방세 전입금 2천 15억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교육부의 주장.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따라 취등록세가 증가하면, 그만큼 취등록세에 같이 따라오는 교육세가 경기도를 거쳐서 경기도교육청으로 전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급다음연도까지 정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전출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확보하기 불가능한 금액이라고도 닷불했습니다.

경기도가 당장 이동 전출시켜주겠다고 하더라도 이는 2017년도에 받을 전입금을 미리 당겨받는 셈입니다.

이런 주장을 모두 끌어 모아서 누리과정 예산에 사용하라는 건, 지장인들에게 내년 월급을 당겨 쓰라는 얘기라는 게 교육청의 설명입니다.

더군다나 교육청은 학교교육을 위해 존재하는 데, 없는 돈 없는 곤 최다 끌어다가 누리과정을 위해서 쓰라는 건 초 중 고 교육을 포기하라는 거라며 개탄스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일 경기도의회가 본회의를 열고, 올해 예산안을 최종할 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2개월분을 편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걸 최리해달라고 하는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데 무원칙입니다.

교육부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에 대한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만, 이 결과가 의원들이 십득할 수준이냐는 점도 의문입니다.

지금의 준예산 사태가 협의를 통해 해소가 될 지의 기능자일뿐더, 야아 협의로 준예산 사태가 마무리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보도국 문영호 기자, 함께 했습니다.
문영호 sonanom@ktm.co.kr 수도권의 살아있는 뉴스 경기방송 뉴스 FM99.9MHz

14.4 X 73.4 cm

99.9 경기방송

2016년 01월 12일 (화)
종합

일산병원 병문안 문화 개선 실천한다



[앵커] 일산병원이 병문안 문화 개선에 나섭니다.

일산병원은 경기도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입원환자 병문안 기준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김칠호 기잡니다.

[리포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양복완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김진홍 고양시 제1부시장, 강중구 일산병원장이 '병문안 문화 개선 실천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일산병원은 일일 병문안 허용시간 운영, 단체방문 제한, 외부물품 반입 금지, 병문안객명부 작성, 상시 출입자 관리 등을 실천합니다.

이와 함께 병원은 영상편지 전달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별도의 면회실을 마련합니다.

일산병원은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기준'을 확산하기 위해 강북삼성병원에 이어 두 번째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경기도와 고양시는 병문안 개선에 병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켐페인을 벌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병문안 문화개선 우수병원을 선정해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양복완 부지사입니다.
(인터뷰) "병문안 할 수밖에 없는 정서나 서비스 형태 이런 것들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경기도가 병문안 문화에 선도적인 도가 되도록…"

일산병원의 실천을 계기로 이 지역에서 바람직한 문병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FM경기방송 김칠호입니다.
김칠호 seven5@nate.com 수도권의 살아있는 뉴스 경기방송 뉴스 FM99.9MHz

99.9 경기방송
2016년 01월 12일 (화)
종합

경기도, 누리과정 2개월분 910억 원 수정예산안 의회 제출

남경필 도지사, "누리과정 문제 해결 정치권의 역할" 강조

[앵커] 경기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을 담은 수정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남경필 도지사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박상욱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 910억 원을 담은 수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지원 중단에 따른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겁니다.

이번 수정예산안 규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보다 2천억 원이 늘어난 19조8천55억 원입니다.

늘어난 2천억 원은 지방세 추가분으로 충당하고, 이 가운데 교육협력국 교육협력사업에 2개월분 누리과정 예산 9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예산안이 가결된 후에도 2월말까지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3월 추경을 통해 나머지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의 역할을 강조'하며, "국회와 정치권이 회의체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누리과정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예산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새누리당도 대책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고 싶다. 이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교육부총리, 경제부총리와 만나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의회는 내일 임시회를 열어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KFM 경기방송 박상욱입니다.
박상욱 jeter9@kfm.co.kr 수도권의 살아있는 뉴스 경기방송 뉴스 FM99.9MHz

14.4 X 16.3 cm

99.9 경기방송

2016년 01월 12일 (화)
종합

황해청, 성과중심의 전략적 투자유치활동 본격 착수

[KFM 경기방송 = 박상욱 기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올해 실질적 투자유치성과 도출을 위해 전략적 투자유치활동에 본격 착수합니다.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평택BIX(포승지구)의 착공과 투자협약(MOU)체결, 현덕지구 실시계획 승인 및 보상을 바탕으로 유망한 타깃 기업과 관련 협회들에 대한 '일대일 밀착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투자유치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황해청은 평택BIX(포승지구)에 관심을 가진 국내외 백여 타깃 기업들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유치활동 추진에 들어갑니다.

이미 평택BIX에는 지난해 말 4개 국내외 물류기업이 90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경기도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또 황해청은 국내 최초로 전액 중국자본에 의해 개발되고 있는 현덕지구를 대상으로 기존 박람회, 설명회 위주의 백화점식 투자유치활동보다는 투자가능성이 높은 85개 국내외 기업을 상대로 전략적인 투자유치홍보를 전개할 방침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평택BIX(포승지구, 63만평)와 현덕지구(70만평)로 구성돼 있습니다.

평택BIX는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전액 투자하여 화학, 기계, 자동차, 전기전자 등 첨단산업과 물류기지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반공사 착공에 들어간 평택BIX는 올해 본격적인 부지조성을 통해 내년 하반기쯤이면 투자기업들이 공장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덕지구는 상업, 관광, 의료, 주거, 교육 등 글로벌 정주환경 조성을 목표로 조성 중입니다.

현재 실시계획 승인이 신청돼 환경영향평가 등 심사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1/4분기 내에 실시계획 승인이 나오고, 실시계획 승인 이후에는 사유지 토지보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상욱 jeter9@kfm.co.kr 수도권의 살아있는 뉴스 경기방송 뉴스 FM99.9MHz

14.4 X 15.1 cm

99 경기방송
2016년 01월 12일 (화)
종합

경기도의회, 强 對 强 대치 계속, 본회의 '불투명'

도의회, "서식 맞지 않다" 경기도 수정 예산안 반려
[앵커] 경기도의회가 내일 본회의를 계획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의사 진행은 불확실합니다.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 도의회 여야 모두 의회보다는 장외 여론전에 더 주력하는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윤종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회가 내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새해 예산안 처리를 다시 한번 시도합니다.

사상 초유의 광역 지자체 준예산 사태 이후 처음 열리는 임시회지만, 정상적인 의사 진행은 불투명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며 남경필 지사의 수정 제안을 일축한 상태입니다.

경기도가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 2개월분 910억원이 포함된 수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도의회는 이를 반려했습니다.

예산안 제출 서식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지만, 경기도와 도의회의 긴장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의 누리과정 특위를 구성하고 경기,서울,광주,전남 등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한 지방의회간 연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 앞에서 대규모 집회 역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역시 보육시설 순회 간담회를 통해 이재정 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경기도의 긴급 예산 편성을 수용하라며 여론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출구 없는 무한대치만을 계속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준예산 사태와 보육대란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KFM 경기방송 윤종화입니다.
윤종화 yjhkfm@kfm.co.kr 수도권의 살아있는 뉴스 경기방송 뉴스 FM99.9MHz

14.4 X 17.8 cm

99.9 경기방송
2016년 01월 12일 (화)
종합

사립유치원 연합회, "이재정, 남경필 제안 받아들여야"

[앵커] 사립유치원연합회는 당장 급한불부터 끄자며 이재정 교육감이 남경필 지사의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수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누리과정 예산을 즉각 집행하라! 집행하라! 집행하라! 교육감은 교육대란 방치말라! 방치말라! 방치말라!"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는 일단 당장의 보육대란부터 막는 것이 급선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육청과 정부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사이 35만 여 명의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고통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경기도가 도 예산을 투입해 2개월 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우선 보육대란부터 막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데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이 이제 와서 법률적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의무가 없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다며, 보육대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음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장입니다.
(녹취) "누리과정 지원은 법적의무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시·도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문제없이 전액 편성해왔던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더 이상 유아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 되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또 이대로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이 끊기게 되면 교직원 인건비 지급이 어려워지고 유치원 운영비가 부족해져 학부모와 교사에게 혼란이 올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따라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경기도교육청은 보육대란을 막아낼 해결 방법을 찾아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경기도 교육감과 경기도의회는 더 이상 법적의무 불이행으로 부모님들과 보육현장의 걱정과 불안을 가중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각 준예산을 편성해 법령상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비인 누리과정 예산을 반드시 집행하고 보육대란을 막아야 합니다."

한편 경기 지역 유치원들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안 되면서, 매달 4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지급받던 누리과정 예산을 이번 달에 받지 못했습니다.

KFM 경기방송 배수아입니다.
배수아 sualuv@kfm.co.kr 수도권의 살아있는 뉴스 경기방송 뉴스 FM99.9MHz

14.4 X 17.8 cm

99.9 경기방송

2016년 01월 12일 (화)
종합

道유치원연합회 "교육감.의회, 누리과정 예산 즉각 편성해야"

[KFM 경기방송= 윤종화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회(회장 이음재)는 오늘(12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육대란 해결을 위해 경기도 교육감과 도의회는 누리과정 예산을 즉각 편성.집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음재 회장은 "누리과정 지원은 시·도 교육감의 법적의무"라며 "어린이들을 보육할 법률적, 사회적 책임을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회장은 이어 "경기도 교육감과 경기도 의회는 더 이상 법적의무 불이행으로 부모님들과 보육현장의 걱정과 불안을 가중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며 "보육대란이 현실화된다면 법적 대응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종화 yjhkfm@kfm.co.kr 수도권의 살아있는 뉴스 경기방송 뉴스 FM99.9MHz

14.4 X 6.3 cm

99.9 경기방송
2016년 01월 12일 (화)
종합

이재정, "교육부 이름 '누리교육부'로 바꿔라"

[앵커] 교육부와 경기도 남경필 지사를 향한 이재정 교육감의 목소리에 점점 날이 서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학교 교육에는 관심이 없고 온통 누리과정에만 몰두해 있다며 '누리교육부'로 바꾸라고도 비판했습니다.

문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누리과정도 문제지만, 이대로라면 초.중.고등학교 교육재정도 근본적인 위기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교육부의 누리과정 예산 촉구에 대해 "당장 활용 가능한 재원 5천 688억원이 있다고 하면 본예산에 반영도 못한 학교운영경비를 우선 회복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하지만 교육부는 누리과정에만 매몰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의 예산분석은 일방적이고도 명백한 왜곡이고 교육부가 예산체계를 제대로 이해나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대한민국 교육이 걱정"이라는 말로 교육부에 냉소를 보냈습니다.

(녹취)" 나는 교육부가 정말 유.초.중고를 책임지는 교육부인가, 누리과정만을 위한 교육부인가.....아주 교육부도 바꾸라고 그래요 이름을 '누리교육부로' "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협력사업비 성격으로 우회 지원하겠다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제안에 대해서 불가능한 일이라며, "예산에 대해 공부를 하라"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에 대한 아쉬움도 밝혔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증을 교부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남경필 지사와 뜻을 같이 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협력해왔다며, 단 한 번도 남경필 지사를 비판하거나 비난한 적이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교육감이 누리과정을 정치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발끈했습니다.

(녹취)"경기도지사가, 누리과정을 정부가 못하면 내가 다 하겠다..좋습니다...이게 정치적 발언이지요. 내가 못한다고 하는 데 뭐가 정치적 발언입니까?"

이 교육감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발언은 사회통합부지사의 몫이었다고도 꼬집었습니다.

(녹취)"나는 남지사가 의회하고 연정을 하면서 사회통합부지사도 두고 하는데, 이 과제(누리과정)는 사실 사회통합부지사의 과제입니다. 말을 해도 통합부지사가 했어야 되는 겁니다."

한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더불어민주당 누리과정 특위 구성과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의 선임안에 대해서는 "늦은 감이 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KFM 경기방송 문영호입니다.
문영호 sonanom@kfm.co.kr 수도권의 살아있는 뉴스 경기방송 뉴스 FM99.9MHz

경인방송 iTV FM
2016년 01월 12일 (화)
지역

경기도 장미 시장성 입증...외국품종보다 고가로 팔려

[경인방송 - 구대서기자 kds@ifm.kr]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자체 개발한 장미 품종이 꽃시장에서 외국품종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등 시장성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 농기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상반기까지 양재동 화훼공판장에서 거래된 장미 173품종 가운데 경기도 개발품종인 레드크라운의 경매시세는 1속 당 1만5천500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외국품종인 아쿠아 품종 1만1천780원 대비 24% 높은 금액입니다.

같은 경기도 개발 품종인 '레드포켓'과 '스위트스킨' 역시 아쿠아 품종보다 9.4% 높았고, '핑크하트'와 '피치밸리'는 비슷한 수준의 가격대를 형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양재동 화훼공판장에서 거래되는 경기도 장미는 모두 9개 품종입니다.

도 농기원은 "꽃시장서 높은 경매가로 거래된다는 것은 시장성이 높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시장성이 우수한 우리품종을 집중적으로 확대 보급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4.4 X 9.4 cm

경인방송 iTV FM
2016년 01월 12일 (화)
지역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 공모...한 곳 당 최대 2천500만 원 지원

[경인방송 - 구대서기자 kds@ifm.kr]

경기도는 오는 22일까지 도내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경기도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합니다.

모집분야는 환경보전 5개, 환경교육 6개 등 총 11개 분야이며, 도내에 주 사무소를 두고 최근 1년 이내에 환경교육과 보전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이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1개 단체 당 최대 2천500만 원, 모두 2억5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rk)나 경기도 환경정책과(031-8008-3543)로 문의하면 됩니다.

14.4 X 7.1 cm

경인방송 TV FM
2016년 01월 12일 (화)
지역

경기도, '해외마케팅대행사업' 참가기업 모집

[경인방송 - 구대서기자 kds@ifm.kr]

경기도는 해외 경기통상사무소 GBC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해외마케팅대행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이는 해외시장 개척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GBC의 현지 전문가들이 바이어 발굴부터 계약까지 기업을 대신해 지사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대상지역은 GBC가 위치해 있는 뭄바이, 모스크바, 쿠알라룸푸르, LA, 상해, 심양 등 5개국 6곳이며, 지역별로 20개 사를 선정해 모두 120개 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중국 광저우와 베트남 호치민에 GBC를 추가 개소해 해외마케팅대행 지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 기업이면 가능하며, 신청은 중소기업 지원정보 포털사이트인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하면 됩니다.

지난해 GBC 6개 사무소는 총 111개 기업에 대한 해외마케팅대행을 추진해 총 2천만 달러가 넘는 수출 계약 실적을 올렸습니다.

14.4 X 8.6 cm

경인방송 TV FM
2016년 01월 12일 (화)
지역

"바우처 이용자 만족도 79점, 공급량 늘려야"<경기복지재단>

[경인방송 - 구대서기자 kds@ifm.kr]

경기도 사회서비스 바우처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는 대체로 높지만, 취약계층 위주의 선별적 복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 사회서비스 이용자 2천500명을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분석한 연구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일반인 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바우처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는 평균 79점으로 대체적으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전국 표준화 사업인 돌봄서비스 보다 지자체의 특성에 맞춰 개발된 상담.교육.치료 등 비돌봄서비스의 만족도는 낮아 이들 서비스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특히 전체 이용자의 93% 이상은 차상위 이하의 저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나 일반인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향후 더 필요한 사회서비스는 건강 관련 서비스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바우처는 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교육, 주택, 의료 등의 복지서비스 구매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해 지불을 보증해 내놓은 이용권을 말합니다.

경기복지재단 강현주 연구위원은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여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이 충분히 많아지고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높아져 이용자들의 서비스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14.4 X 12.1 cm

경인방송 TV FM
2016년 01월 12일 (화)
지역

황해청, 성과중심 전략적 투자유치활동 본격 착수

[경인방송 - 구대서기자 kds@ifm.kr]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올해 실질적 투자유치 성과를 내기위한 전략적 투자유치활동에 착수합니다.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오늘(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평택BIX, 즉 포승지구의 착공과 투자협약 체결, 현덕지구 실시계획 승인과 보상을 바탕으로 '일대일 밀착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황해청은 우선 평택BIX에 관심을 갖고있는 국내외 1백여 타깃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 국내 최초로 전액 중국자본에 의해 개발되고 있는 현덕지구를 대상으로 기존 박람회.설명회 위주의 백화점식 투자유치활동보다는 투자가능성이 높은 85개 국내외 기업을 상대로 전략적인 투자유치 홍보를 전개할 방침입니다.

앞서 평택BIX에는 지난해 말 4개 국내외 물류기업이 900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협약을 경기도와 체결했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평택BIX와 현덕지구로 구성돼 있으며, 평택BIX는 현재 부지조성 공사 중이며, 현덕지구는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14.4 X 10.2 cm

경인방송 TV FM
2016년 01월 12일 (화)
지역

경기도, 2개월분 누리과정 예산 담은 수정예산안 제출

[경인방송 - 구대서기자 kds@ifm.kr]

경기도는 오늘(12일) 2개월 분의 누리과정 예산을 담은 2016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남경필 도지사가 누리과정 예산 지원 중단에 따른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누리과정 예산 부담의사를 밝힌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수정예산안 규모는 지난해 11월 도의회에 제출한 예산안보다 2천억 원이 늘어난 19조 8천55억 원 규모로, 증액된 2천억 원은 지방세 추가분으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2개월 분 누리과정 예산 910억 원은 교육협력국 교육협력사업에 편성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허리띠를 졸라매서 보육예산을 마련한 만큼 이제는 도의회 더불어 민주당과 도 교육감이 도내 35만 아동과 학부모에게 답을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도는 이번 예산안이 가결된 후에도 2월 말까지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3월 추경을 통해 나머지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14.4 X 9.0 cm

경인방송 TV FM
2016년 01월 12일 (화)
지역

작년 경기도내 화재발생 건 수 전년대비 6.8% 증가

[경인방송 - 구대서기자 kds@ifm.kr]

지난해 경기도에서 총 1만 333건의 화재가 발생해 63명이 사망하고, 610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2015년 화재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화재발생건 수는 6.8%, 부상자는 9.3% 증가한 것이고, 사망자는 18.2% 감소한 것입니다.

도 재난안전본부는 건조한 날씨로 인한 임야 화재와 의정부시 대봉그린아파트 화재로 부상자가 대거 발생한 것이 주요증가 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화재발생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47.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기적 요인 21.9%, 기계적 요인 12.7% 등의 순입니다.

부주의 화재 중에서는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34.7%로 가장 많았습니다.

도 재난안전본부 "대부분의 화재는 작은 관심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생활 속 실천으로 화재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14.4 X 10.2 cm

경인방송 TV FM
2016년 01월 12일 (화)
지역

경기도, 전국 최초 산하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경기신보 1위

[경인방송 - 구대서기자 kds@ifm.kr]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가장 청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는 산하 2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조사한 결과, 정원 50명 이상의 Ⅰ유형기관에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50명 미만인 Ⅱ유형기관에서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청렴도가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산하기관에 대한 청렴도 조사는 남경필 도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가 전국 최초입니다.

청렴도 평가는 지난해 6월 민원인 8천44명과 공공기관 소속 직원 2천515명 등 1만55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지난해 10월 실시한 각 기관별 부패방지시책에 대한 평가를 종합한 결과입니다.

이번 조사는 외부는 95% 신뢰수준에 ±1.09%포인트, 외부는 95% 신뢰수준에 ±1.95%포인트입니다.

14.4 X 9.0 cm

경인방송 iTV FM

2016년 01월 12일 (화)
지역

"보육대란 막자"...평택시, 누리과정 102억 예산지원 검토

[경인방송 - 구대서기자 kds@ifm.kr]

경기도 평택시는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보육대란을 막기위해 6개월 분 예산 102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공재광 시장은 오늘(12일) 긴급브리핑을 열어 "보육대란은 어떠한 경우에도 발생돼서는 안되며, 자체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시가 편성하는 누리과정 예산은 만3세~5세 아동 5천868명의 6개월분 지원금으로, 오는 25일~2월5일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평택시에는 어린이집 427곳, 유치원 104곳이 운영 중입니다.

평택시 관계자는 "시 차원의 누리과정 예산지원 검토는 어린이집 학부모들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방침이며, 보육대란에 대한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이해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14.4 X 8.3 cm

朝鮮日報
2016년 01월 13일 (수)
10면 사회

27명 死傷 '판교 환풍구 사고' 부실시공·행사주최자에 실형

무등록 업체에 불법 하도급
설계도면 무시, 임의로 시공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2014년 10월의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에 책임이 있는 시공업자와 행사 주최자들에게 1심에서 무더기로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불법 하도급과 주먹구구식 부실시공, 행사 주최 측의 안전 불감증이 복합돼 발생한 사고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10명 가운데 5명은 실형, 4명은 집행유예, 1명은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시공업체 3곳에도 벌금 200만~1000만원이 선고됐다.

당시 사고는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에서 열린 공연 도중 벌어졌다. 환풍구 위에서 공연을 보던 시민 27명이 환풍구 철제 덮개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약 1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1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강동원 판사는 환풍구 시공 원청업체의 현장소장 김모(49)씨와 공정관리 책임자인 정모(49)씨에게 각각 금고 1년 6개월에 벌금 200만원, 금고 2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공사를 하도급받아 실제로 시공한 업체 대표 김모(48)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데일리TV 총괄본부장 문모(50)씨 등 행사 주최 관계자 3명에게도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사고는 하중(荷重)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시공에서 비롯됐다. 금속 구조물 공사를 맡은 시공업체는 무등록 건설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줬고, 이 업체는 감리 확인을 받은 상세 설계도면을 무시하고 막연한 경험과 짐작만으로 임의로 시공했다. 작업 인부가 공사 과정에서 강도가 약해 보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나 무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행사를 주최한 이데일리TV 관계자들도 대규모 인파가 예상됐지만 안전 관리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 후원 및 협찬이 예상을 밑돌자 예산을 줄여 안전요원 등 70명의 인건비를 포함해 3억2000만원을 제시한 최초 업체 대신에 다른 업체와 4400만원에 계약했다.

이 때문에 행사 당일 관람용 의자 500석을 웃도는 2000여 명이 몰렸지만 안전펜스나 안전요원도 제대로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성남=권상은 기자

11.2 X 16.5 cm

朝鮮日報

2016년 01월 13일 (수)
12면 사회



연합뉴스

광교~강남 40분… 미리 타본 신분당선 연장선 12일 오후 신분당선 연장선 특별 시승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수원 광교역에서 열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광교역과 성남의 정자역을 연결하는 신분당선 연장선은 30일 개통 예정이다. 기존 신분당선 구간은 정자역에서 서울 강남역까지였다. 연장선이 운행을 시작하면 신분당선 이용자들은 종착역인 광교역에서 강남역까지 40분에 갈 수 있게 된다.

11.6 X 20.0 cm

중앙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16면 사회

"보육대란은 막아야" 평택·강릉·영월도 자체 예산 지원

경기 이어 강원 지자체 "우선 충당"
전남선 교육청이 400억 편성 검토
서울교육청도 "조건부 추경 편성"

누리과정 자체 예산 편성한 지자체 자료:각 지자체

지자체	수원시	평택시	안산시	안성시	강릉시	횡성군	영월군
추진 상황	159억원 집행 결정 (4개월 반 치)	102억원 집행 추진 (6개월 치)	260억원 검토 중 (12개월 치)	93억원 검토 중 (12개월 치)	100억원 집행 추진 (12개월 치)	17억원 검토 중 (12개월 치)	10억원 집행 결정 (12개월 치)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자체 예산으로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하겠다고 속속 선언하고 나섰다. 자치단체장들이 '최악의 보육대란은 막아야 한다'는 현실론을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최명희(61·새누리당) 강릉시장은 11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이 현재 시의회 측에 간담회를 요청한 상황이라 15일 이전에 집행 가능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강릉의 경우 163개 어린이집에 2700여 명(3~5세)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다. 올해 필요한 예산은 100억1207만원이다. 최 시장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강원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려오지 않더라도 시의회와 협의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자체 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라며 "어린이집·유치원 학부모 모두가 주민인데 누군가에게 피해가 돌아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영월군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늦어질 경우 군비로 우선 충당할 방침이다. 군은 올해 예산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0억8200만원을 편성해 놓았다. 박선규(59·새누리당) 영월군수는 "이번 결정(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은 주민들의 혼란을 막고 보육교사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7억5504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횡성군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선 집행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검토 중이다.

경기도는 여야 구분 없이 자치단체장들이 보육대란을 막자는 데 적극적이다.

공재광(53·새누리당) 평택시장은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6개월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02억원을 추경으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보육대란은 어떠한 경우에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02억원을 추경예산으로 시의회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102억원은 평택지역 어린이집에 다니는 5868명 아동의 6개월 치 지원분이다. 안산·안성시도 각각 누리과정 운영 예산 260억원과 93억4700만원을 편성했다. 도와 도의회의 합의 결과에 따라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

앞서 수원시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움직였다. 지난 4일 누리과정 예산 지원 대상인 387개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누리과정 예산을 시에서 해결하겠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다.

보육대란을 피하기 위해 도교육청이 나선 지역도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정부가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편성한 목적예비비 3000억원이 풀린다는 전제를 달았다. 전남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위해 5개월분인 400억원을 우선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교육부와 대립해온 시·도교육청 중 서울시교육청은 조건부로 추가경정예산을 세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보육대란'을 피할 여지가 생겼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정부가 누리과정 우회 지원을 위해 편성한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일선 시·도교육청에 보내주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라도 편성하겠다는 전향적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가 전액 삭감한 올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521억원을 다시 편성해 달라고 전날 시의회에 요구한 상태다.

춘천·무안=박진호·최경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27.7 X 17.0 cm

중앙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19면 사회

복지부 "청년수당 사업 대법원에 제소"

보건복지부는 12일 서울시와 성남시가 추진 중인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사전 협의 없는 사업 강행은 위법"이라며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권을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오는 25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5.8 X 3.9 cm

중앙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21면 수도권

1시간 걸리던 광교(수원)~강남(서울) 37분, 출퇴근 편하겠네

신분당선 연장선 먼저 타보니

국내 첫 무인 중량전철, 30일 개통

기관사 자격 있는 안전요원이 동승

수서발 KTX, 광명~수원 고속도로

경기 남부 새 교통망 올해 속속 뚫려



12일 신분당선 연장선 시승식에 참석한 시민들이 안내책자를 보고 있다. 이 전철을 이용하면 수원 광교에서 서울 강남까지 37분 만에 간다. [사진 수원시]



"이번 열차는 강남, 강남행 특별 열차입니다. 출입문을 닫겠습니다."

12일 오후 3시7분 경기도 수원시 이의동 광교(경기대)역. "철컥, 철컥" 소리를 내며 빨간색의 6량짜리 열차가 출발했다. 오는 30일 정식 개통하는 '신분당선 연장(정자~광교) 복선전철' 특별 시승열차다. 객실을 가득 메운 시승객들은 열차가 출발하자 '와' 하고 탄성을 질렀다. 이 열차는 조종사 없이 운행되는 국내 첫 무인 중량전철이다. 그간 도입된 무인 전철은 의정부 경전철과 같은 경량전철뿐이다. 무인이지만 기관사 자격을 가진 안전요원이 열차마다 동승해 비상시에는 수동으로 조종한다.

시민들은 무엇보다 광교역에서 서울 강남역까지 37분 만에 도착하는 것에 기대가 컸다. 그동안 광교 신도시 주민들은 버스를 타고 50~70분 걸려 강남역에 다녔다. 김종오(78)씨는 "일주일에 2번 이상 강남역에 가는데 30분대에 다닐 수 있어 좋다"고 했다. 대학생 이연서(23·경기대)씨도 "인천에서 2시간30분씩 걸려 통학하고 있다. 이번 개통으로 한 시간 이상 통학시간이 줄어 잠을 충분히 잘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날 개통한 구간은 광교(경기대)역·상현역·수지구청역 등을 거쳐 분당 정자역까지 12.8㎞다. 정자역에서 강남역까지는 이미 개통돼 있다. 열차운행 시간은 오전 5시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 공휴일은 자정까지. 평일 출근시간(오전 7~9시)과 퇴근 시간(오후 6~10시)엔 5분 간격으로 운행되며 나머지 시간대와 공휴일에는 8분 간격이다. 요금은 교통카드 이용시 일반 2150원, 청소년 1440원, 어린이 900원이다. 2006년 공사가 시작된 신분당 연장선에는 1조4038억원이 투입됐다.

신분당 연장선을 비롯, 경기 남부지역의 잇따른 광역철도·도로 개통으로 이 지역 생활지도가 바뀌고 있다. 광교·동탄·평택 등까지 강남생활권화 되고 있다. 특히 오는 4월 시험운행에 들어가 8월 개통하는 '수서~평택간 KTX(61.1㎞)'는 화성 동탄과 평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이 철도를 이용하면 수서에서 동탄은 15분, 평택까지는 20여분에 갈 수 있다. 성남 판교역과 경기 여주시를 연결하는 '성남~여주 복선전철(53.8㎞)'도 올 하반기에 개통된다.

경기 남부지역과 강남을 가깝게 한 것은 비단 철도만이 아니다. '광명~수원 간 민자고속도로'가 오는 4월 개통된다. 화성 봉담과 광명 소하동을 잇는 연장 27.38㎞의 왕복 4차선으로 1조1700억원이 투입됐다. '안양~성남 민자고속도로'는 2017년 완공된다.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왕복 6차선의 구리(서울)~세종간 제2경부고속도로도 경기 남부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전망이다. 오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파주·남양주·이천·화성·인천·김포 등 217.5㎞를 연결하는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도 추진된다. 채성령 경기도 대변인은 "그물망 같은 철도와 광역도로가 개통되면 경기 남부지역과 서울의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되는 것은 물론 도민생활이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29.4 X 18.0 cm

중앙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21면 수도권



지난 6일 경기도 포천시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장' 얼음성을 찾은 관람객. [사진 포천시]

연천 빙하시대, 포천 얼음동굴 … 추위가 반가운 겨울축제

전곡리 선사 유적지, 백운계곡 등 경기 북부 곳곳 다양한 체험·놀이

추위가 본격화되면서 경기북부 지역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겨울축제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한탄강변 전곡리 선사유적지에는 구석기인의 겨울나기를 체험할 수 있는 놀이동산이 마련돼 있다. 연천군은 오는 24일까지 '2016 구석기 겨울여행' 축제를 연다.

'전곡리안의 겨울나기'를 주제로 한 축제에서는 구석기 의상 만들기에서 주먹도끼 만들기·집짓기까지 다양한 선사시대 생활을 체험할 수 있다. 빙하시대를 체험할 수 있는 얼음나무 숲·눈사람 마을·얼음 성벽·눈 조각공원·슬로프 길이 120m짜리 대형 눈썰매장도 조성됐다. 스케이트 타기와 연날리기·썰매 대회·빙어낚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총 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대형 화덕에서 바비큐 요리를 즐길 수 있다. 유적지 내 전곡선사박물관에서는 구석기 유물과 인류의 진화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포천시 이동면 백운계곡에서는 31일까지 '제12회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가 열리고 있다. 포천시와 도리울지역활성화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축제에는 크고 작은 얼음기둥과 얼음조각 작품이 전시돼 있다. 계곡 눈썰매장, 얼음썰매장, 펭이 체험장 등도 운영된다. 얼음 성과으로 둘러싸인 눈동산에서는 이글루 체험·얼음동굴 체험·눈위에서 썰매 끌기 행사가 열린다.

포천시는 화현면 지현교 일대에서 다음달 10일까지 제1회 포천송어축제 '설국'을 열고 있다. 축제에서는 송어 얼음낚시·송어 보트낚시와 송어 맨손 행사가 진행된다. 눈썰매장과 얼음놀이터 등 겨울 놀이 시설도 운영되고 있다. 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29.4 X 6.4 cm

東亞日報
2016년 01월 13일 (수)
10면 종합

작년 남은 예산 1219억-전입금 2015억 누리과정에 반영 안해

(순세계잉여금)

경기교육청이 의회에 제출한 올해 예산안 따져보니

정부는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경기도교육청 등 7개 시도 교육청의 올해 예산을 점검한 결과 "예산 편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 중에서도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예산을 제대로 짜면 활용 가능한 재원이 5688억 원(어린이집 소요액 5494억 원)으로 가장 많다고 지목했다. 동아일보는 정부의 발표에 강하게 반발하는 경기도교육청이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면밀히 분석해 누구 말이 맞는지 체크해 봤다.

● 인건비와 시설비 예산 적정한가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퇴직자 1589명의 인건비 절감액 530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가 근거도 없이 퇴직자 수를 추정했다며 되레 교육부에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이 명예퇴직자 수당을 받기 위해 지난해 10월 교육부에 제출한 공문을 보면 정년퇴직 528명, 명예퇴직 1061명으로 모두 158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10월 명예퇴직 수당 교부금까지 경기도교육청에 줬다.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에 올해 신규 교사를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89명을 배정해 줬기 때문에 기간제 교원을 줄여 인건비 500억 원을 감축해야 하는데, 이 역시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신규 교원 증원과 기간제 교원 해소는 관련이 없고, 오히려 학교 신설에 따라 증등 교원이 400명 더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올해부터 교원 운영 정상화 차원에서 정원 외 기간제 교원이 많은 곳에 신규 교사를 집중 배정해 기간제 교원을 줄이도록 했다. 2014년 기준으로 전체 정원 외 기간제 교원 1만여 명 중 6000명이 경기도에 몰려 있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적극적으로' 기간제 교원을 줄여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신설에 따라 교사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경기도의 학교 신설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10년간 전체 학교 신설비 12조 4000억 원 가운데 4조5000억 원이 경기도에 투입돼 476개교가 새로 생겼다. 하지만 적정 규모 학교는 13곳에 불과하고, 학생 수용률이 70% 미만인 학교가 많다.

인건비-시설비 편성 적정했나
인건비 530억 과다편성
교육청 "교원 확충 예산 필요"

외부지원금 규모는?
지자체 전입금 2015억 추가 예정
경기도, 조기지원 의사 밝혀

작년에 남은 예산은?
규정따라 올해 세입에 반영해야
교육청 "교부금 줄어 세입 안늘어"

● 외부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

교육부는 올해 국고 예비비 614억 원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2015억 원이 경기도교육청에 추가로 지원된다고 전망했다. 경기도가 주어야 할 2015년 정산 전망액이 1318억 원이고, 올해 경기도의 지방세 증가분이 697억 원으로 추산되는 데 따른 수치다.

문제는 지자체 전입금이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시점이 '다음다음 연도까지'로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는 2015년 정산금은 2017년까지, 2016년 세입은 2018년까지 경기도교육청에 넘기면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올해 전입금이 늘어날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015년에 부동산 시장이 좋아서 세수가 좀 늘어나기는 했지만 이에 따른 정산은 2017년까지 하도록 돼 있다"면서 "올해 전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2015억 원이 들어올 거라고 추산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경기도는 2014년 전입금을 지난해 전액 넘겨줬고, 올해도 공식적으로 지방세 조기 지원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의 전입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 작년에 쓰고 남은 예산은 어디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세입에서 세출을 빼고 남은 예산) 1219억 원을 올해 예산에 세입으로 넣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를 부당한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교육부가 교부금에서 1200억 원을 줄이기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세입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줄이기로 한 1200억 원은 2013년과 2014년에 교육부가 경기도교육청에 준 학교 신설비 중에서 정산 규정에 따라 반환하기로 예정된 돈이다. 교육부는 "반환이 확정된 금액은 별도의 반환 재원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하게 관리한 뒤 아무 상관없는 순세계잉여금과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김희균 기자 toryou@donga.com

2016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을 둘러싼 쟁점

	교육부 주장	경기도교육청 주장	✔ 팩트 체크
인건비	도교육청이 퇴직자 1589명의 인건비 절감액 530억 원 과다 편성	교육부가 근거 없이 퇴직자를 1589명이라고 추정	1589명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10월 교육부에 명예퇴직 수당 신청을 위해 보고한 인원
순세계잉여금	도교육청이 지난해 쓰고 남은 1219억 원을 올해 예산에 편성하지 않음	교육부가 올해 학교 신설경비 초과 교부액 1200억 원을 감액하기로 해 1219억 원의 잉여금을 학교 신설경비로 쓸 계획	쓰고 남은 1219억 원은 규정에 따라 올해 예산세입에 편성해야 함
지자체 전입금	경기도에서 2015억 원이 도교육청에 들어올 예정	'다음다음 연도'까지 정산하게 돼 있어 2015년 전입금이 2016년에 들어온다는 보장 없음	경기도는 2014년 전입금을 2015년에 전액 전출했고 올해도 지원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힘
시설비	2017년 신설학교 시설비를 공사 1년 차인 올해 앞당겨 416억 원 과다 편성	적기 개교를 위해 1년 차에 최소한 공사비의 40%가 필요	1년 차에는 용지 매입, 설계 등 진행되고 공사는 2년 차에 집중. 도교육청의 예산 방만 운영

36.6 X 23.0 cm

東亞日報
2016년 01월 13일 (수)
10면 종합

누리과정 예산 '0' 서울-광주-경기-전남

의회-교육위-예결위 모두 야당이 다수

중앙정부 對 지자체 대결 부추겨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서울, 광주, 경기, 전남지역의 시도의회와 산하 교육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등 3곳을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리과정이 교육부와 교육청의 갈등에서 '중앙정부 대 지자체' 전쟁으로 확전된 배경에는 이 같은 의회 구조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의회는 총 105석 중 더민주당이 73석, 새누리당 29석, 무소속 3석이었다. 더민주당은 교육정책을 주관하는 교육위원회 13석 중 9석을, 돈줄을 쥔 예결위원회 33석 중 22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광주시의회, 경기도의회, 전남도의회도 마찬가지. 한 예로 경기도는 단체장이 집권 새누리당(남경필 도지사) 소속이지만 의회는 제1야당인 더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남 지사가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정책 집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올해 들어 진보 성향 교육감조차 유치원 누리과정 부분은 교육청 소관이니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더민주당이 1당인 지방의회가 나서 줄줄이 예산을 삭감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지방의회가 교육청보다 한술 더 떠 정부와 대립 각을 세우면서 벌어진 일이다.

현재 교육부는 서울시, 광주시, 전남도교육청에 "지방의회에 예산안 재의를 요구하라"고 통보했고 해당 교육청도 재의를 요구한 상태지만 효과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민주당이 다수인 해당 의회들이 이미 "재의를 거부하겠다"고 했기 때문. 반면에 대전시의회는 더민주당이 의회, 교육위, 예결위를 장악하고 있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 치를 편성했다. 같은 상황인 세종시의회, 전북도의회도 일부 예산을 편성했다.

이은택 nabi@donga.com·김희균 기자

올해 누리과정 예산 0원 편성 지역 시도의회 구성 현황

단위: 석

구분	교육감	단체장	시도의회			교육위원회			예결위원회		
			새누리	더민주	무소속 등	새누리	더민주	무소속 등	새누리	더민주	무소속 등
서울시	조희연(진보)	박원순(더민주)	29	73	3	3	9	1	10	22	1
광주시	장휘국(진보)	윤장현(더민주)	0	15	6	0	2	3	0	4	5
경기도	이재정(진보)	남경필(새누리)	53	74	1	6	9	0	8	13	0
전남도	장만채(진보)	이낙연(더민주)	1	52	4	0	8	1	0	19	1

시도의회 내에는 교육청 담당하는 교육위원회가 편성돼 있음. 교육감은 당적 보유 금지돼 있어 성향만 분류. 자료: 각 시도의회

29.1 X 9.4 cm

東亞日報
2016년 01월 13일 (수)
10면 종합

"정치권이 해법 모색을 김무성-문재인 만나야"

남경필 경기지사, 수정예산안 제출
누리과정 2개월분 910억 추가



남경필 경기지사가 12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논란 해결을 위해 정치권이 나서야 할 때라며 문재인 김무성 여야 양당 대표와의 회동을 제안하고 나섰다.

남 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교육부는 충분히 줬다고 하고, 교육청들은 덜 받았다고 공방을 벌여 마치 영어와 아랍어로 대화하는 것 같다"며 "자세히 보면 교육부도 줬지만 1년 치는 아니고 6개월 치 정도 되니 먼저 예산을 세워보자는 것이고, 교육청들은 나중을 믿을 수 없으니 안 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쪽 감정의 골이 깊은 만큼 정치권이 나서서 소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누리과정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언급하며 "문재인 대표와 김무성 대표가 만나 특위를 구성하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문 대표와 먼저 만나고 싶다"며 누리과정 예산 해법을 위한 공개 회동을 제안했다. 이어 "김 대표는 물론이고 신임 사회부총리와 경제부총리도 잇달아 만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 910억 원을 담은 수정예산안(19조8055억 원 규모)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경기도의회는 13일 임시회를 열어 수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7.1 X 20.3 cm

東亞日報
2016년 01월 13일 (수)
13면 사회

경기 북부-강원 올겨울 첫 한파경보

오늘 서울 영하 9도… 중부 오후에 눈

경기 북부와 강원 일대에 한파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13일도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곳곳에 눈 소식도 예보돼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강원 철원은 영하 15도, 강원 춘천과 서울은 각각 영하 12도와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전국적으로 영하 15도와 영하 1도 사이를 오갈 것으로 보여 추운 출근길이 예상된다. 낮 최고기온도 전국이 영하 1도~영상 6도에 머물겠다.

경기 가평과 강원 철원, 양구 평지 지역, 강릉과 홍천, 평창 산간 지역은 12일 오후 4시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한파경보가 내려졌다. 이들 지역을 비롯해 경기 북부와 강원 지역 일부에서 영하 15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벽부터 낮 사이에 충남과 전북, 전남, 제주 산간에 눈(강수확률 60~70%)이 오는 곳이 있겠고,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중부지방(강원 영동 제외)과 경북 내륙에서 눈(강수확률 60~70%)이 오는 곳이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와 서해 먼바다,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2~4m로 높게 일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2.5m로 일겠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14.6 X 8.7 cm

東亞日報
2016년 01월 13일 (수)
16면 수도권



신분당선 연장선 30일 개통 앞두고 시운전 30일 신분당선 연장선 개통을 앞두고 12일 경기 수원시 광교역에서 기관사가 전동차를 시운전하고 있다. 신분당선 연장선이 개통되면 광교역에서 서울 강남역까지 39분 만에 갈 수 있다. 뉴스1

14.4 X 8.8 cm

東亞日報
2016년 01월 13일 (수)
16면 수도권

경기주민센터, 취약계층 일자리도 찾아준다

교양 강습 넘어 복지허브로

경기도는 지역사회 비즈니스센터와 복지 허브 기능을 강화한 새로운 주민자치센터를 시범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543곳에 이르는 주민자치센터는 대부분 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돼 교양과 취미 등 강습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된다. 새로 선보이는 '넥스트 경기 주민자치센터'는 여기에 복지와 일자리 관련 수요 공급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복지와 안전 중심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 등이 통합 주민자치위를 꾸리고 파출소 등 유관 기관의 지원을 받아 마을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게 된다. 동 자원봉사센터와 복지협의체가 힘을 모아 복지취약계층을 찾아내 지원하고 지역 소규모 일자리를 발굴해 알선하는 역할도 한다. 또 경기변호사회의 협조를 받아 주 1, 2회 마을 순회상담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미용 봉사 등 재능 나눔과 푸드 셰어링 등도 진행한다.

경기도는 이달 중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한 뒤 5개 읍면동에 1억 원씩 지원해 시범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내년에는 대상을 10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14.4 X 8.9 cm

東亞日報
2016년 01월 13일 (수)
16B면 인천/경기

부천시 "노인 2000명에 일자리 제공"

부천시는 부천시니어클럽 등 9개 기관을 통해 만 65세 이상의 노인 20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평균 하루 3시간, 주 3일 근무로 1인당 매달 최대 2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천시내 공공기관, 학교, 전철역 등에서 근무하게 되며 구직자들은 2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대상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032-668-4107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7.2 X 8.8 cm

東亞日報
2016년 01월 13일 (수)
B03면 종합

다보스포럼 빛낼 K팝 홀로그램 콘서트

전경련 21일 '한국의 밤' 행사
문화융성 주제로 공연-전통주 소개
60개국 정재계 리더 650명 참석

재계 주요 총수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 주요 인사들이 스위스 다보스로 날아가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행사를 갖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스위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다보스포럼) 기간인 21일 현지에서 '한국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60개국 정치 경제 등 각 분야 리더 6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 박 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최태원 SK그룹 회장, 강성모 KAIST 총장 등 한국의 주요 인사 50여 명과 김용 세계은행 총재, 리처드 노드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 공동대표 등 글로벌 정·재계 리더 6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 주제는 '문화융성'이다. 전경련은 이날 행사를 통해 한국 문화산업의 경제적 가치를 알릴 계획이다. 2012년 '강남 스타일'로 전 세계에 걸쳐 선풍적 인기를 끈 가수 싸이, 북미 남미 호주 등 세계 곳곳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투애니원(2NE1) 등 한류 가수의 공연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킨 케이팝 홀로그램 콘서트가 열린다.



지난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한국의 밤'행사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
전경련 제공

케이팝 홀로그램 콘서트 외에도 글로벌 모바일 메신저로 주목받는 '라인(LINE)' 캐릭터 등 한국 콘텐츠 산업도 소개한다. 인삼주 백세주 복분자주 매실주 막걸리 등 다양한 전통 주류도 선보일 예정이다.

전경련은 2009년부터 다보스포럼에서 한국의 밤 행사를 개최해 왔다. 2014년은 '창조경제', 지난해는 '통일한국'을 주제로 행사를 열었다.

이번 다보스포럼은 19~23일(현지 시간)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를 주제로 열린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14.6 X 15.8 cm

국민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12면 사회

교육부 "누리예산 미편성 교육청 제재"

교육 교부금 삭감 카드 꺼낼 듯
서울 등 6곳 추경 편성 않기로
남경필, 정치권 참여 회의체 제안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한 시·도교육청에 대해 조만간 제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 예산집행정지 신청 등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당장 교육감들을 움직일 수 있는 카드는 아니어서 '사후약방문' 성격이 짙다. 여야 정치권의 극적 합의 없이는 코앞으로 다가온 '보육대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12일 "추가경정예산 계획을 오늘까지 교육부에 제출하지 않은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최종 의사를 밝힌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8일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누리과정 예산을 담은 추경 편성 계획을 12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었다.

이날 오후 8시 현재 추경 편성 계획을 제출한 교육청은 울산·경북·대전·광주·전북·전남·인천 등 7곳이다. 울산·경북·대전은 100% 편성 계획을 밝혔다. 광주·전북은 편성을 거부했고, 인천은 "의회 상황을 보고 결정"이라고 했다. 어린이집 예산 '0원'이었던 전남은 입장을 바꿔 유치원 8개월, 어린이집 5개월 예산 편성 계획을 냈다. 서울·경기·강원·세종 등은 편성 계획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초 12일이 시한이었지만 하루 정도는 더 기다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추경 계획 미제출 교육청에 꺼내들 유력한 카드는 '교육교부금 삭감'이다. 예컨대 어떤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1000억원을 편성하지 않으면 정부가 내년 2월 교부금을 줄 때 1000억원을 빼고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부금 삭감은 내년에 이뤄지는 일이다. 나머지 대책도 법정 다툼이어서 언제 결론이 날지 불투명하다. 보육대란은 이번 주를 넘기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달 20~25일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운영비 등이 지급되지 않으면 현실화된다.

한편 남경필 경기지사는 국회와 정치권 등이 참여하는 회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남 지사는 "이제 국회와 정치권이 나설 때"라면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고 싶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교육부총리, 경제부총리와 만나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도경 강희청 기자 yido@kmib.co.kr

20.6 X 9.9 cm

국민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13면 사회

'청년수당 갈등' 결국 법정으로 간다

"사회보장기본법 위반"
복지부, 대법원에 소송 예정

'지방교부세 감액' 조항 관련
서울시는 권한쟁의 청구키로

청년정책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했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고 서울시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키로 했다.

서울시는 12일 사회보장기본법상 중앙정부와 협의하지 않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게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오는 25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서울시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교부세를 수단으로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권을 중앙정부가 사실상 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또 복지부가 청년활동지원사업 예산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지시한 것과 관련,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를 예산편성의 사전절차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예산안 의결이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청년활동지원 사업에 90억원을 편성한 올해 예산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 사업은 정기소득이 없는 서울 거주 중위 소득 60% 이하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간 월 평균 50만원을 청년활동지원비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이 사업이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해당돼 사전 협의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아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했다며 대법원에 예산안의 위법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고 예산안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연내 추진이 어렵게 된다.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사회보장서비스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사업 시행을 위해 협의하겠다며 이날 오후 복지부에 협의 요청서를 제출했다.

시는 또 사회 원로그룹, 청년계, 복지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이 지난달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 구성을 국무조정실 등에 제안했지만 답변이 없어 일단 중앙정부를 제외하고 위원회를 구성해 청년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청년배당, 무상교복사업, 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 등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 사업'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이미 이 사업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20.7 X 12.8 cm

국민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13면 사회

"기업유치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

신년 초대석

정찬민 용인시장

"글로벌 경제 위축으로 올해 기업들의 투자나 일자리 창출도 저조할 전망입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차원에서 기업유치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지구 끝까지라도 가겠다'는 자세로 일할 생각입니다."

정찬민(사진) 경기도 용인시장은 11일 국민일보와 신년인터뷰을 갖고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세일즈 행정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지난해 대한민국 미래창조 경영대상과 전국 지자체 규제개혁 평가 부문 대통령상 수상을 통해 용인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투자의 최적지임이 이미 확인됐다"며 "정보기술(IT)·생명공학기술(BT)·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발전과 체류형 문화관광 산업, 말 산업, 6차 산업에 집중해 2018년까지 약 6만개의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자신했다.

정 시장은 또 "지방재정 조기 집행, 인허가업무 간소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IT·생명공학 산업 등 집중
3년간 6만개 일자리 창출
올 市 발주 건설사업 87%
1분기 추진해 지역 활성화

정 시장은 이와 관련, "올해 시 발주 건설사업 624개 가운데 87%인 545개를 1분기에 추진하기로 했다"며 "민원처리 기한 사전예고제와 분기별 민원처리단축 마일리지제를 운영해 신속한 인허가업무 처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 건전성 강화,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100만 대도시 도약을 위한 체계적 도시발전 계획 수립 등을 올해 시정의 중점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재정 건전성 강화에 대해선 "그동안 각종 사업을 축소·연기하는 등 긴축 재정을 펼쳐 재정난의 주범이었던 경전철 지방채를 지난해 모두 갚았다"며 "2017년을 '채무제로 원년의 해'로 정하고 올해도 재정운영의 긴축기조를 유지하며 세원 발굴과 체납세 강력 징수 등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용인시가 2017년에는 인구 100만을 넘는 대도시가 될 것"이라며 "대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대도시 준비 TF팀'을 설치,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도시브랜드 파워가 곧 경쟁력'이라는 소신으로 지난해 '여성특별시' 선포와 함께 태교도시, 줌마렐라(아줌마+신데렐라) 축제 등 차별화된 정책으로 타 지자체의 눈길을 끌었다.

그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태교도시는 소중한 문화유산인 태교신기를 독창적인 도시브랜드로 계승·발전시키는 정책"이라며 "아울러 줌마렐라 축제도 축구를 매개로 여성의 화합과 참여를 이끌어내 사람중심의 인본도시 구축에 중심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인=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15.4 X 17.2 cm

국민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16면 경제



신분당선 시승은 즐거워 수도권 지하철 신분당선이 정자역에서 광교역까지 연장됐다. 12일 특별 시승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열차 안에서 즐거워하고 있다. 정식 운행은 오는 30일 시작된다. 연합뉴스

10.3 X 18.6 cm

국민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27면 사설/칼럼

지방채 제로, 고양시의 재정건전성 추구노력 돋보여

경기도 고양시가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지방채 제로'의 시대를 열었다. 고양시는 11일 "국비 지원 융자금 3억원을 제외하고 지방채 제로를 달성했다"며 "지방채와 이자, 분담금과 적자보전 등을 포함한 실질부채는 356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2010년 6월 기준 고양시의 지방채 발행 규모와 실질부채가 각각 2665억원과 6097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부채를 줄이기 위한 고양시의 노력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최성 고양시장이 2010년 7월 취임했을 때만 해도 새로운 사업을 벌일 수 있는 돈이 없을 만큼 재정 상황은 열악했다. 최 시장은 뼈를 깎는 자구책을 펴기 시작했다. 킨텍스 지원시설 부지 가운데 7곳을 5117억원에 팔아 빚부터 갚았다. 신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고 건설사업 발주를 가급적 줄였다. 시는 나머지 킨텍스 지원시설 부지를 매각해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비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빚내서 건물을 짓겠다는 발상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다. 시는 부담해야 했던 이자 366억원을 시민 복지와 교육을 위해 사용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솔선수범하면 부채를 줄이고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최 시장과 전 직원이 지난 5년6개월 동안 펼친 빚 갚기 운동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의 총 부채는 201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100조원대에 달했다.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부채 비율은 3대 7 정도다. 지방세 수입이 세입예산의 10% 미만인 지자체는 98곳에 이른다. 인천은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9.19%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지방공기업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지방재정을 축내는 좀비 공기업은 한둘이 아니다. 그런데도 초호화 청사 신축, 지방채와 포퓰리즘 정책 남발, 전시성 행사 등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일이 곳곳에서 횡행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들은 고양시의 부채 감축 노력을 본받아야 한다.

15.1 X 9.9 cm

한겨레
2016년 01월 13일 (수)
14면 수도권

서울·성남 '청년정책' 결국 법정으로

정부, 대법 제소·집행정지 신청키로
집행정지 수용땐 파행 불가피
서울시, 복지부에 사업 협의 신청

서울시와 경기도 성남시가 추진중인 청년활동지원·청년배당 사업이 중앙정부의 반대로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서울시와 성남시가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청년배당 사업 도입을 미리 협의하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관련 예산안의 위법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고 예산 집행정지 결정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의 요구를 지시했는데도 서울시가 불응했기에, 지방자치법 절차에 따라 14~15일께 서울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할 계획이며, (서울시의) 예산안 집행정지 결정도 함께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성남시의회에 대한 제소는 경기도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사회보장기본법은 정부와의 협의를 규정할 뿐, 예산편성의 사전절차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재의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만약 대법원이 예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 사업의 연내 시행은 불투명해진다. 경기도의 재의 요구 지시를 거부하고 '절반 집행'에 들어간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사업'(청년배당, 산후조리지원, 무상교복)도 즉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정석윤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은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 청년활동지원 사업의 연내 시행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날 복지부에 청년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협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법규상 (협의 대상인) 사회보장서비스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사업 시행을 복지부가 결정하는 것은 지자체의 자치복지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도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승적 협력 차원에서 절차에 따라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활동지원 사업은 복지사업이 아니어서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 대상이 아니란 기존 입장에서 물러선 셈이다. 이는 서울시가 협의조차 거부할 경우 대법원 판결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최근 중앙정부 등에 제안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날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에 정부를 일단 제외하고, 사회 원로그룹과 청년·복지계 중심의 범국민위 형태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임인택 이창곤 기자 imit@hani.co.kr

20.2 X 12.5 cm

경향신문

2016년 01월 13일 (수)
03면 종합

교육부, 누리예산 옥죄면서 교부금 물쓰듯 '이중 행태' 도마

황우여, 막판 지역예산 결재 두고 "총선용 전별금" 지적
주먹구구 특별교부금 대수술, 보육대란 활용 여론 커져

보육대란이 코앞에 다가오며 시·도교육청들이 예정사업까지 줄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쌈짓돈처럼 주물러 온 행태가 눈총을 받고 있다. 특별교부금은 그동안에도 주먹구구식 운영이 끊임없이 문제가 되며 비율을 줄이는 정부 법안까지 추진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보육대란 해법으로 특별교부금을 주목하는 보육단체들이나 교육 전문가들도 늘고 있다.

■장관 쌈짓돈 된 교육부 '특교'

전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가 교부되어 17개 시·도교육청에 전달된다. 이 중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하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할 경우에 대비해 4%를 특별교부금으로 둔다. 특별교부금은 전국에 걸쳐 시행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60%),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사업(30%),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10%) 등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다. 올해 특별교부금 총액은 1조 4443억원이다.

이 중 의원들 쌈짓돈으로 비판받는 지역교육현안사업은 각 지역 학교에서 사업을 교육청에 신청하면 교육청이 다시 교육부에 신청하는데 교육부 내부 검토 후 장관이 결재한다. 황우여 사회부총리가 장관으로 있으면서 자기 지역구에 갈 예산을 직접 결재한 것이 특별교부금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실제 여야 양측에서 서로 '내가 장관에게 얘기해서 유치했다'고 치적 내세우기를 하는 볼썽사나운 모습까지 연출됐다. 국회 관계자는 "의원들이 지역민원을 받거나 지역구의 학교를 직접 골라 교육청에 신청하도록 하면 서류는 학교가 내고 의원이 치적을 홍보하는 방식이 만연돼 있다"고 말했다.

국가시책사업은 교육부 차관이 위원장인 12인의 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정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자유학기제, 학교폭력예방, 일반고 역량강화사업 등 80여개의 2016년 국가시책사업을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국가시책사업 중 교육부가 홍보하고 싶은 사업에만 사용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정부는 특별교부금을 지엿대 삼아 교육청 길들이기에 사용하는데 이것을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돈을 누리과정에 쓸 수 없나

교육부가 재정 효율화를 앞세워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들을 옥죄면서도 자신들은 특별교부금을 펑펑 쓴 이중적 행태가 도마에 오르며 보육대란 불똥이 특별교부금에 옮겨붙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줄곧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4%에서 2~3%로 낮춰 누리과정 예산에 쓰자고 주장해 왔다. 최소 1%만 떼어도 3610억원, 2%를 떼면 7220억원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이야말로 전국 단위의 국가사업이므로 국가시책사업으로 볼 수 있다"며 "특별교부금 비율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특별교부금 문제가 계속 제기되자 2014년 4월 4%에서 3%로 축소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을 정부 발의로 제출했다. 이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비슷한 성격의 행정자치부 특별교부금도 3%로 교육부(4%)보다 1%포인트 적다.

지난해 말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새해 예산에 목적예비비로 편성된 3000억원을 비롯해 특별교부금 1100억원과 지방채 차관 2200억원 등 6300억원을 곧바로 누리과정에 투입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은 보통교부금 항목에 들어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금 교부 대상이 아니다"라면서도 "교육청 재정 여건상 편성이 어렵다면 우회 지원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2012년 특별교부금 비율을 2%로 축소해야 한다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강 대 강 구도로 가고 있는데 특별교부금 우회 지원, 기재부 예비비 등 방법은 있다"며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아영 기자 laykn1@kyunghyang.com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역구(인천 연수구)에 배부된 2016년 특별교부금

청학중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사업	7억원
송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사업	5억4000만원
청학공업고등학교 노후바닥 교체공사	3억1100만원
인송중학교 노후바닥 교체공사	1억8900만원
함박초등학교 냉난방 개선공사	1억7600만원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7억7300만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기숙사 신축	26억1200만원
합계	52억9100만원

자료: 황우여 의원 의정보고서

34.1 X 21.2 cm

경향신문

2016년 01월 13일 (수)
03면 종합

"누리예산 추경 편성계획 없다"

시·도 교육청 입장 고수
어제 정부 제출 시한 넘겨
전남만 "예비비 한도 편성"
교육부 "예비비 집행 곤란"

'12일까지 누리과정 예산 추경 편성계획을 제출하라'는 정부의 요구에도 어린이집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지역교육청의 대부분이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이 모두 예산 편성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목적예비비 집행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누리과정을 둘러싼 마찰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교육청은 12일 "삭감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광주시의회의 재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예산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598억원만 편성했지만 시의회에서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전액 삭감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강원도교육청과 전북도교육청 역시 교육부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원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59억원을 추경에도 편성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지난달 도의회에서 삭감된 유치원 누리과정 6개월분 227억원에 대해서는 다시 편성할 계획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11일 교육부에 '추경 편성 계획이 없다'고 통보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유일하게 추경을 편성키로 했지만 '정부 지원금 범위 내'로 한정했다. 전남도의회가 삭감해 유보금으로 놔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82억원에 정부가 목적예비비를 지원할 경우 받게 될 228억원만큼만 예산을 짜기로 했다.

'준예산'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은 본예산이 통과될 때까지는 관련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회는 13일 임시회를 열고 경기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 910억원을 포함시켜 제출한 수정 예산안에 대해 논의한다. 세종시교육청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개월분을 어린이집 예산으로 전용하는 시의회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한 실정"이라며 입장 결정을 미루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까지 7개 시·도교육청이 추경 편성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예산 편성 계획을 모두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을 약속한) 목적예비비 3000억원은 집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제출하지 않은 10개 교육청에 대해서는 하루(13일) 더 기다려 보고 대응 방침을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현석·경태영·박용필 기자

kaja@kyunghyang.com

15.0 X 16.1 cm

경향신문
2016년 01월 13일 (수)
11면 사회

원청→하청→'무등록업체' 재하도급 = **부실시공**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도 '인재'

27명의 사상자를 낸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는 무등록업체가 설계도면을 무시한 채 대충 시공해 발생한 '인재'로 밝혀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업체 대표 김모씨(50)에게 징역 1년, ㄴ업체 대표 김모씨(48)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ㄷ건설 현장 소장 김모씨(49)와 차장 정모씨(49)에겐 금고 2년6월에 벌금 200만원과 금고 2년에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원래 승인받은 설계도면대로만 시공했더라면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대형 인재 사고"라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야외광장 환풍구 시공사 원청업체인 ㄷ건설은 2010년 11월 ㄱ업체에 시공을 맡겼다. ㄱ업체는 이듬해 무등록업체인 ㄴ업체에 재하도급했다. ㄴ업체는 설계도면과 달리 경험과 짐작만으로 시공했다. 애초 도면에는 환풍구 위를 6개의 덮개(그레이팅)로 덮고 그레이팅은 환풍구 안쪽 시멘트 벽면에 설치한 앵글이 받치는 방식으로 설계됐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2014년 10월17일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에서 환풍구 철제 덮개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환풍구 위에서 공연을 보던 시민 27명이 18.9m 아래로 추락, 1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10.0 X 11.9 cm

경향신문

2016년 01월 13일 (수)
14A면 수도권/제주

서울시 '청년수당'도 법정다툼 비화
복지부 "제소… 예산 집행정지 신청"

이재명 성남시장 "경기도, 3대 복지 제소 땐 연정 파기 검토"

청년정책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하면서 사전에 협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며 대법원에 예산안의 위법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고 예산안 집행정지 결정도 함께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에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 결과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게 한 시행령은 지방자치권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25일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맞섰다.

복지부와 서울시의 갈등은 지난해 11월 초 서울시가 청년수당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시작됐다. 복지부는 청년수당 정책이 사회보장제도라며 사회보장기본법상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봤지만, 서울시는 지자체 고유의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협의 대상이 아니라며 맞섰다. 지난해 12월 말 서울시의회가 90억원의 예산안을 통과시키자 복지부는 서울시에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는 지시를 거부했다. 이에 복지부는 대법원 제소 방침을 밝혔고,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단, 서울시는 12일 대승적 협력 차원에서 복지부에 청년수당 관련 협의 요청서를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경기 성남시의 '3대 복지사업(청년배당·무상교복·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성남시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제소할 권한이 경기도에 있는 만큼 경기도가 제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만약 경기도가 제소를 강행한다면 이는 명백한 연정 파괴 행위이므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공식적으로 연정 파기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인용되면 서울시와 성남시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나 두 지자체는 지방교부세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교부세가 삭감되더라도 해당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수당 정책을 두고 "정부와 끝장 토론이라도 하고 싶다"며 강행 의사와 함께 청년문제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 구성을 국무조정실 등에 제안했으나 중앙정부는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향미·최인진 기자
sokhm@kyunghyang.com

20.1 X 13.3 cm

한국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27면 수도권



개통 앞둔 신분당선 연장선

신분당선 연장선(광교~정자)의 시승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이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광교(경기대)역에서 열차에 오르고 있다. 이날 왕복 한차례 시승행사를 마친 신분당선 연장선은 최종 점검을 거쳐 30일 오전 5시30분 정식 운행을 시작한다. 수원=연합뉴스

21.2 X 9.8 cm

한국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27면 수도권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는 人災" 시공업자·행사 주최자 실형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27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 시공업자와 행사 주최사 관계자 등 5명이 법정 구속됐다. 부실공사 등이 빚어낸 '인재(人災)'라고 판단한 재판부가 엄단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강동원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환풍구 시공 업체 관계자 정모(50)씨와 행사 주최·주관사인 이데일리TV 총괄본부장 문모(51)씨 등 5명에게 금고 1~2년,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도급 업체 대표 김모(49)씨 등 4명에 대해 금고 10월~1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시공사 법인 3곳에 대해선 각 벌금 200만~1,000만원이 내려졌다. 반면 구속 기소된 행사업체 대표 이모(42)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도면대로 시공하고, 안전관리 조치만 제대로 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대형 인재"라며 "안전불감증에서 비롯한 사고가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일부 피고인은 공사 자료를 조직적으로 파기·삭제하는 등 수사를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행사대행업체 대표에 대해선 행사 주최자와 행사진행에 필요한 장비항목으로 국한해 계약을 체결, 안전관리 책임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014년 10월17일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에서 환풍구 철제 덮개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환풍구 위에서 공연을 보던 시민 27명이 18.9m 아래로 추락, 1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검찰은 정씨 등 관련자 13명(법인 3곳 포함)을 기소했다.

13.6 X 10.0 cm

한국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27면 수도권

잘나가는 경기도 개발 장미… 외국 품종보다 비싸게 팔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자체 개발한 장미가 외국 품종보다 비싸게 팔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경기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 상반기까지 양재동 화훼공판장에서 거래된 장미 173품종 가운데 경기도 개발품종인 '레드크라운'의 경매시세는 1속(10송이)당 1만5,500원으로 외국품종인 '아쿠아'의 1만1,780원에 비해 24% 높았다.

또 '레드포켓'과 '스위트스킨' 역시 아쿠아 품종보다 9.4%(13,200원) 높은 가격으로 거래됐으며 '핑크하트'와 '피치밸리'는 비슷한 수준의 가격대를 형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레드크라운은 고급스러운 빨간색으로 꽃이 크고 모양이 좋으며, 스위트스킨은 대형에다 두 가지 색이어서 인기가 좋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재동 화훼공판장에서 거래되는 경기도 장미는 모두 9개 품종이다.

13.6 X 6.4 cm

세계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12면 사회

'판교 환풍구 사고' 시공업자 2명 징역형

법원 "도면대로 시공 안 해 참사"
행사 주최측 관계자 3명 금고형
구속기소 행사업체 대표는 무죄

성남=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27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 시공업자와 행사 주최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강동원 판사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환풍구 시공 하도급 업체 대표 김모(50)씨에게 징역 1년을, 재하도급 업체 대표 김모(48)씨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시공 원청업체 현장소장 김모(49)씨에게는 금고 2년6월에 벌금 200만원을, 원청업체 차장 정모(49)씨에게는 금고 2년에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사고 당시 행사를 주최한 이데일리TV 총괄본부장 문모(50)씨 등 주최 측 관계자 3명에게는 각각 금고 1년 및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시공사 법인 3곳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1000만원이 내려졌다. 반면, 구속기소된 행사업체 대표 이모(42)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시공 관계자들이 원래 감리 승인받은 상세 시공 도면대로만 시공했더라면, 그리고 행사 개최 측이 안전관리 조치만 제대로 했다면 끔찍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대형 인재 사고"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강 판사는 이어 "일부 피고인은 신속한 사고 원인의 규명이 필요함에도 대책회의를 열어 공사에 관한 자료 등을 조직적으로 파기·삭제하고, 사실관계 일체를 부인하거나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를 어렵게 했고, 책임을 다른 피고인에게 전가하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다만 행사대행업체 대표에 대해서는 "행사 주최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안전관리 항목은 빼고 행사진행에 필요한 장비항목에 국한해 계약을 체결했다"며 안전관리 책임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014년 10월 17일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에서 환풍구 철제 덮개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환풍구 위에서 공연을 보던 시민 27명이 18.9m 아래로 추락, 1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11.4 X 16.0 cm

세계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13면 사회

서울·전남교육청 "누리예산 일부 편성"

'정부 예비비 지원' 전제로 검토
보육대란 해결 여전히 미지수
교육청 7곳만 추경 계획 제출
교육부, 대응 고심… 충돌 예상

이정우·김예진 기자 woolee@segye.com

서울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12일까지 누리과정 예산 관련 추경 편성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7곳만 응해 교육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정부가 누리과정 우회 지원을 위해 편성한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다는 전제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받게 될 목적예비비는 전체 3000억원 중 16.5%인 495억원이다. 올해 서울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모두 3807억원이며, 495억원(13%)은 어린이집 보육료 약 1.5개월분을 우선 막을 수 있는 금액이다.

전남도교육청 역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833억원 중 목적예비비 228억원을 지급받으면 3개월분을 우선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목적예비비는 애초 찜통교실과 노후 화장실 등 열악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예산이지만,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이를 누리과정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일부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한 것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기존 방침에서 한발 물러난 것으로, 보육대란 위기에 대한 부담 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비비는 정부가 부담하는 금액이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교육청의 입장이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분도 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방침은 예비비가 내려온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약 열흘 앞으로 다가온 보육대란을 막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교육부도 목적예비비 투입 시점을 기재부와 아직 협의 중이다. 편성가능 액수도 어린이집 1.5개월분에 불과하다. 야당 의원이 다수인 시의회 통과 가능성도 낮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우선 1차 추경 예산 계획으로 1.5개월분을 잡은 것이지만 의회가 거부할 수 있어 확답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가 이날까지 제출하라고 각 교육청에 요구한 누리과정 추경 예산 편성 계획은 인천, 대전, 울산, 전북, 전남, 경북 등 7곳만 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들 대부분은 제출하지 않을 방침이고 교육부도 대응책을 고심 중이다. 또 한번 충돌이 예상된다.

대전과 울산, 경북은 추경을 통해 전액 편성할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와 전북은 추경에서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계획서를 제출했다. 인천 역시 추경 편성 계획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도비로 지원하겠다던 경기도는 이날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 910억원을 반영한 수정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도교육청과 도의회가 반발해 13일 본회의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해법 두고 평행선 달리는 교육부VS교육청

교육부		교육청
"미편성 교육청 대법원 제소"	누리과정 예산편성	"맞고소 하겠다"
"미편성 교육청 예산안 직접 검사해보니 1조5000억원 남아"	예산편성 여력있나	"사실관계 왜곡으로 국민 호도"
무응답	예산편성 해법 찾자	"10일까지 국회 토론회 열어 해법 마련하자"
무응답	5자 긴급회의 열어 해법찾자	"12일까지 5자 긴급회의 열어 해법 마련하자"
"추경안 제출하라"	추경안 편성	12일 현재 17곳 중 7곳 제출

22.9 X 16.0 cm

세계일보

서울 청년수당 헌법재판소 심판 받는다

2016년 01월 13일 (수)
14면 전국

복지부, 위법소송 제기 선언 따라
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침 밝혀
시의회는 예산안 의결 재의 않기로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비 지급 정책을 놓고 이어진 복지부와의 갈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기로 했다.

서울시는 12일 청년수당 도입과 관련한 법적 논란에 대해 브리핑을 열고 "사회보장기본법상의 협의·조정 결과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도록 규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대해 25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복지부가 청년수당 도입을 미리 협의하지 않은 서울시의 행동이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예산안의 위법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고, 예산안 집행정지 결정도 신청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한 대응이다.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한 지방자치권을 중앙에서 사실상 통제하는 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만큼 사법적 판단을 받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는 지자체가 복지부와 협의하지 않은 사회보장 사업을 집행할 경우 교부금 지급에 있어 페널티를 부과하도록 한 시행령으로 정부는 이를 근거로 새로운 복지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 서울시 등의 지자체를 압박했다.

복지부가 청년수당 예산안 의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6일 복지부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응답이 없어 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한 박원순 시장이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인 가칭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를 국무조정실 등에 제안했으나 중앙정부에서 답변이 없어 일단 중앙정부를 제외하고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전 기획관은 "청년의 절박한 현실을 고려할 때 조속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단 원로그룹, 청년계, 복지계와 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도출할 것"고 말했다.

그러나 사회보장기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복지부와의 협의는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전하며 "이런 노력에도 복지부가 대법원에 제소해 연내 사업 시행이 불가능해진다면 이는 서울시와 청년의 절박한 노력을 무산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성명을 내고 청년배당과 무상교복사업, 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 등 이른바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에 대한 대법원 제소 방침을 포기하라고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촉구했다. 3대 무상복지사업 예산안을 재의하라는 요구를 성남시가 거부하자 경기도가 조만간 성남시를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한 데 대한 대응이다.

23.1 X 10.4 cm

서울신문

법원 "판교 환풍구 사고 원인은 부실 시공"… 시공사 대표 실형

2016년 01월 13일 (수)
09면 사회

27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는 부실 시공과 행사 주최 측의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인재였음이 드러났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강동원 판사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환풍구 시공 하도급 업체 대표 김모(50)씨에게 징역 1년, 재하도급 업체 대표 김모(4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시공 원청업체 현장소장 김모(49)씨에겐 금고 2년 6개월에 벌금 200만원, 원청업체 차장 정모(49)씨에겐 금고 2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사고 당시 행사를 주최한 이데일리TV 총괄본부장 문모(50)씨 등 주최 측 관계자 3명에겐 각각 금고 1년 및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또 시공사 법인 3곳에 대해선 벌금 200만~1000만원이 내려졌다. 반면 구속 기소된 행사업체 대표 이모(42)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시공 관계자들이 원래 감리 승인받은 상세 시공 도면대로만 시공했더라면, 그리고 행사 개최 측이 안전 관리 조치만 제대로 했다면 끔찍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대형 인재"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과 같이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한 사고가 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타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직결되는 건물의 건축이나 대규모의 인원이 동원되는 행사를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전문성과 자격, 지식에 부합하는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밝혔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16.7 X 8.0 cm

서울신문
2016년 01월 13일 (수)
12면 전국

남경필 "여야 대표 만나 누리과정 풀자"

예산 배분에 정치적 타협 촉구
경기 '두 달분 지원' 수정예산안
도의회 오늘 상정… 심의 착수

남경필(사진) 경기지사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12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및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을 전격 제안했다.

남 지사는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엉킨 실타래 같은 이 문제를 결국 정치권에서 풀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은 한쪽(교육부)은 충분히 줬다는 것이고 다른 한쪽(교육청)은 덜 받았다고 항변하는 형국이다. 정부 측도 1년치를 다 준 것은 아니더라도 잘 운영하면 그것만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남 지사는 "셈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근본적인 차이는 없는데도 양쪽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제 양당 대표가 만나 머리를 맞대고 양쪽을 중재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역할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 지지율이 올라간 반면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하락한 것은 양당이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이라고 쓴소리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 910억원을 담은 수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남 지사가 1~2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도비로 지원한 뒤 2개월 내에 정부가 해법을 마련하지 않으면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도가 책임지겠다고 밝힌 데 따랐다.

경기도의회는 13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올해 본예산안을 심의하기로 해 수정예산안도 자동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지방세 수입을 늘려 잡아 올해 본예산안보다 2000억원 많은 19조 8055억원 규모로 수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지방세 수입은 도교육청전출금, 시군조정교부금, 시군징수보조금 등으로 나눠 쓰게 돼 있어 도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2000억원 가운데 910억원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11.0 X 13.9 cm

매일경제

2016년 01월 13일 (수)
28면 경제

최경환·박원순·최태원…한류 알린다

전경련 '한국의 밤' 21일 개최

올해 다보스포럼에 우리나라에서도 정계·재계·학계·언론계 인사가 대거 참여한다.

재계에선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최태원 SK 회장, 최창원 SK가스 부회장 등 SK 사장단,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와 한화 사장단,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 등이 참석한다.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참가하며,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 등도 참가한다. 언론계에서는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윤석민 SBS 부회장, 방석호 아리랑TV 사장 등이 참석한다. 학계에서는 강성모 KAIST 총장, 이상엽·오준호 교수 등 KAIST 교수단 등이 이곳을 찾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다보스포럼 행사 기간 중인 21일 모로사니 슈바이처호프 호텔에서 '2016 한국의 밤'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행사에 60개국 정계·재계·학계·언론계 리더 6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올해로 여덟 번째로 열리는 이번 '한국의 밤' 행사에는 국내 참석자 외에 김용 세계은행 총재, 휴 그랜트 몬산토 회장, 리처드 노드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 공동 대표, 오쿠 마사유키 스미토모미쓰이파이낸셜그룹 회장, 사토 야스히로 미즈호파이낸셜그룹 최고경영자(CEO) 등 글로벌 정·재계 리더 등이 모일 예정이다.

2014년 창조경제, 2015년 통일한국에 이어 올해에는 문화융성을 주제로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 문화 산업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싸이, 투애니원(2NE1) 등 한류 가수의 공연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K팝 홀로그램 콘서트가 열린다.

이번 포럼에는 △단독 세션 구성(KAIST, 아리랑TV) △패널 참여(남경필 지사, 박원순 시장,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 △재난구조로봇 휴보 시연(KAIST)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박용범 기자

23.9 X 6.7 cm

매일경제
2016년 01월 13일 (수)
29면 사회

"보육대란 막자" 지자체 누리예산 편성 확산

경기도·수원 이어 평택·영월·강릉도…전남교육청 "조건부 편성"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으로 '보육대란' 현실화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에 이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12일 경기도 평택시, 강원 영월군과 강릉시 등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6개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02억원을 추경으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원도에서는 영월군과 강릉시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영월군은 11억원을, 강릉시는 100억원을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수원시는 이달 중순까지 경기도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올해 시 예산에 편성된 누리과정 예산 15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10일 1~2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 예산 900억원을 도비로 지원한 뒤 정부에서 2개월 안에도 누리과정 해법을 마련하지 않으면 올해 전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도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책임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경기도는 누리과정 2개월분 예산을 편성한 수정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을 전제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가 국고 예비비 3000억원을 풀어준다면 누리과정 예산 3개월분을 책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날까지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해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 가운데 상당수 교육청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홍구·강봉진 기자

20.4 X 7.4 cm

한국경제
2016년 01월 13일 (수)
29면 사회

"정부 예비비 지원 전제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할 것"

서울·전남 등 일부 교육청

서울과 전남 등 일부 교육청이 정부의 목적예비비 지원을 전제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일부 편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누리과정 우회지원용으로 책정한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정부가 바로 집행하는 것을 전제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5개월분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전남교육청 역시 예비비를 전제로 어린이집 누리예산 3개월분을 책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의 추경예산안 제출 여부와 누리예산 편성 여부 등을 살펴본 뒤 예비비 집행 신청을 기획재정부에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1년치 예산을 다 짜는 것을 전제로 예비비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어린이집 누리예산 2개월분 910억원을 담은 수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남경필 지사가 보육대란이 해결되지 않으면 도비로 책임지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경기 수원과 평택, 강원 영월과 강릉 등 기초지방자치단체들도 자체 예산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5.7 X 16.3 cm

머니투데이
2016년 01월 13일 (수)
23면 사회

복지부 vs 서울시 '청년수당' 갈등… 결국 법정다툼으로

복지부 "이달 18일까지 관련 법 위반으로 대법 제소"
서울시 '지방교부세법'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맞대응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과 관련, 결국 법적 다툼에 휩싸인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복지사업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법의 해석에 기대게 된 것이다. 경기 성남시 역시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늦어도 이달 18일까지 서울시를 대법원에 제소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이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추진을 금지하는 집행정지결정도 신청한다.

서울시 역시 반격에 나섰다. 서울시는 오는 25일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복지제도를 만들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도록 규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복지부·서울시 '복지사업 이견'=쟁점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29세 미취업자에게 2~6개월 동안 월 50만원의 활동보조비를 지원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논란의 시작은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사회보장제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였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려면 복지부 장관과 협의토록 규정한다. 법제처는 협의의 의미를 사실상 승인으로 본다.

하지만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사회보장제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소득을 보전해주는 급여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의 대상도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가 발끈한 것도 이 때문이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복지부와 서울시의 공방이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도 개정됐다. 올해 1월부터 사회보장기본법을 어긴 지자체에 지방교부세를 감액한다는 내용이었다. 법의 해석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자 중앙정부가 압박 카드를 꺼낸 것이다.

특히 서울시가 지난해 말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자 복지부는 예산안 재의요청까지 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복지부 "대법원 제소" vs 서울시 "권한쟁의심판"=하지만 서울시는 재의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의요구를 받고 20일 동안 재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주무부처 장관 등은 해당 지자체를 대법원에 제소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가 재의요구를 받고 20일 지난 시점이 지난 11일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12일부터 대법원 제소 등이 가능해졌다. 신청 기간은 1주일간이다. 늦어도 오는 18일까지는 제소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예정대로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결정 신청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급적 이번주 안에 신청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이 언제 나올지는 미지수다. 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시는 '후퇴와 전진'을 병행 중이다. 서울시는 이날 복지부에 청년활동지원사업의 협의요청서를 제출했다.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사회보장제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으로 정식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복지부의 재의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복지부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예산편성시 사전절차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한 권한쟁의심판도 예고했다. 결국 법리 다툼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청년배당 등 무상복지에 나서고 있는 성남시도 갈등을 빚고 있긴 마찬가지다. 성남시에 대한 재의 및 제소 권한은 경기도가 갖고 있다.

세종=정현수·남형도 기자 gustn99@

29.4 X 12.8 cm

서울경제
2016년 01월 13일 (수)
28면 사회

결국 법정 가는 '청년수당'

복지부 "15일 대법원 제소"에 서울시는 '권한쟁의 심판청구'로 맞불

정부와 서울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청년수당' 문제가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도입을 미리 협의하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며 오는 15일 대법원에 예산안의 위법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고 예산안 집행정지 결정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예산안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들이면 올 하반기로 예정돼있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맞서기로 했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한 지방자치권을 중앙에서 사실상 통제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25일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 간 갈등은 결국 법정에서 결론이 나게 됐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청년수당이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을 가진 정책이 아니라며 복지부와 협의 없이 예산안을 편성했고 서울시의회는 예산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복지부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칠 경우 주무부처 장관이 시·도지사를 통해 해당 지자체 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서울시에 재의 요구를 했지만 서울시는 재의 시한(예산안 통과 후 20일 이내)인 지난 10일까지 시의회에 재의를 요청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 결과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게 한 시행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청년수당은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나 졸업 예정(유예)자 가운데 중위 소득 60% 이하인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서울 거주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간 월평균 50만원을 청년활동지원비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서울시의 이 같은 정책에 대해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와 함께 복지부 재의요구를 받은 성남시도 재의 시한인 10일까지 시의회에 재의를 요청하지 않았다. 성남시는 복지부의 반대에도 올해 청년배당제를 도입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co.kr

16.6 X 15.9 cm

서울경제
2016년 01월 13일 (수)
28면 사회

남경필 지사 "정치권이 누리과정 갈등 풀어야"

남경필(사진) 경기도지사가 12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논란과 관련, "지금은 여야 지도부 등 정치권이 (누리예산)을 풀어야 할 때"라며 정치권의 역할을 강조했다. 남 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의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이제는 국회와 정치권이 회의체를 구성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당내 누리과정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예산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새누리당도 대책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 지사는 "문재인 더민주 대표와 만나고 싶다"고 문 대표와의 만남을 제안



했다. 그는 이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회부총리, 경제부총리와 차례로 만나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최근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더민주와 새누리당 지지율이 하락곡선을 그리는 것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며 "여야가 누리과정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줘야 국민의 지지율을 늘릴 수 있다"고 여야의 협력 당위성을 강조했다.

남 지사는 13일로 예정된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안이 통과될 가능성에 대해 "기대는 하지만 도의회가 할 일"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전남교육청과 같은 해법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교육청은 이날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 예비비 3,000억원이 풀린다는 전제 아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교육협력사업에 2개월분 누리과정 예산(910억원)을 담은 2016년도 수정예산안을 편성해 이날 도의회에 제출했으며 도의회는 13일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co.kr

16.6 X 9.8 cm

서울경제
2016년 01월 13일 (수)
31면 전국

외국품종보다 뛰어난 '경기도 장미'

외산 아쿠아보다 24%나 비싸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장미 품종이 꽃시장에서 외국품종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등 시장성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기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양재동 화훼공판장에서 거래된 장미 173품종가운데 경기도 개발품종인 레드크라운의 경매시세는 1속당 1만5,500원으로 외국품종인 아쿠아 품종 1만1,780원 대비 24% 높게 거래됐다. 경기도개발 품종인 '레드포켓'과 '스위트스킨' 역시 아쿠아 품종보다 9.4%(13,200원)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핑크하트'와 '피치밸리'는 비슷한 수준의 가격대를 형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재동 화훼공판장에서 거래되는 경기도 장미는 모두 9개 품종이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co.kr

12.3 X 6.2 cm

서울경제
2016년 01월 13일 (수)
31면 전국

수원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기능성 자재' 의무화

수원시는 새집증후군 해결을 위해 기능성 자재사용을 100%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을 강화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원시는 전국 최초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시 흡착·흡방습·항균·항곰팡이 등 4가지 기능성 자재를 100%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수원시는 기능성 자재 의무사용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조건을 부여하고 사업계획승인 시 적용 여부를 확인 후 승인하고, 사용검사 시에도 시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윤종열기자

9.3 X 5.3 cm

서울경제

2016년 01월 13일 (수)
31면 전국

경기도 '해외마케팅 대행사업' 참가사 모집

경기도는 해외 수출 유망 국가에 설치한 해외 경기통상사무소(GBC)에서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을 지원하는 '해외마케팅대행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자력으로 해외시장 개척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GBC의 현지 전문가들이 바이어 발굴부터 계약까지 기업을 대신해 지사 역할을 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 지역은 GBC가 설치된 뭄바이, 모스크바, 쿠알라룸푸르, LA, 상해, 심양 등 5개국 6개소이며, 지역별로 20개사를 선정해 총 120개사를 지원한다. 경기 도내에 중소제조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윤종열기자

9.3 X 5.9 cm

서울경제

2016년 01월 13일 (수)
31면 전국

22일까지 경기도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 공모

경기도는 오는 22일까지 도내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2016년 경기도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모집분야는 환경보전 5개, 환경교육 6개 등 모두 11개 분야이며, 도내에 주 사무소를 두고 최근 1년 이내에 환경교육 및 보전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이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지원 총액은 2억5,000만원이며, 1개 단체 당 최대 2,500만원을 지원한다.

/윤종열기자

9.4 X 4.3 cm

서울경제

2016년 01월 13일 (수)
31면 전국

복지부·경기도·고양시 등 '병문안 문화개선' 맞손

경기도와 보건복지부,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해 손을 잡았다. 양복완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김진흥 고양시 제1부시장, 강중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은 12일 고양시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문안 문화 개선 실천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경기도는 도내 병원들의 참여를 지원·독려하고, 도민 대상 홍보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윤종열기자

9.4 X 5.3 cm

서울경제
2016년 01월 13일 (수)
36면 인물

"K컬처 알린다"…다보스 향하는 재계 총수들

최태원·김영훈 회장 등 참석
전경련 '코리아 나이트' 개최

재계 총수들이 '4차 산업혁명의 이해'를 주제로 20일부터 열리는 2016년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다.

최태원(사진) SK그룹 회장은 3년 만에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성장, 에너지 등의 분야를 위주로 전세계의 유력 기업인·학자들과 교류할 계획이다.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는 남성우 한화큐셀 대표 등과 동행, 6년째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다. 김 전무는 특히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탄소감축(Decarbonizing) 경제' 세션에 패널로 참석해 전세계적인 탄소 감축 정책에 대한 기업의 대응과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그는 지난해 다보스 포럼에서도 각종 세션에 참석하고 외신과 인터뷰하며 '태양광 전도사'를 자처한 바 있다.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은 국내 기업인 중 가장 오랫동안 다보스 포럼을 찾은 이다. 그는 올해 13번째로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다. 누이인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과 동행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K-컬처'를 주제로 코리아 나이트를 개최, 세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 알리기에 나선다. 이날 코리아나이트에서는 싸이, 투애니원(2NE1) 등 한류 가수의 공연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킨 K팝 홀로그램 콘서트, 라인 프렌즈와 같은 한국의 모바일 캐릭터, 한식 및 전통주 등 한국의 문화와 음식이 소개된다. 이날 코리아 나이트 행사에는 김용 세계은행 총재, 휴 그랜트 몬산토 회장, 리처드 노드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 공동 대표, 오쿠 마사유키 스미토모미쓰이파이낸셜그룹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다보스포럼은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를 주제로 개최된다. 18세기 이후 증기기관의 발명(1차), 전기를 활용한 대량생산(2차), 정보기술 혁명(3차) 등 세 차례에 걸친 산업혁명에 이어 디지털·바이오 등 기술의 융합을 기반으로 진행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전세계 석학 및 정·재계 지도자들이 강연에 나선다.

이번 포럼에는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참석하며 남경필 도지사, 박원순 시장도 참여한다. 또 KAIST의 오준호 교수가 재난구조로봇 휴보 시연에도 나선다.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17.7 X 11.8 cm

파이낸셜 뉴스
2016년 01월 13일 (수)
05면 종합

누리과정 시·군 예산 투입 자치단체장들간 갈등 확산

재정여력 따라 양극화 우려

【수원=장충식 기자】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자체 예산을 투입하려는 기초자치단체들이 늘어나면서 또 다른 갈등이 우려된다. 일부 재정 여력이 있는 지자체들이 앞다퉈 자체 예산 투입을 선언하는 과정에서 양극화 우려가 제기되고 예산 지원에 반대하는 단체장들 간 갈등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12일 경기도 일선 시·군에 따르면 수원시는 가장 먼저 어린이집 보육비 159억원(1만1339명 4.5개월분) 편성을 발표했다. 수원시는 이달 중순까지 교육청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보육대란이 현실화되면 시 자체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용인시도 예비비 투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이어 안성, 안산, 평택, 안양, 여주 등 역시 자체 예산 투입을 발표하고 나섰다. 안산시는 9400여명을 대상으로 한 누리과정 예산 260억원을 반영할 계획이며, 안성시는 올해 예산안에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93억4700만원을 편성했다. 평택시는 시의회와 협의해 우선 누리과정 3개월 운영 예산 51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안양시는 3개월분 60억원을 긴급 예산으로 투입할 예정이고, 여주시도 6개월분인 25억원을 시비로 긴급 편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자체 예산 투입을 검토하거나 추진하는 지자체는 7곳에 불과하고 아직 더 많은 지자체는 보육대란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역시 910억원에 달하는 2개월분 누리과정 예산을 자체 지원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으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연일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경기도의 누리과정 예산 지원은 자치와 분권의 훼손이며 혈세 낭비이자 포퓰리즘"이라고, 김윤식 시흥시장도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을 도비로 먼저 편성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국가의 사무인 '보편적 복지'를 지방정부가 떠맡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결국 지방자치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등 단체장들 간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13일 예정된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보육대란과 함께 기초자치단체 간 양극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가 보육대란을 우려해 자체 예산 투입을 선언하고 있지만 모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면서 "어떤 방법이 현명한 선택인지는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10.0 X 19.5 cm

아주경제

2016년 01월 13일 (수)
22면 지역

안산, 市 승격 30주년

'사람 중심 안산' 더 빛나는 30년 향해 힘찬 도약

강소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대부도 등 관광 인프라 구축
숲 복원 통한 도시재생 추진



제종길 안산시장이 '숲의 도시 비전 선포식'에서 국립수목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협약서를 내보이고 있다. [사진제공=안산시]

경기도 안산시가 올해 시 승격 30주년을 맞아 더욱 빛나는 30년을 향해 힘차게 도약한다.

지난 30년 전 반월출장소에서 인구 12만의 작은 도시로 출발한 안산은 30년간 수도권 최대의 산업단지인 안산스마트 허브를 기반으로 비약적 발전을 거듭, 인구 76만명의 대도시로 성장했다.

민선6기 출범 이후에는 안산스마트 허브 재생·혁신 사업, 15대 강소기업 육성사업 등 기존의 산업자산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대부도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해양관광지구 조성, 숲을 통한 도시재생 사업인 '숲의 도시 조성' 등 안산만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세월호 여파, 전국을 강타한 메르스 사태 등 많은 악재 속에서도 지역경제를 청신호로 전환시키고, 방아머리 마리나 항만 사업,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 국민 해양 안전체험관 유치 등 굵직굵직한 대형 사업들을 유치하는 등 새로운 희망을 쏘아 올리기도 했다.

시는 올해 지난 3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높은 곳을 향해 힘차게 도약한다는 2016년의 포부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세계적인 강소기업 육성과 좋은 일자리 창출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한 강소기업 육성과 좋은 일자리 창출은 민선6기 제종길호의 주요 목표다.

취임 초부터 안산사이언스 밸리로 상징되는 산·학·연 자원을 활용, 15대 안산형 강소기업 육성 사업, 관내 대학교 학생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안산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각종 취업 박람회 개최, '1사1+청년'사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등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1만5000여명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하는 등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올해부터는 이러한 추세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밀도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안산시 산업경제의 심장인 안산스마트허브의 재생·혁신 사업에 보다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입주기업 설명회를 통해 추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팩토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 안산 스마트 허브를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산업단지로 변모시킬 계획이다.

◆대부도를 중심으로 한 융복합 관광도시 조성

흔히 안산을 산업도시로 알고 있지만, 안산이야말로 세계적인 해양생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우선 100km에 이르는 경기도 최대의 해안선과 풍부한 해양자원을 바탕으로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생태관광지로 선정된 대부도,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생명의 호수 시화호가 있다.

여기에 서해안 황금벨트의 심장과도 같은 위치와 더불어 수도권 2000만을 품에 안을 수 있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더하면 세계 어느 곳 못지않은 관광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셈이다.

특히 방아머리 마리나 항만 사업은 국내 유일의 워터프론트형 마리나로서 지역산업을 연계하여 수도권 최고의 문화관광지구로 조성, 향후 대부도 관광의 중심축으로 삼을 예정이다.

◆도시재생 '숲'에서 답 찾아

쿠리치바, 빌바오 등은 낙후된 산업도시에서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거듭난 대표적인 도시재생 모범도시들이다. 두 도시의 공통점은 도시재생의 기획단계에서부터 발전방향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가지고,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 도시재생을 추진했다는 점이다.

새해부터는 숲의 도시 조성 방향을 자연공존의 숲, 공동체의 숲, 치유의 숲, 기후변화 대응 숲 등 4가지로 정하여 각 테마별 맞춤형 사업들을 진행하고, 사리포구 복원 및 자전거 페리호 사업과 보호가치가 높은 생태지역 조사관리 사업을 추진해 숲을 중심으로 생태계가 살아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2016년에도 사람이 중심이다!

민선6기 시정 비전은 '사람중심 안산특별시'이다. 세월호 참사의 교훈이 담겨 있기도 한 안산시 시정 비전은 생명존중 안전도시, 시민중심의 시정운영 등 사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지난 1년6개월간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얼마 전 공개된 '2015년 국민안전처 도시안전 평가'에 따르면 안산시는 화재 및 안전사고 분야에서 1등급, 교통안전 분야에서 2등급을 받는 등 생활안전분야에서 최고 수준 평가를 받았다. 또 전국을 강타한 메르스 사태 속에서도 안산은 사태 초기부터 전 직원 비상체제를 구축해 철저한 예방활동을 펼친 결과, 안산을 단 1명의 확진자도 없는 메르스 청정 도시로 지켜내기도 했다.

박재천 기자 pjc0203@

아주경제
2016년 01월 13일 (수)
22면 지역

고양시, 탄소포인트 가입자에 2652만원 인센티브

경기 고양시(시장 최성)는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인 탄소포인트제 가입자에게 2652만원에 상당하는 2015년도 상반기 분 인센티브를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전기 및 수도 사용 절감량을 온실가스 감축률로 환산해 포인트를 산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으로, 참여 시점부터 과거 2년간 기준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한 가구에 전기의 경우 5000~1만원, 수도의 경우 750~1500원을 반기별로 지급한다.

고양시는 현재 1만3180가구가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1873t CO_2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하거나 시청 및 각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양시청 환경보호과(031-8075-2642)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복 기자 bok7000@
22.3 X 4.0 cm

아주경제
2016년 01월 13일 (수)
22면 지역

황해청, 평택 포승·현덕지구 투자유치 본격화

투자 가능성 높은 기업에 홍보
현덕지구 정주환경 개선 추진

경기도 황해자유구역청(청장 전태헌)은 올해 평택BIX(포승지구)의 착공과 투자협약 체결, 현덕지구 실시계획 승인 및 보상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평택BIX에 관심을 가진 국내외 100여 타깃 기업들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이달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평택BIX에는 지난해 말 4개 국내외 물류기업이 900억원을 투자하는 협약을 경기도와 맺은 바 있다.

또한 국내 최초로 전액 중국자본에 의해 개발되고 있는 현덕지구를 대상으로 기존의 박람회나 설명회 위주의 백화점식 투자유치 활동보다는 투자 가능성이 높은 85개 국내외 기업을 상대로 전략적인 투자유치 홍보를 전개할 방침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평택BIX(포승지구, 63만평)와 현덕지구(70만평)로 구성돼 있다. 평택BIX는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전액 투자해 화학·기계·자동차·전기전자 등 첨단산업과 물류기지로 개발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반공사 착공에 들어간 평택BIX는 올해 본격적인 부지 조성을 통해 내년 하반기쯤이면 투자기업들이 공장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덕지구는 평택시 장수리·권관리 일원으로, 시행자는 대한민국중국성개발(중국역근그룹 50%, 한국 개인 30%, 중국 개인 20%)이며, 사업비 7500억원을 투입해 2018년까지 상업·관광·의료·주거·교육 등 글로벌 정주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실시계획 승인이 신청돼 환경영향평가 등 심사 막바지 단계에 있다.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1/4분기 내에 실시계획 승인이 나올 전망인데, 실시계획 승인 이후에는 사유지 토지보상이 진행된다.

김문기 기자 kmg1007@
11.1 X 12.3 cm

전자신문
2016년 01월 13일 (수)
18면 산업/무역

꽉 잠긴 전기차 시장 조례 제정으로 푼다



성남시, 주민동의 없이 충전기 구축
내달 차량 100여대 민간보급 나서
환경부 보조금 등 1700만원 지원

성남시가 인천·경기 포함 수도권에선 처음으로 전기차 민간 보급을 실시한다. 시 자체 조례 제정에 따라 주민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개인소유 충전기를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서울 등 지자체 보급이 부진한 가운데 성남시가 관련 조례로 인해 목표물량을 다 소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성남시는 공공·관용차 12대를 포함한 100대 분량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을 다음 달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환경부 보조금(1200만원)과 지자체 지원금(500만원)을 합쳐 전기차 구매 시 총 1700만원을 지원한다. 또 개별소비세(최대 200만원), 교육세(최대 60만원) 취득세(최대 140만원)의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시가 새해 지원하는 차량은 승용 전기차 95대와 화물용 전기차 5대다.

여기에 15분 전후 충전이 가능한 급속충전소(50㎾h급) 7곳도 마련한다. 시 차원에서 전기차 이용환경을 사전에 조성한다는 취지로, 기존 충전인프라에 합치면 총 10개 급속충전인프라가 들어서게 된다.

성남시는 공공주택 전기차 이용자들의 충전기 구축 부담을 덜기 위해 이달 중 전기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 제정한다. 주민동의서를 얻지 못해 충전기와 전용 주차면을 확보하지 못한 이용자를 고려한 조치다.

이에 전기차 구매자가 원하면 주거지 인근 공용주차장이나 시 부설주차장에 충전인프라 설치를 지원한다. 성남시 민간 보급사업은 다음 달 20일부터 3월 초까지 민간 공모를 실시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전기차를 사고 싶어도 주민동의를 구하지 못해 중도 포기하는 시민을 위해 이달 중 전기차 지원조례 제정해, 공용주차장 등에 개인 혹은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충전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며 "경기·수도권지역 최초 민간 보급 사업을 실시하는 만큼 전기차 이용에 따른 이미지 재고와 보급 확대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

13.8 X 16.8 cm

경인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01A면 종합



신분당선 연장선 복선전철 시승 오는 30일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 개통을 앞두고 12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경기대)역에서 열린 신분당선 연장선 복선 전철 특별시승행사에서 시민들이 열차에 오르고 있다. 신분당선 연장선은 10㎞ 이내 기본요금이 2천250원(1회용 교통카드 기준)으로 결정됐다.

/염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5.2 X 12.9 cm

경인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01A면 종합

공직 사퇴기한 D-1 '국회 가는 길' 몰려든다

<선거 90일 전:1월 14일>

예비후보 등록 재개된 12일
道 17명 등록 선거전 재점화
강득구 의장·이승철 대표 등
출마의사 도의원들 '잰걸음'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지방의원 등의 사퇴 시한(1월 14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가열되고 있다.

예비후보 등록이 재개된 12일 하루에만 경기지역에서 17명이 등록하면서 이 같은 분위기를 더했다. 국회 입성에 도전하는 경기도의원들의 걸음도 바빠지고 있는 가운데, 선거구 미획정에 따른 '깜깜이' 선거 논란은 여전한 실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4월 13일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지방의원·언론인 등은 선거 90일 전인 14일까지 직을 사퇴해야 한다. 경기도의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득구(안양2) 의장이 안양 만안구에, 새누리당 이승철(수원5) 대표가 수원병(팔달)에 각각 도전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안철수 신당인 국민의당 입당 의사를 밝히며 더민주를 탈당한 윤은숙(성남4) 도의원도 총선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선거구 분구가 예상되는 화성에선 더민주 권칠승(화성3) 도의원이 신설되는 선거구에 도전한다는 계획이고, 같은 당 조광명(화성4) 도의원도 지역구인 동탄신도시가 있는 화성을 출마를 고심 중이다. 김도현(더·군포1) 도의원은 지역구인 군포와 생활권이 비슷한 의왕과천지역 출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1일 선거구가 획정될 때까지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은 물론 지난 1일부터 중단된 신규 등록도 기존 선거구를 토대로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14일 공무원·지방의원들의 '줄사퇴'와 맞물려 한 풀 꺾였던 선거 분위기도 다시 가열되는 모양새다. 경기지역에선 예비후보 등록이 다시 시작된 12일 하루에만 수원갑(장안) 현역 의원인 이찬열 더민주 경기도당 위원장 등 17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예비후보로서의 선거 운동이 가능해지며 이달 초부터 곳곳에서 터져 나온 총선 주자들의 불만도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선거구 공백'에 따른 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도 새누리당 정인봉 서울 종로구 당협위원장이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기간만큼 총선 선거일을 미뤄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총선 연기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5.2 X 14.6 cm

경인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01A면 종합

오늘 임시회도 불투명 누리과정 어디로 가나

道, 수정예산안 의회에 제출
여·야 합의안돼 충돌 가능성
정부도 입장변화 없어 '막막'

'보육대란'부터 막고 나중에 해법을 찾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제안을 도의회 야당·도교육청이 '정부 책임론'을 외치며 정면 거부(**경인일보 1월12일자 1·3면 보도**)하면서 13일 도의회에서의 예산안 확정도 불투명해졌다. 도는 남 지사의 제안대로 12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 2개월분에 해당하는 910억원을 예산안에 다시 담아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여야 간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13일 예정된 임시회 역시 파행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관련기사 3·4면

도는 이날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도교육청 전출금 910억원을 반영한 수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비를 들여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지원토록 한다는 계획이지만, 정작 도비를 받게 될 도교육청이 "근본적 대책이 아니다"는 이유로 이 방안에 부정적인 데다,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날 대표단 회의를 통해 수정예산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방침을 정해 예산안 확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민주 안혜영(수원8) 수석대변인은 "수정예산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대표단의 입장을 정했다.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모두 0원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난달 31일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여야 의원들 간 본회의장 난투극이 13일 재연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어떻게든 누리과정 0원 처리는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선 지난달 말처럼 의장 석을 점거해서라도 더민주의 예산안 강행 처리를 막아야 한다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이승철(수원5) 대표는 "아직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정하진 못했다. 13일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도 차원의 유일한 대책이었던 '도비 충당'이 불발될 처지가 된데다 국회에서 추가 확보된 목적예비비 역시 교육부가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다"고 못박으면서 누리과정 사태는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도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이날까지 추경계획을 요구한 교육부에 "아직 도의회에서 본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추경계획을 세울 수 없다"고 보고했다.

/강기정·조윤영기자 kanggj@kyeongin.com

10.0 X 20.9 cm

경인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01A면 종합

점수가 높아서 탈락?

양성평등채용목표제 허점

간호 공무원 임용시험 남자

필기 커트라인 넘자 미적용

도행정심판 "평등원칙 위배"



'점수가 낮으면 합격, 높으면 불합격?'

수원에 사는 박모(36)씨는 지난해 4월 '제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평택시 간호 8급' 직렬에 지원, 같은해 6월 제1·2차 병합시험(필기시험)에서 91점을 받아 6위로 통과했다. 필기 합격자 7명 중 남성은 혼자였기 때문에 박씨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라 합격을 기대하며 9월 3일 면접시험을 치렀다. 하지만 9월 17일 최종 불합격했다. 합격자 5명은 모두 여성이었다.

'행정자치부 균형인사지침'에 따라 박씨가 필기시험 커트라인인 89.5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면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받아 추가합격 대상이었지만, 자력으로 필기시험을 통과했으니 면접시험에서도 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시 인사위원회의 판단이었다. 지침에는 합격자의 70% 이상이 한 성이면 합격선의 -3점 이상인 다른 성의 응시자 중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최종 선발인원의 30%를 추가합격 처리하게 돼 있다. 박씨의 필기시험 점수가 86.50~89.49점 사이였다면 합격이었지만, 이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탓에 불합격한 것이다.

박씨는 9월 24일 "평택시가 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제도의 실효성을 훼손했다"며 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지침 규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관습에 의존해 피해자를 늘리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박씨의 불합격 취소 청구를 인용했고 지난 8일 박씨에게 재결서가 송부됐다. | 관련기사 3면

이는 지난 2003년부터 14년간 적용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관련 규정 해석을 뒤집는 최초의 사례로, 국가직 및 도내 31개 시·군 등 전국 지방직 채용과정에서 동일사례가 반복돼 와 파장이 예상된다. 합격자 공고가 난 지 180일 이내의 시험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10.5 X 23.1 cm

경인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02면 종합

고양 '한류월드 꿈' 한발짝 성큼

내달 CJ E&M 계약 본궤도
공연장·호텔·테마파크 구상
道-시 관광벨트 조성 윤곽

고양 관광특구의 핵심인 한류월드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경기도 한류월드사업단에 따르면 도는 K-컬처밸리 우선협상대상자인 CJ E&M과 기본협약을 앞두고 있다. 다음 달 말까지 토지계약을 맺으면 10년을 끌어온 한류월드 사업은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CJ E&M은 융복합공연장(2천석), 호텔(300실 미만), 테마파크 등을 계획하고 있다.

K-컬처밸리는 2017년 말 1단계 사업을 준공하는 등 단계별로 개장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중이다.

한류월드 사업은 대화동 99만5천㎡ 땅에 K-컬처밸리와 함께 관광 호텔, 주상복합아파트, EBS 디지털 통합사옥, 디지털방송제작센터(빛마루) 등을 건립하는 내용이다.

관광 호텔을 지을 6개 부지는 모두 매각됐다. 대명레저산업, SM관광호텔, 세계KRT 등이 2017년부터 단계별로 호텔을 완공할 예정이다. 주상복합 M1·2·3 용지는 현대건설·GS건설·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M4 용지는 에이스 산업이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EBS 디지털 통합사옥은 지하 3층, 지상 20층 규모(연면적 6만1천563㎡)로 건설된다. 지난 2014년 착공했고, 2017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다. 빛마루는 지난 2013년 12월 개관됐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상 20층의 빛마루에서 콘텐츠 제작·편집·유통을 지원하고 있다.

도와 고양시는 한류월드 사업이 가속화되는 올해 고양 관광특구 활성화를 '신 한류 문화·관광벨트 구축' 사업을 시행한다. K-필름거리, K-팝거리 등 테마거리 조성사업도 올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김재영·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2 X 10.8 cm

경인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02면 종합

경기신보·道가족여성연구원 '가장 청렴'

경기도 산하기관 중 경기신용보증재단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가장 청렴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26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를 조사한 결과, 직원 50명 이상 기관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직원 50명 미만 기관에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가장 청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청렴도 조사는 남경필 지사의 특별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지난해 6월부터 1만55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각 기관별 부패방지시책에 대한 평가를 종합해 발표했다.

청렴도 상위기관을 살펴보면 정원 50명 이상인 I 유형기관에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8.66점으로 1위에 올랐다. 이어 경기관광공사(8.62점)·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8.45점) 순이다. 반면 경기도의료원은 6.83점으로 최하위로 평가됐다. 50명 미만인 Ⅱ유형기관에서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8.97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8.4점)과경기테크노파크(8.22점) 순으로 청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영어마을은 7.06점을 받아 Ⅱ유형 기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각 기관별 취약분야를 보완하는 부패방지 시책을 추진하고 청렴시책 방문교육·기관별 맞춤형 청렴컨설팅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10.0 X 11.1 cm

경인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02면 종합

연천군 백학산단 분양률 100% 달성

착공 9년만… 지역경제 숨통

연천군 백학일반산업단지가 착공 9년여만에 분양을 완료했다.

지난 2007년 착공한 백학일반산업단지는 백학면 통구리 1067 일원에 43만9천여㎡ 부지로 조성됐다.

경기도시공사와 연천군이 공영개발한 산업단지는 2009년부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3차례 변경하면서 3.3㎡당 평균 62만원에 분양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군은 근로복지관 부지 및 실시계획 변경 미반영분을 제외하고 분양률 100%를 달성했다.

산단의 업체 유형은 화학, 금속, 기계 등 7종으로 입주업체는 총 57개사다. 입주가 완료되면 이곳 산단에는 총 900여명의 근로자들이 종사하게 된다. 접경지인 백학면에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인근 마을의 주민 고용창출 효과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입주업체 중 A화학업체는 연구 개발 등 전문직종을 제외한 생산라인 종사원을 지역주민에게 할애해 20여명이 경제활동을 벌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가슴앓이를 해온 산단 분양이 완료돼 지역경제에 숨통이 트이는 초석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15.1 X 6.2 cm

경인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03A면 종합

커져가는 보육대란 급한 불… '정부 책임론' 불지피는 도교육청

산으로 가는 누리과정 사태 출구없는 다툼

남 지사 제안 등 사실상 불발
도교육청, 교직원에 공문발송
일부 "홍보전 동원하나" 반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도비로 충당하겠다는 남경필 도지사의 계획이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불발된 처지(경인일보 1월12일자 1·3면 보도)가 되자 도의회 여야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지난해 말 추가 확보된 목적예비비로 대신 '급한 불'을 끄는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잔액 편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예비비를 줄 수 없다"는 교육부의 완고한 태도에 다시 출구없는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와중에 도교육청은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 책임론'을 홍보(?)하고 나서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 **'급한 불' 끄기 위한 방안 엇따라 불발** =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급한 대로 2개월분만 도비로 지원하겠다는 남 지사의 계획은 애당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게 중론이다. 애당 오전 회동한 여야 대표는 서로의 입장 차를 확인한 후 대안 격으로 목적예비비 3천억원 중 도교육청이 받을 수 있는 600억원가량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1개월여라도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했지만, 이마저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목적예비비로 지원받는 금액만 누리과정에 투입할 계획이라면 예비비를 지원하기 어렵다"며 "이미 누리과정에 필요한 재원을 모두 교육청에 줬다는 게 교육부의 기본적인 입장으로, 목적예비비는 어디까지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업에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이것을 메우라는 차원에서 추가 확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교직원에게 '정부 책임론' 홍보 나선 도교육청?** = 도교육청 안팎에선 애당 교육청이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발송한 '누리과정 지원의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는 내용의 공문이 적절성 논란에 휩싸였다. 도교육청은 지난 8일 도내 25개 지역교육지원청과 유치원, 초·중등학교 등에 '누리과정비 편성과 관련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 홍보 협조'라는 제목의 공문을 전달했다. 공문에는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요구한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교육감에게 책임지라는 것은 유·초·중등 공교육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교직원이 누리과정 사태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이를 공람하고 직원 조회 등을 활용해 배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공문을 접한 일부 직원들은 도교육청이 누리과정발(發) 공교육 위기를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며 환영했지만 일부 직원들은 "직원들을 홍보전에 동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다소 불쾌감을 드러냈다. 도내 한 초등학교 교장은 "일방향적인 공문 배포 방식보다는 교직원들이 누리과정 문제를 자발적으로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다른 방법론을 신중하게 고민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경기정·조윤영기자

kangp@kyeongin.com

35.7 X 17.2 cm

경인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03A면 종합



유치원총연합회 '누리과정 예산 편성' 목청 12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회 회원들이 누리과정 예산 전액편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4 X 6.7 cm

경인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03A면 종합

필기 결과 양성 포함땐 최종합격자 성비불균형 무시

공무원시험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사각지대'

높은 점수를 받고도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받지 못해 불합격했다는 내용의 행정심판은 꾸준히 청구돼 왔지만 번번이 기각됐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공무원 시험에서 한 성의 합격자가 30% 미만일 때 해당 성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켜 성비를 맞추는 제도다. 군가산점 제도 폐지 후 공무원 시험에서 남성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2003년 '여성채용목표제'를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전환해 시행했다.

하지만 수험생 중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쟁점 규정은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의 '제1·2차 시험에서 어느 한 성을 추가 합격시킨 경우 최종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다. 전국 인사위원회는 이를 반대해석해 제1·2차 시험(필기시험 등) 합격자 중 양성이 모두 포함돼 있으면 제3·4차 시험(면접시험 등)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 경우 필기시험에서 점수를 더 높게 받았다는 이유로 불합격하게 되는 기현상이 발생,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4년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행정직(회계)'과 '제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부천시 보건 9급' 등의 수험생들이 점수가 높아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받지 못해 불합격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인사위원회가 운영지침을 엄격하게 해석한 부분이 있었다. 이번 재결에 따라 문제가 없도록 일부 변경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4 X 7.3 cm

경인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04면 정치

경기도발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치권 대립 격화

여 "엄마·아이들 정치에 끌어들이지 않길"
야 "대통령 공약 사항… 정부가 책임져야"

경기도 예산으로 누리 과정 예산을 편성하려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이른바 '선결후문(先決後問)' 제안을 놓고 여야 정치권이 서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비난하는 등 경기도발(發) 보육대란 논쟁이 중앙 정치권으로 격화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남 지사의 두달 치 경기도 예산 편성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전날(11일) 중앙당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공세를 취하자, 12일 원유철 원내대표가 주재한 원내 대책회의에서 "엄마와 아이를 정치에 끌어들이지 않기를 호소한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더민주는 경기도의회 김현삼 대표·김주성 교육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누리과정대책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갖고 누리과정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으로 정부에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고, 새누리당에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대책회의 구성을 재차 제안했다.

■새누리당=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이 발언권을 얻어 남 지사의 도 예산 편성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측면지원에 나섰다.

권 본부장은 "지난주 남 지사는 보육대란을 피하고자 경기교육청 예산이 아닌, 경기도의 예산 두달 치 909억원 상당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의 심의를 요청했지만,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반대하고 있고, 야당이 다수당인 경기도의회도 반대하고 있다"며 "엄마와 아이를 위한 예산이어떻게 포퓰리즘적인 예산인가"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새누리

"편성 반대는 총선의식 포퓰리즘"

'야당, 선거용 정치공세'로 규정

"남지사와 공조 보육대란 막겠다"

그러면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보육대란을 일으키는 것이 포퓰리즘적인 것이 아니겠나"며 "좌파 교육감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총선을 의식해서 보육대란을 일으키지 말고 남 지사처럼 엄마와 아이를 정치에 끌어 들이지 않는 정책을 수립해 주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권 본부장은 이날 오전 중앙당사에서 당직자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한안 점검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한 야당의 비난전을 총선용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맞대응보다는 교육부와 경기도 등과 긴밀한 대응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하면서 남 지사와 공조해 보육대란 만큼은 막겠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더민주

"정부, 아무런 대책 내놓지 않고

교육청만 겁박… 정쟁대상 아냐"

'긴급대책회의 구성' 與에 제안

■더민주= 이목희 정책위의장·김태년 누리과정 대책특위 위원장·유은혜 의원 등 교문위·기재위 소속 의원과 문재인 대표, 서울시의회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누리과정대책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가졌다. 이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보육대란의 시계가 쉼 없이 가고 있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시도 교육청만 겁박하고 있다"며 "누리과정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히 관계부처와 여·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지만 답이 없다"며 "여·야 정책위의장과 누리과정 담당 의원을 포함한 긴급대책회의 구성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가 발표한 시도 교육청 본예산 점검 결과에 대해서도 여야 공동감증을 제안했다.

아어진 비공개회의에서는 경기도와 서울시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경인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내일(13일) 학부모, 시민단체와 함께 임박한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예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갖는다"고 말했다.

/정책총·김순기기자 islandkim@kyeongin.com

35.9 X 12.3 cm

경인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06면 경제

경기도농기원 장미 '귀하신 몸'

외국 품종보다 최고 32% 비싸

'경기도 장미'가 외국 품종보다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기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8일까지 서울 양재동 화훼공판장에서 거래된 도농기원 개발 품종인 레드크라운의 1속(10송이)당 경매가는 1만5천500원으로 국내에서 거래가 가장 많은 외국 품종인 아쿠아(1만1천780원)보다 가격이 3천720원(32%) 높았다.

도농기원 품종인 레드포켓, 스위트스킨도 각각 1속당 1만3천200원씩으로 아쿠아보다 높은 가격에 경매가 이뤄졌다.

양재동 화훼공판장에서 팔리는 장미 173품종 중 국내에서 개발된 품종은 도농기원 것을 포함해 12품종이다.

도농기원은 도 개발 장미가 꽃 색깔이 고급스럽고 모양이 좋아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17.7 X 4.2 cm

경인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06면 경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 9개월새 15억매출

12개 사업 25억 투자유치 성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보육한 12개 스타트업이 9개월 만에 매출 15억원, 투자 유치 25억원, 신규 고용 30명 등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냈다.

12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K-챔프 랩' 1기 졸업 성과 발표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 스타트업들은 지난해 4월부터 약 9개월 동안 경기센터에 입주해 사업비용 지원은 물론 금융·법률·특허 자문과 사업모델에 관한 멘토링 등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KT는 사업부서와 연계해 기술개발·판로개척·해외진출 분야 등 신생 기업들이 뚫기 어려운 사업 영역에서 전방위로 지원했다.

그 결과 지능형안전운전지원 솔루션을 개발한 '카비'와 스마트팩토리 플랫폼을 구축한 '울랄라 랩'은 각각 3억원, 1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감시 카메라 제작 업체인 '유아세이프'와 실사 영상 기반의 시네마게임을 개발한 '쇼베'는 각각 5억원, 10억원의 투자 유치를, 홍채인식 솔루션 개발업체인 '이리언스'는 해외진출에 성공했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는 "이번에 졸업하는 1기 스타트업들에 가천대학교,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졸업 이후에도 투자유치 기회, 판로개척 및 홍보 등 후속조치를 마련해 계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11.7 X 10.1 cm

경인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10면 인물

글로벌 개방 시대 경기섬유산업 점프

양복완 道 행정2부지사 섬유발전세미나 참석



양복완 경기도 부지사가 12일 오후 3시 경기섬유산업연합회가 연 신년세미나에 참석해 도 섬유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청 제공

양복완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글로벌 개방 시대를 경기도 섬유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양 부지사는 이날 양주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2016년 섬유발전세미나'에 참석, 경기도의 섬유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도는 북부지역을 국내 섬유산업의 거점으로 키우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 부지사는 "도는 섬유산업의 기획·생산·유통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 강점은 살리고 약점을 보완한다면 도는 대한민국 섬유산업의 대표주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스톱시스템 '경기북부' 거점으로
고부가제품군 중국 시장 공략 강조

또 양 부지사는 지난해 12월 발효된 한중 FTA를 거론하면서 "앞으로 중국 저가 원단의 대거 유입과 글로벌 SPA 브랜드의 국내 진출이 경기도 섬유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데에는 중국 시장에 대한 적극적 공략이 필수며 도는 베이징·커차우 등 유명 섬유전시회 참가확대, 중국 POP SYSTEM 사업 참여, 실용화 기술개발, 신소재개발 등을 통해 도내 업체들이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고 중국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섬유산업 관계자들에게 "앞으로 마케팅의 다각화, 디자인 개발, 기술 개발에 조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자신만의 독창적인 브랜드를 가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하고 "도 역시 K-디자인빌리지 조성, R&D개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경기섬유산업연합회가 새해를 맞아 한중 FTA 및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한 도내 섬유산업의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섬유업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의정부/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아이클릭아트

14.0 X 34.1 cm

경인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13A면 오피니언

책임을 따지기 보다 보육대란부터 막아야



이 승 철
도의회 새누리당(수원5) 대표의원

누리과정 예산 다툼이 올해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여러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교육감을 설득했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주장하는 교육감의 고집에 결국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맞게 됐다.

무엇보다도 아무 죄도 없는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이 깊은 상처와 피해를 입게 됐다. 도민들이 받을 고통 속에서 누구의 공약인지, 법령상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지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됐다. 대통령의 공약이니 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교육청·야당의 주장도, 2012년부터 이미 법으로 교육청이 전담하기로 했고 필요한 재정도 내려보냈으니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여당과 교육부의 주장도 모두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서로의 입장만 고집하기엔 당장 우리 도민들의 출혈이 너무도 크다. 단지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보낼 수 없어 직장을 포기해야 하는 부모들의 고통, 아이 키우기 어려워 출산을 포기하는 저출산 문제, 격무에 시달리는 보육교사들의 퇴직 문제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문제들이 모여 경기도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하락시킬 것이고 국민들은 중앙·지방할 것 없이 정부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유치원 지원금만 편성한 교육감은 물론 그마저도 삭감해 전체 누리과정 예산을 0원으로 만들고, 한술 더 떠 본예산안에 지역 예산을 끼워 넣은 채 날치기 통과시킨 더민주 의원들은 도민들의 허탈과 분노를 감내해야 할 것이다. 이들을 설득하지 못한 새누리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젠 여야가 힘을 합쳐 보육대란을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선 경기도가 최소한의 예산을 세워 급한 불을 끄겠다고 입장을 밝힌 남경필 도지사의 진심을 이재정 교육감은 받아들여야 한다. 아이들을 키우는 일은 중앙만의 책임도, 지방만의 책임도, 교육청 혼자만의 책임도 아닌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야당 소속의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여러 시·군에서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결단을 내렸다. 더민주 부산시당위원장은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싸우는 것은 더민주 의원들의 분명한 잘못이라며 솔로몬의 재판처럼 진짜 엄마의 사랑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도의회 새누리당의 유치원·어린이집 현장 방문에서도 일단은 보육대란부터 막아달라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부디 도의회 더민주 의원들과 교육감은 자당의 깨어있는 인사들과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지금이라도 몽니를 그만 부리고 일부 편성에 동의하길 바란다.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도모하는 어른의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 도민을 위해 고집을 꺾는 것은 결코 패배하거나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 아니다. 아이들과 도민을 위해 고집을 겸허히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 도민의 박수를 받을 일이다.

17.1 X 15.4 cm

경인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13A면 오피니언

아이 키우는것 떠넘기는 무책임한 박근혜 정부



김 현 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안산7) 대표의원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내세운 대표 공약이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2012년 12월 16일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아이 기르는 비용도 국가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0~5세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호언장담한 바 있다.

하지만 대책 없는 공약으로 표몰이는 실컷 해놓고 모든 책임을 애꿎은 지자체와 교육청에 전가하고 있으며, 아무런 지원도 없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 공약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우겠다더니 정부 출범 만 3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일부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누리과정은 경기도만의 일이 아니라 17개 시·도 모두의 문제다.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예산을 지방채를 발행하며 경기도민 혈세로 책임진다는 것은 대책이 될 수 없다. 이는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중앙정부 일을 해주게 되는 꼴이다. 남 지사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 대한 면담 요청을 문재인 대표에게 했다.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 참 잘못 짚은 것이다.

남 지사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무상보육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책임지라고 외쳐야 한다.

정부가 교육감들에게 예산 미편성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공약은 내가 했지만 이행은 네가 하라는 식의 억지다.

박 대통령이 저출산 대책은 요란하게 내놓으면서 코앞의 보육대란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는 위선을 저지르고 있다. 정부는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시·도교육감들이 제안한 대로 정부와 국회,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5일 실시한 조사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 및 지원'과 관련한 응답자들의 의견을 물어본 결과,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고 부족한 예산을 더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65.2%로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이 책임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답변은 23.5%였다. 모든 지역에서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고 부족한 예산을 더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는데, 특히 자녀가 있는 30대와 40대에서 '정부지원' 응답이 10명 중 8명에 가까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으로 발표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중앙정부는 이러한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박 대통령이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한결같은 이가 진실된 사람이라 했는데, 대통령 될 때와 되고 나서의 말과 행동이 180도 다른 대통령은 분명 진실한 사람인지 묻고 싶다.

17.1 X 15.4 cm

경인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23A면 사회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행사 주최자·시공업자 실형

'안전소홀·부실시공' 법정구속

27명의 사상자를 낸 판교 환풍구 붕괴 추락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행사 주최자와 환풍구 시공업자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강동원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경인일보 2015년 3월 24일자 22면보도) 행사 주최·주관사인 이데일리 TV 총괄본부장 문모(51)씨와 시공업체 관계자 정모(50)씨 등 5명에게 금고 1~2년,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데일리 TV 원모(53)씨와 하도급 업체 대표 김모(49)씨,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지원본부장 김모(62)씨 등 4명에 대해 금고 10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사 주최자들은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접근 차단 벨트를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시공업자들은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고 임의대로 설계를 변경하고 시공한 점이, 감리자는 부실시공을 방조한 책임이 각각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10월 17일 오후 5시 50분께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에서 열린 제1회 판교테크노밸리축제의 공연을 보기 위해 환풍구 덮개에 올라갔던 시민 27명이 환풍구 덮개 붕괴로 18.9m 아래로 추락해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 X 6.3 cm

경기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01면 종합



"보육대란 막아달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회원과 도내 유치원 학부모들이 12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정치권과 경기도교육청 등은 누리과정 예산을 신속히 편성해 보육대란을 막아달라"고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시범기자

23.0 X 12.2 cm

경기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01면 종합

여야 '마이웨이'… 해법 못찾는 누리과정

道, 910억 반영 수정예산안 제출… 교육청 "정부 책임"
도의회 오늘 임시회도 파행 우려, 사태 장기화 가능성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불러온 경기도의회 누리과정 파국이 장기전으로 치달을 공산이 커졌다.

여야 팽팽한 대치국면으로 인해 누리과정 등 내년도 본예산 처리를 위한 13일 임시회마저 지난달 31일 파국이 재현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경기도의회 여야는 물론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마이웨이 행보를 지속,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13일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한 총 30조 규모의 내년도 도와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제306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이 도의회 여야는 물론 경기도와 도교육청간 상호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어 예산안 처리가 쉽지 않은 상태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도교육청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책임져 줄 것을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과 경기도는 일부 예산반영을 통해 일단 보육대란을 피하고 보자는 등 서로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의회는 이날 누리과정 예산(어린이 집) 910억원을 반영한 수정예산안을 경기도로부터 긴급하게 제출받고 상정 여부 등을 논의중이나 여야 서로의 정치적 셈법과 절차 등의 문제로 이날 늦게까지 가닥 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수정예산안 상정 등 수락으로 자칫 '정부책임'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에 반해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 전액이 삭감된 예결특위안 저지에 오히려 발목이 될 수 있다는 상호 셈법이 엇갈리고 있다.

도가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17명의 의원 발의로 본회의 상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날 대표단 대책회의를 갖고 오후 늦게까지 누리과정 예산 해법찾기에 나섰으나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한 채 원점만 맴돈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원안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강경 저지 방침을 굳히고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를 비롯 도와 도교육청의 누리과정 마이웨이는 이날도 지속돼 갈등의 골만 깊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송영만·조재훈 의원은 이날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로 청와대와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회는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교육청과 도의회를 상대로 누리과정 예산의 즉각 편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즉각 준예산을 편성, 누리과정 예산을 반드시 집행하고 보육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남 지사를 향해 "지금까지 한 번도 남 지사를 비난한 적이 없다. 그런데 (나를 보고 누리과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니…정부가 못하면 경기도가 다 하겠다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 "당신에게 준 돈으로 6개월치 살고 모자라면 내가 대줄게 하는 상황"이라고 비유하면서 "이제는 국회와 정치권이 회의체를 구성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김태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누리과정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1차 회의를 갖고 김현삼 대표 등으로부터 현안을 보고 받았다. 누리과정대책 특위는 도와 서울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교육위원장 등 4인을 비롯, 이목희 정책위의장, 유은혜·도종환 의원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됐다. 김동수·박준상기자 **관련기사 4·10면**

23.0 X 16.2 cm

경기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01면 종합

☑경기도주식회사 ☑공공물류유통단지 ☑G페이 ☑판교제로시티

남경필표 '공유적 시장경제' 윤곽

이르면 내주 발표

남경필 경기지사가 2016년 경기도청의 화두로 던진 '공유적 시장경제' 정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경기도 중소기업 통합브랜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주식회사'와 창고형 매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물류유통단지', 경기도 간편 결제시스템인 'G페이(가칭)', 판교제로시티 등이 그 주요내용으로 이르면 다음주께 발표될 예정이다.

12일 경기도 관계자는 "공유적 시장경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주요 정책 수립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며 "2016년도 예산안 통과 등의 문제가 해결되면 남경필 경기지사가 직접 정책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유적 시장경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도가 준비하고 있는 대표 정책은 ▲경기도 주식회사 ▲공공물류유통단지 ▲G페이(가칭) ▲판교제로시티 등이다.

먼저 경기도 주식회사는 도내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도는 'G마크' 농산물처럼 도내 중소기업 및 사회적 경제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고 해당 브랜드 인증을 받은 제품이 백화점과 홈쇼핑, 대형마트 등에 입주할 경우 수수료를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도는 조만간 통합 브랜드 네이밍 공모전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공물류유통단지는 물류창고 지원뿐만 아니라 물류창고에서 직접 물건을 팔 수 있는 형태가 논의되고 있다. 최근 코스트코와 이케아 등 창고형 매장이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인데, 중소기업 및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판매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지는 기존 도내 산단 내 미분양 부지 및 도유지 등이 검토되고 있다.

간편 결제 시스템인 가칭 'G페이'는 모바일 앱 형태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바일 앱 형태의 G페이를 통해 물건을 결재하면 도가 수수료를 지원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형태다.

판교창조경제밸리를 규제제로, 사고위험제로, 탄소배출제로, 환경오염제로인 곳으로 조성하자는 '판교제로시티'는 입주기업들이 다자간 정보 및 자원을 공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호준기자

17.2 X 13.4 cm

경기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02면 종합

킨텍스 제3전시장 본궤도 고양시, 건립 추진 공식화

국내 최대규모 전시컨벤션 아성 코엑스·벡스코 맹추격에 위협

지원부지 매각 대금 2천억원 최성시장 "마이스산업에 투입"

국내 최대 규모 전시컨벤션센터인 킨텍스의 '제3전시관 건립'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킨텍스가 건립 타당성 확보를 위해 관련 용역을 발주한 가운데 공동 출자기관인 고양시가 건립 추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12일 고양시에 따르면 킨텍스는 지난 1999년 한국 대표전시관 육성을 위해 고양시, 경기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 3개 기관이 공동 출자해 설립됐다. 현재 전시 면적은 제1전시관 5만4천㎡, 제2전시관 5만4천㎡ 등으로 국내 최대 규모이다.

그런데 지난해 서울시는 코엑스, 부산시는 벡스코의 전시 면적 확장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킨텍스의 '국내 최대 규모' 위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현재 3만6천㎡ 규모인 코엑스에 15만㎡를 추가해 총 18만6천㎡로, 부산시는 4만6천㎡인 벡스코에 10만㎡를 추가해 총 14만6천㎡ 규모의 전시컨벤션센터를 꿈꾸고 있다.

만약 정부가 서울시와 부산시 가운데 한 곳이라도 전시 면적 확대를 승인할 경우 국내 최대 규모 전시컨벤션센터는 킨텍스가 아닌 다른 곳이 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9월 확정한 '제2차 전시산업 발전계획'에서 2025년까지 국내 전시장 수요를 4만6천여㎡로 예측한 가운데 코엑스 또는 벡스코의 전시면적이 확장되면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은 사실상 힘들어진다.

이런 위기감 때문에 킨텍스는 지난해 경기도에 '제3전시장 건립'을 건의했다. 또한 킨텍스는 제3전시장 건립에 대한 타당성 확보를 위해 자체적으로 발주한 '3단계 전시장 확장 예비검토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성 고양시장은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으로 확보될 2천억원을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등 마이스산업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킨텍스 공동 출자기관인 고양시가 대외적으로 제3전시장 건립 추진을 밝힌 것으로,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시 관계자는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에 대해 공동 출자기관인 경기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킨텍스가 발주한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이를 근거로 빠른 시일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에 제3전시장 건립을 요청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킨텍스 공동 출자기관들은 건립 협약서를 통해 3단계에 걸쳐 전시 면적 17만8천㎡ 규모로 건립키로 합의한 바 있어 제3전시장은 7만㎡ 규모로 점쳐지고 있다.

고양=유제원·김현수기자

17.3 X 15.7 cm

경기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02면 종합

道 '일자리 재단설립 조례안' 입법예고 철회

마음만 앞서 오락가락 '망신살'

조례없이 先예산… 의회, 전액 삭감

경기도가 남경필 경기지사의 역점사업인 일자리재단 설립 조례안 입법예고를 철회해 빈축을 사고 있다.

12일 도북부청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일자리센터, 경기도기술학교,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등의 각종 일자리 사업을 통합·수행하는 일자리재단을 설립키로 했다.

이에 도는 일자리 재단 및 운영조례안을 지난 6일 기관발의로 입법예고,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그러나 도는 입법예고 엿새만인 이날 조례안 입법예고 철회 공고를 냈다. 행정기관이 입법예고를 철회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해 9월 일자리재단 설립 계획을 발표한 뒤 재단 운영비 120억원을 올해 본예산안에 담아 지난해 말 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조례도 없이 예산부터 편성했다며 재단 운영비를 전액 삭감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을 설립하려면 관련 조례가 필요하다. 당시 도는 예산안 제출과 함께 의원 발의로 조례 제정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결국 이달을 목표로 한 일자리재단 출범이 물 건너가자 집행부 제출 방식으로 변경해 지난 6일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경우 3월 임시회에서 조례 제정이 가능하고 추경예산 편성 등 일정을 고려하면 하반기는 돼야 일자리재단을 운영할 수 있어 입법예고는 없던 일로 한 것이다.

도 관계자는 "도가 조례안을 제출하는 방식일 경우 재단 설립이 늦춰질 것이 우려된데다 예산 수반도 어렵다"며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원 발의로 이달 말 임시회에 조례안을 내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11.4 X 14.4 cm

경기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02면 종합

황해청, 평택BIX 투자유치 본격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실질적 투자유치성과 도출을 위해 전략적 투자유치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황해청은 평택BIX(포승지구)에 관심을 가진 국내외 100여개 타깃 기업들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유치활동 추진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이미 평택BIX에는 지난해 말 4개 국내외 물류기업이 900억원을 투자하기로 경기도와 협약을 맺었다. 또한 황해청은 국내 최초로 전액 중국자본에 의해 개발되고 있는 현덕지구를 대상으로 기존 박람회, 설명회 위주의 백화점식 투자유치활동보다는 투자가능성이 높은 85개 국내외 기업을 상대로 전략적인 투자유치홍보를 전개할 방침이다.

포승지구 관심 국내외 100여개 기업 '타깃'

첨단산업·물류기지 개발 청사진
올해 본격적인 부지 조성 착수

황해경제자유구역은 평택BIX(포승지구, 208만2천644㎡)와 현덕지구(231만4천49㎡)로 구성돼 있다.

평택BIX는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전액 투자해 화학, 기계, 자동차, 전기전자 등 첨단산업과 물류기지로 개발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반공사 착공에 들어간 평택BIX는 올해 본격적인 부지조성을 통해 내년 하반기쯤이면 투자기업들이 공장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덕지구는 상업, 관광, 의료, 주거, 교육 등 글로벌 정주환경 조성을 목표로 조성 중이다. 현재 실시계획 승인이 신청돼 환경영향평가 등 심사 막바지 단계에 있다.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1/4분기 내에 실시계획 승인이 나올 전망이다. 실시계획 승인 이후에는 사유지 토지보상이 진행된다.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올해 평택BIX(포승지구)의 착공과 투자협약(MOU)체결, 현덕지구 실시계획 승인 및 보상을 바탕으로 유망한 타깃 기업과 관련 협회들에 대한 '일대일 밀착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투자유치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16.9 X 11.2 cm

경기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02면 종합



12일 고양시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양복완 도행정2부지사와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강중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 김진흥 고양시 제1부시장(왼쪽부터)이 '병문안 문화 개선 실천을 위한 양해각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경기도·복지부·고양시·일산병원 '병문안 문화 개선 실천' 양해각서

경기도와 보건복지부,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해 손을 잡았다.

양복완 도행정2부지사와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김진흥 고양시 제1부시장, 강중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은 12일 고양시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병문안 문화 개선 실천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강북삼성병원이 지난달 이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두 번째다.

협약에 따라 도는 도내 병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홍보 캠페인을 벌이며 보건복지부는 '병문안 문화개선 우수병원' 마크 및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수범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또 일산병원은 일일 병문안 허용 시간 운영, 단체방문 제한, 외부물품 반입 금지, 방문객 명부 작성 등의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기준'을 실천한다.

현재 일산병원은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환자를 응원하는 '영상·편지 전달문화' 정착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별도의 면회실을 운영하고 있다.

양복완 부지사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 병문안 문화 개선의 목소리가 커져왔다"며 "앞으로 건강한 병문안 문화가 지역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16.9 X 19.4 cm

경기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03면 종합

"첨단시설에 승차감·속도 만족"… 일부는 "요금 너무 비싸다"

30일 개통 신분당선 연장선 시승해보니…

"광교에서 강남까지 30분대로 도착할 수 있다니 아주 좋네요"

신분당선 연장선 시승식이 열린 12일 오후 3시께 광교(경기대)역. 이날 아이를 데리고 온 가족에서부터 등산복을 차려입은 행락객까지 200여명의 승객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역무원의 "강남행 열차가 도착했습니다"는 안내 멘트가 나오자 승객들은 설레는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일제히 신분당선 연장선 열차를 타기 시작했다.

수원의 한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 이연지씨(24)는 "취업 스터디 대부분이 서울 강남에서 이뤄지는데 이곳의 교통편이 불편하다 보니 항상 소외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럴 일 없을 것 같다"며 좋아했다.

연장선을 달리는 전철의 평균속도는 시속 50㎞, 기존 전철의 평균속도가 시속 35㎞로 현재 모든 노선 가운데 가장 빠른데다 노선에는 곡선주로가 많았다.

하지만 무인시스템 운행 방식이 곡선코스마다 속도를 조절하는 등 최신식 기술이 접목돼 이날 승객들은 불편함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

또 전철 내부 곳곳에 설치된 LCD 모니터는 전철 노선도와 현재 속도 등 각종 정보를 승객들에게 전달했다.

광교 주민 김기만씨(78·여)는 "빠른 속도로 달리는 전철임에도 소음없이 이렇게 편안한 승차감을 주는 전철을 본 적이 없었다"며 "최신 기술로 만들어져서 그런지 쾌적하고 승차감도 좋아 개통되면 자주 이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같이 빠른 속도와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하는 연장선 전철에 대해 상당수 승객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휠체어를 이용한 한 승객은 플랫폼과 열차 사이 간격이 넓고 전철역 내 엘리베이터 위치 때문에 불편을 겪기도 했다.

다리가 불편해 휠체어를 타고 이날 시승식을 찾은 전현숙(56)는 "전철 탑승 과정에서 플랫폼과 열차 사이 간격 때문에 다른 승객이 도와줘 겨우 탑승할 수 있었다"며 "대체로 연장선 전철 시설에 대해 만족하지만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 좀 더 배려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아쉬워했다.

승무원 없는 무인시스템 운영
광교서 강남까지 30분대 주파

휠체어 이용 승객들은
"엘리베이터 위치 등 불편"

연장선 교통요금에 대해 일부 승객은 불만의 목소리를 드러내기도 했다.

다른 전철의 경우 기본요금(10㎞ 내)이 후불 교통카드 기준으로 1천50원이지만 연장선은 2천150원으로 2배 이상 비싸다.

광교 주민 김민주씨(31)는 "연장선이 빠르고 편리하지만 그렇다고 기본요금이 2배나 되는 것은 조금 심한 것 같다"며 "매일 서울로 연장선을 타고 출퇴근하면 교통비가 상당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30일 개통하는 신분당선 연장선(정자역~광교역) 구간에는 미금·동천·수지구청·성복·상현·광교중앙(아주대)역이 있지만 이날 행사는 수지구청역까지만 왕복했으며 염태영 수원시장과 시민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영용기자



12일 수원시 광교(경기대)역에서 열린 신분당선 연장선(광교~정자) 복선전철 시승행사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전형민기자

34.6 X 15.1 cm

경기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03면 종합

'해외마케팅 대행사업' 희망기업 모집

道, 뭄바이 등 GBC 설치 5개국 6개소 120개사 지원
현지 바이어 발굴부터 계약까지… 시장 개척 역할

경기도는 해외 수출유망지역에 설치한 해외 경기통상사무소(GBC)에서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을 지원하는 '해외마케팅대행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외마케팅대행사업'은 자력으로 해외시장 개척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GBC의 현지 전문가들이 바이어 발굴부터 계약까지 기업을 대신해 지사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지역은 GBC가 위치해 있는 뭄바이, 모스크바, 쿠알라룸푸르, LA, 상해, 심양 등 5개국 6개소이며 지역별로 20개사를 선정해 총 120개사를 지원한다.

또한 올해 중국 광저우와 베트남 호치민에 GBC를 추가 개소해 해외마케팅대행 지역을 넓혀갈 예정이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GBC의 현지 마케팅 전문가를 통한 바이어 발굴부터 거래 성약까지 밀착지원을 받게 된다.

또 현지에서 운영되는 유명 전시회에 GBC가 무료로 기업 대신 참가해 바이어 발굴에 나서며 GBC 사무소 전시장에 샘플을 전시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해외마케팅대행사업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 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참가신청은 중소기업 지원정보 포털사이트인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수출팀(031-259-6136)에 문의하면 된다.

고봉태 도 국제통상과장은 "도내 중소기업의 진출 희망지역인 광저우와 호치민 지역에 GBC를 오는 3월 개소할 예정이니 많은 활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11.2 X 14.4 cm

경기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04면 정치

與는 교육청 압박, 野는 대책위 맞불… 전면전 치닫나

與 "총선 의식 엄마·아이 정치에 끌어들이지 말라"
野 "지방교육재정 파탄일로" 누리과정 정부 지원 촉구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불거진 보육대란 사태와 관련해 전면전 채비를 갖추고 있다. 여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의 예산 편성을 압박하고 나섰으며 야당은 누리과정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정부의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은 12일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주에 남경필 경기지사가 보육대란을 피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아닌 경기도의 예산으로 2달치 909억원 상당의 도의 예산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했지만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경기도의회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비판했다.

그는 "엄마와 아이를 위한 예산이 어떻게 포퓰리즘적인 예산인가. 예산편성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보육대란을 일으키는 것이 포퓰리즘적인 것이 아니겠나"라고 반문하며 "좌파 교육감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총선을 의식해 보육대란을 일으키지 말고 남 지사처럼 엄마와 아이를 정치에 끌어들이지 않는 정책을 수립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돈이 없다며 어린이집 예산에 한 푼도 짜지 않았던 서울·경기·광주·전남·세종·강원·전북 교육청의 말이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시도교육청이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을 계산에 넣지 않는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예상 세입을 적게 잡아놓고서는 돈이 없다고 엄살을 부렸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보육대란을 일으키 총선에서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어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전형적인 정치적 꼼수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소중한 어린아이들과 학부모들을 정쟁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린 더불어민주당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더민주는 이날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을 위원장으로 하는 누리과정대책특위를 구성하고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전열을 가다듬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정부여당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소요되는 예산 전액을 교육청에 위법하게 전가시켜 시도교육청 부채가 2012년 9조원에서 2015년 17조원까지 급증했고 심지어 2016년에도 4조원의 지방채 발행까지 강요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압박으로 말 그대로 지방교육재정은 파탄일로이며 초중등 학교의 어린 학생들은 수년째 학교시설투자 등이 정상적으로 지원되지 않는 등 교육기회를 박탈당하는 피해가 고스란히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특위는 13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회원 700여명과 이정만 경기도교육청 예산과장 등이 참석하는 누리과정 긴급토론회를 개최해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정부 여당의 책임을 강조하고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재민·정진욱기자

34.9 X 15.8 cm

경기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06면 사회



김제 구제역 양성 확인 '비상' 전북 김제에서 구제역 의심 돼지가 '양성'으로 판정된 12일 안성시 삼죽면의 한 돼지 사육 농가에서 관계자가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구제역 위기단계가 '관심' 단계에서 '주의'로 격상되면서 경기도 방역당국과 농장주들이 구제역 예방 총력전에 돌입했다. 오승현기자

18.2 X 10.7 cm

경기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06면 사회

도립의료원 서수원 이전 반년 넘게 '깜깜'

道 "정식요청 없어", 市 "도가 결정해야" 서로 발 빼기

서수원지역 의료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원시가 경기도립의료원 수원병원의 서수원 이전을 건의(2015년 7월30일자 7면)한 가운데 반년이 지나도록 이전 추진에 대한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는 시가 정식 요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는 도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서로 발을 빼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경기도와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종합병원이 산재한 동수원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 서수원지역에 종합병원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시는 LH가 개발 중인 호매실지구 내 의료용지(4만1천810㎡)를 지정한 상태다.

그러나 4만여㎡의 대형 부지에 700병상 이상의 대규모 병원을 설립해야 하고, 주변 아파트단지 내 민간병원도 적지 않은 탓에 대형민간병원 설립은 수년간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 7월 말 도에 도립의료원 수원병원 이전을 건의했지만, 반년이 지나도록 진행된 것은 하나도 없는 상태다. 도는 시가 구두로만 건의했을 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도립의료원 수원병원 이전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또 시 역시 구두 건의 이후 도가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며 정식 공문을 보내지 않으면서 흐지부지된 것.

도 관계자는 "도립의료원 이전은 수원시에서 메르스 이후 지난해 7월께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이라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종합병원이 들어설 것으로 기대하던 주민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서수원 주민 K씨(37)는 "종합병원에 가려면 40분가량 운전해서 동수원까지 가야 해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면서 "시에서 서수원에 병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깜깜무소식인지 답답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각종 홍보활동을 통해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지만, 종합병원 유치가 대규모 투자라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또 도립의료원을 서수원으로 이전하는 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안영국·한진경기자

18.1 X 10.7 cm

경기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07면 사회

바우처 사업, 만족도 높지만 접근성 낮아

〈경기도 사회서비스〉

사전정보수집 어려워, 적극적 홍보 필요

경기도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이용자들이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정보수집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기복지재단이 발간한 '경기도 사회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비교분석 연구보고서'를 보면, 도내 사회서비스 바우처 이용자 2천500명의 만족도 평균은 79점이었다. 대상별로는 노인이 81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아동(78.6점), 장애인(78.4점) 순이었다.

반면 사회서비스 이용 전 사전정보수집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는 평균 3.45점(5점 만점)으로 사회서비스 이용자들이 자신이 받으려는 서비스에 대한 사전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이 2.87점으로 가장 취약했고 노인 3.59점, 아동 3.42점 등이 뒤를 이었다. 향후 더 필요한 사회서비스로는 건강 분야 서비스와 아동 심리 정서지원 서비스, 노인 신체건강지원 서비스 등이 꼽혔다.

경기복지재단 관계자는 "사회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된 만큼 더 많은 도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www.ggwf.or.kr)에서 볼 수 있다.

박준상기자

14.7 X 7.5 cm

경기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07면 사회

환풍구 추락사고 시공업자 등 실형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강동원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환풍구 시공 하도급 업체 대표 K씨(50)에게 징역 1년, 재하도급 업체 대표 K씨(48)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시공 원청업체 현장소장 K씨(49)에게 금고 2년6월에 벌금 200만원, 원청업체 차장 J씨(49)에게 금고 2년에 벌금 200만을 선고했다. 사고 당시 행사를 주최한 이데일리TV 총괄본부장 M씨(50) 등 주최측 관계자 3명에겐 각각 금고 1년 및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또 시공사 법인 3곳에 대해선 각 벌금 200만~1천만원이 내려졌다. 반면 구속기소된 행사업체 대표 L씨(42)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시공 관계자들이 원래 감리 승인받은 상세 시공도면대로만 시공했더라면, 그리고 행사 개최측이 안전관리조치만 제대로 했다면 끔찍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대형인재 사고"라고 판시했다. 성남=문민석·강현숙기자

11.6 X 6.2 cm

경기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10면 수도권

"道, 무상복지 제소 포기하라"
성남시, 강행 땐 연정파기 요구

경기도의 '성남시 3대 무상복지'에 대한 대법원 제소 방침(본보 12일자 2면)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제소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대법원 제소 여부는 남경필 경기지사의 진정성을 판단할 기준이 될 것"이라며 "만약 제소를 강행한다면 이는 명백한 연정 파괴 행위이므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공식적으로 연정 파기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정의 상징인 이기우 부지사가 명시적으로 재의 요구 철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채 야당에 이양한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고 있다"며 "남 지사의 '연정'이 진정한 '연정'이 아니라 국민을 현혹하기 위한 '연정 코스프레'에 불과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이 시장은 "남경필 지사는 성남시 3대 복지정책에 대한 대법원 제소 포기를 선언하라"며 "이것이 '연정'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강현숙기자

11.2 X 10.6 cm

경기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11면 수도권

한민족 지켜온 '오산 독산성' 세계문화유산 만든다

2025년까지 262억 투입… 정비·복원사업 완료
수원화성 등과 묶어 세계유산 확대 지정 요청

오산시 지곶동에 위치한 독산성(禿山城)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비·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오산시는 오는 2025년까지 262억원을 들여 독산성에 대한 정비 및 복원사업을 끝내고 수원화성, 화성융·건능, 독산성, 궐리사를 하나로 묶어 세계문화유산 확대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독산성과 세마대지 복원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용역을 발주했으며, 다음달 최종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하반기부터 2021년까지 시굴과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이어 2022~2025년에는 성곽 내 시설물 정비 및 복원사업을 벌여 기록에 남아있는 운주당(運籌堂), 진남루(鎭南樓), 장교청(將校廳), 관청(官廳) 등 13개 시설을 복원한다. 특히 시는 독산성 정상에 위치한 세마대(洗馬臺)에서 아래쪽으로 장군들이 회의를 하던 운주당과 삼문(三門), 진남루가 일직선상에 자리 잡고 있을 것으로 보고 복원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독산성에는 현재 성문 5개소와 세마대, 보적사(寶積寺)만 남아있다.

시는 복원이 완료되면 지난 1997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수원화성과 융·건능에 독산성과 궐리사를 추가해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확대 지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독산성은 백제 온조왕(BC 8)때 축성한 성곽(성벽 둘레 1천95m)으로, 1964년 8월29일 국가 사적 제140호로 지정됐으며, 임진왜란(1593년) 때 권율 장군이 흰 쌀을 말에 끼얹으며 말을 씻기는 전략으로 왜군을 퇴각시켜 '세마대'로 불리고 있다. 특히 선조 35년에 돌로 성을 다시 쌓아 경기 남부 군사요충지로 삼았고, 정조대왕은 화성 능행차 시 독산성을 들러 마을 촌로를 위로하고 활을 쏘았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한신대학교 김준혁 교수는 "독산성은 광해군시대에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전국 5개 군사기지로 역사적 의미가 크다"며 "현재의 성곽은 수원화성과 함께 정조 시대에 축조된 만큼 복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오산=강경구기자

28.5 X 8.0 cm

경기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15면 문화

경기도문화의전당 23일 '12첼리스트 콘서트'

클래식부터 팝·탱고까지…

귀가 즐거운 '환상의 앙상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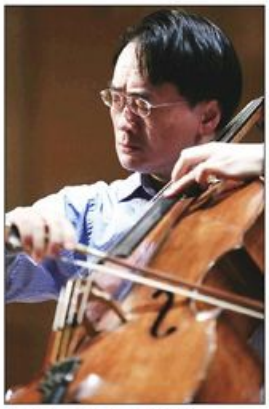
비틀즈에서 피아졸라까지, 클래식 명곡과 대중적인 팝을 한 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콘서트가 펼쳐진다. 첼리스트 12명의 첼로 연주로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다.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은 오는 23일 오후 5시 소극장에서 <12첼리스트 콘서트>를 상연한다.

이탈리아어로 '첼로를 연주하는 사람'·'별처럼 빛나는'이라는 뜻의 '첼리스타 첼로 앙상블'과 중국을 대표하는 첼리스트 '지안왕(Jian Wang)'이 함께한다.

첼리스타 첼로 앙상블은 필라델피아 종신 단원으로 선발돼 화제를 모았던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박상민 교수를 비롯해 국내외 오케스트라 첼로 수석과 국제 콩쿠르에서 수상경력이 있는 차세대 첼로 주역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13년 10월 예술의전당에서 가진 첫 콘서트에서 기존의 정통 클래식을 12첼로 편성으로 선보여 호응을 얻었다.

수원 무대에서 호흡을 맞추는 중국의 첼리스트 지안왕은 1985년에 예일대에 입학해 알도



중국 대표 첼리스트 '지안왕'

12명 첼리스트 한자리에
中 '지안왕' 완벽호흡 기대
명곡 새로운 선율로 편곡
다양한 장르… 재미 더해

파리소를 사사, 베이징 국립대극원의 상주음악가로 활동 중이다. 동양인 첼리스트로는 최초로 세계 굴지의 음반사인 도이치 그라모폰에 입성해 주목받았으며, 최근 블라디미르 아쉬케나지가 지휘한 시드니 심포니와 협연한 엘가 첼로 협주곡 녹음 음반을 발매한 바 있다.

이들은 1부에서 탱고의 황제라고 불리는 아스트로 피아졸라의 <망각(Oblivion)>을 시작으로 조지 거슈윈의 <랩소디 인 블루(Rhapsody in Blue)>, 클로드 드뷔시의 <달빛(Clair de lune)> 등 유명 작곡가의 대표곡을 연주하며 클래식 고유의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2부 프로그램은 첼리스타 첼로 앙상블 특유의 편곡으로 새롭게 변신한 대중적인 팝 음악들로 꽉 채웠다. <헤이 주드(Hey Jude)>를 비롯한 비틀즈의 명곡과 <위 아 더 챔피언(We are the Champion)>을 포함한 퀸의 작품을 연주한다.

정재훈 사장은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젊고 실력있는 첼리스트들의 화려한 테크닉과 아름다운 선율을 한껏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장르를 다양화 해 세대를 불문하고 누구나 즐길 수 있어 활기찬 새해맞이 콘서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람료 1~2만원 류설이기자



첼리스타 첼로 앙상블

17.0 X 31.5 cm

경기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18면 사회

새해 달라지는
가족·여성 정책

2016년도 벌써 보름 가까이 지나갔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기존과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이 많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아빠들의 육아휴직이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일괄적인 보육지원 형태에서 각 개인의 상황과 현실에 맞는 맞춤형 보육제도로의 변형도 예고된다. 올해 가족, 여성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를 모았다.

아빠 육아휴직 급여 3개월로 확대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강화

최대 15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늘어나
새일센터 3곳 추가… 20여개 과정 운영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저소득산모 지원
신분증명서에 이혼 등 민감한 정보 제외

■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확대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450만원으로 확대됐다. '아빠의 달'은 한 자녀의 육아를 위해 엄마에 이어 아빠가 육아휴직 할 경우, 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했으나, 3개월까지 최대 45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로써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난다. 유아휴직에 대한 '아빠의 달 지원은 2014년 10월 처음 시행됐지만, 여전히 남성의 유아휴직 사용은 저조하다. 이번 조치로 확대되길 기대한다.

■ 일반귀화 신청자 '생계능력' 기준 강화

3월부터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원하는 일반귀화 허가 신청자의 자산 기준이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오른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한국 국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보다 많은 소득이 있다면 생계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가족관계등록 공시제도 개선

하반기부터 각종 신분증명서에 이혼 경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다. 현재의 신분관계만 기재한 '일반증명서'와 과거 기록까지 표시한 '상세증명서' 중 원하는 서류를 골라 발급받을 수 있다.

■ 맞춤형 보육제도 강화

워킹맘과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하루 최대 12시간으로 동일하지만 올해 7월부터는 구분된다. 맞벌이나 재학 등으로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부모는 종일반(하루 12시간·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전업주부 등은 맞춤반(하루 6시간·오전 9시~오후 3시)을 이용해야 한다. 워킹맘도 육아휴직을 하면 맞춤반으로 바뀐다. 다만 맞춤반 대상은 월 15시간까지 긴급보육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서비스 확대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서비스가 확대된다. 여가부는 새일센터 3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공모사업에 10억원을 투자해 20여개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경력단절여성의 인턴십 지원도 5천480명에서 5천680명으로 200명 늘린다.

■ 공공산후조리원 시범 설치 예정

경기도내 산후조리원이 없는 동두천, 여주, 가평, 연천 중 한 곳을 공모를 통해 선정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시범 설치된다.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에는 총 11억7천300만원이 투입돼 700여㎡ 규모로 올 상반기 중 개원할 예정이다. 수용규모는 10~14인이며 2주 기준 168만원의 이용료가 책정된다. 경기도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 산후조리원과 달리 경제적 어려움으로 전문적인 산후조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산모들을 전체 입소자의 30% 이상 입소시키고, 이용료의 50%를 감면한다.

■ 청소년 한부모 가정 위한 자립촉진수당 지원대상 확대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자립촉진수당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올해까지는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 한부모 중 24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에만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이 지급됐으나 내년부터는 자녀 연령의 제한 없이 지원된다. 또 미혼부가 본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광수기자







25.0 X 30.5 cm

경기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18면 사회

청소년 건전여가활동 프로그램 사업자 공모

경기도는 청소년들의 건전여가활동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경기도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 대상은 청소년 관련 사업을 주로 하는 도내 소재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및 청소년 시설 등이다. 1개 단체 당 1개 사업이 원칙이며 2개 이상 단체의 컨소시엄 신청도 가능하다.

모집 분야는 4개 분야로 ▲청소년과 행복한 가정 만들기 ▲경기도 및 우리역사 바로알기 활동 ▲청소년 문화조성 및 과학 활동 ▲청소년 진로설계다.

도는 사업비 1억5천만 원을, 사업 규모와 성격, 내용 등에 따라 사업 당 500만원에서 1천5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접수처는 경기도 아동청소년과에 방문 또는 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경기도청 제2별관 403호 아동청소년과)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 신청 서류 및 공모사업계획서 작성 매뉴얼 등 공모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 또는 경기도 아동청소년과(031-8008-2565)에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청소년의 감성 계발과 건전한 여가 육성을 위한 참신하고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단체들의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도는 3월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올해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광수기자

8.5 X 11.3 cm

경기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18면 사회

도건강가정지원센터 블로그 기자 지원하세요

경기도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김양희)가 오는 18일까지 센터의 온라인 블로그 '경기家행복愛' 5기 블로그 기자를 모집한다.

블로그 기자단으로 선발되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등 다양한 가족 건강성 증진 사업을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한다. 기사는 센터 블로그에 게재된다. 활동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 간이다. 월 4건의 기사를 작성하면 1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받는다.

경기도와 건강가정사업에 관심 있는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응모는 경기도여성비전센터 홈페이지(www.gg.go.kr/woman) 공지사항이나 블로그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jjso2506@gg.g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는 22일 경기도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031) 8008-8022 박광수기자

8.5 X 7.5 cm

중부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01면 종합

삼성 평택공장 가동 필수시설 '북당진변환소 건립' 시급한데…

충남도행심위 이상한 몽니 '합의해오라' 5개월째 유보

화해 법적권한 없는데도 고집만
충남도 "민원 얽혀있는 문제라서"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등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변환소의 건축허가를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가 충청남도에 행정심판을 요구한지 5개월이 지나도록 제자리걸음이다.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법적근거와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해조정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수 차례에 걸쳐 해당 민원을 유보시켜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북당진변환소는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삼성전자 평택공장 등 평택 고덕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필수 시설이다.

12일 한전과 충남 등에 따르면 오는 2018년까지 준공키로 했던 충남 당진시 송악읍 아산국가산업단지내 북당진변환소가 당진시의 건축허가 반려로 사업 착수를 못한채 장기 지연되고 있다.

당진시는 지난 2014년 11월 한전이 접수한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신청건에 대해 "주민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려했다. 이후 한전은 주민협의를 마치고 지난해 4월 건축허가를 재신청했지만, 당진시는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이 미반영 됐다는 이유로 또 다시 거부했다.

적법한 절차와 법적근거가 충분히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반려를 위한 명분 찾기에만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결국 한전은 지난해 8월 충청남도에 당진시를 상대로 한 행정심판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전이 도에 제기한 해당 안마저 화해조정이라는 명분없는 조치로 수개월 째 유보상태로 묶여 있다.

충남도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9일 해당안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행정심판을 유보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지난해 11월 증거자료 등을 보완해 재요구에 나섰지만, 행정심판위는 '양 기관간의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또 다시 유보결정을 내렸다.

요구된 안에 대해 심리를 진행해야 할 기구가 법적근거에도 없는 화해조정에 나선 것이다.

해당 요구안건은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열린 행정심판에서도 상정되지 않은 것은 물론 오는 19일 예정된 행정심판에서도 안건상정이 제외된 상태다.

한전 관계자는 "행정청이나 행정심판위에서는 화해권고 권한이 없는데도 당진시와의 협의를 요구하며 행정심판을 유보하고 있다"면서 "법률상으로 당진시의 건축허가 반려 사유는 부당결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통해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청남도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국책사업이고, 민원이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 기관간이 협의해 풀어가야 한다"면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행정심판을 진행하지 않고 계속해 유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지연으로 고덕산단 전력공급 추가비, 착공지연보상, 준공설비 미가동 손실 등 연간 1천210억원의 피해를 입게 됐다며 지난해 11월 20일 당진시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천의현·조윤성기자

17.2 X 18.7 cm

중부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01면 종합

道, 누리예산 담은 수정안 제출

2개월분 910억원 편성

경기도는 12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910억원을 담은 수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남경필 지사가 앞서 1~2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도비로 지원한 뒤, 2개월내에 정부가 보육 대란 해법을 마련하지 않으면 올해 전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도가 책임지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지방세 수입을 늘려 잡아 당초 예산안보다 2천억원 많은 19조8천55억원 규모로 수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지방세 수입은 도교육청전출금, 시군조정교부금, 시군징수보조금 등으로 나눠 쓰게 돼 있어 도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2천억원 가운데 910억원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의 수정예산안은 작년 11월 도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2천억원을 더한 것으로 도의회 회의규칙상 의원 17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뒤 의원 발의형식으로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작년 11월 제출 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가 끝난 만큼새누리당 의원들이 도의 수정예산안을 다시 고친 제3의 수정예산안을 발의할 것으로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강득구 도의회 의장과 양당 대표는 13일 오전 11시 임시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안과 새누리당이 발의하는 제3의 수정예산안이 함께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천의현기자

11.3 X 10.9 cm

중부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02면 종합

도내 공공기관 청렴도 1위 '경기신보·가족여성硏'

道, 전국 첫 자체 청렴도 조사 결과

민원인 등 1만559명 대상 실시
도의료원·영어마을 가장 낮아

경기도 산하기관 가운데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가장 청렴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경기도의료원과 경기영어마을은 청렴도가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 산하 26개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를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다.

12일 경기도가 발표한 '2015년 경기도 공공기관 청렴도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원 50명 이상의 Ⅰ유형기관에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8.66)이, 50명 미만인 Ⅱ유형기관에서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8.97)의 청렴도가 가장 높았다.

Ⅰ유형에서는 경기관광공사(8.62),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8.45), 경기연구원(8.25), 경기과학기술진흥원(8.21)이 뒤를 이었다.

Ⅱ유형에서는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8.42), 경기테크노파크(8.22),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8.18), 경기도청소년수련원(8.10) 순이었다.

반면 청렴도가 가장 낮은 기관으로는 Ⅰ유형에 경기도의료원(6.83), Ⅱ유형에 경기영어마을(7.06)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 민원인 8천44명(외부청렴도)과 공공기관 직원 2천515명(내부청렴도) 등 1만5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10월 각 기관별 부패방지시책에 대한 평가를 종합한 결과다. 이복진기자

17.2 X 8.3 cm

중부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02면 종합

道 일자리재단 설립조례 스스로 철회

경기도가 남경필 지사의 역점 사업인 일자리재단 설립과 관련한 조례 제정을 놓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12일 도에 따르면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 27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입법예고 엿새만인 이날 도는 조례안 입법예고 철회 공고를 냈다. 행정기관이 입법예고를 철회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경기도는 3월 임시회에서 조례 제정이 가능하고 추경예산 편성 등 일정을 감안하면 하반기는 돼야 일자리재단을 운영할 수 있어 입법예고는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천의현기자

17.2 X 4.1 cm

중부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02면 종합

경기소방, 2015년 오인출동 1만6천여건 '전국 최다'

1년간 하루 45번 헛걸음

불이 났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도내 소방차가 헛걸음한 건수가 지난 1년동안 하루 45번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2015년 오인출동은 모두 1만6천415건이다.

같은 기간 전국 오인출동 건수(6만1천549건) 가운데 26.6%를 차지, 전국에서 최다 출동 건수를 보였다.

사유별로는 '연기'가 5천90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보오동작' 2천740건, '타는 냄새' 1천676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해충 퇴치를 위한 연막소독으로 말미암은 출동도 183건에 달했다.

지난 5일 여주소방서는 "한 공사장에서 불이 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신속히 현장에 출동했으나, 공사장 관계자들이 추위를 피해 피워둔 모닥불 연기가 화재로 잘못 신고된 것으로 확인했다.

같은 날 시흥에서도 "산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지만,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다.

한 소방 관계자는 "시민의 투철한 신고 정신이 화재 초기 진압에 큰 도움이 되지만, 정확히 확인하고 나서 신고하면 오인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도재난안전본부는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1만333건으로 63명이 숨지고 610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천의현기자

17.2 X 13.2 cm

중부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03면 종합

野 "누리예산 전액삭감 하겠다"… 與 "반드시 막아내겠다"

도의회 오늘 임시회 본회의… 정면충돌 불가피

野 "도비 지원땐 또다른 피해" 與 "모든 책임 더민주서 져야" 예산안 의결 싸고 대립 격화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키로 결정하면서 경기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보육대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새누리당은 '대안없는 결정'이라며 강력 대응키로 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를 놓고 여야가 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더민주 누리과정 TF팀은 12일 오후 긴급회의를 열어 남경필 지사의 수정예산안을 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안해영(수원8) 더민주 수석대변인은 "남 지사가 제안한 2달치 누리과정 예산은 나머지 9개월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서 "수정예산안대로 900억원을 누리과정에 편성하고 나면 그 만큼의 다른 사업을 못하게 돼 도민들에게 또 다른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또한 "지방교육비로만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사업들을 중단하고 누리과정에만 예산을 쓰라는 것과 같다"면서 "보육대란이 교육대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 중앙에 대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민주는 13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반영되지 않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해당 예산안에는 경기연구원 출연금 130억5천만원, NEXT경기 스타트업 콜라보레이션 81억원, 곤지암 스포츠밸리 조성 30억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30억7천만원 등 15개 남경필 지사 역점 사업도 전액 삭감돼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대표단 회의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 전액 삭감을 반드시 막겠다며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이승철(수원5) 새누리당 대표의원은 "누리과정이 전액 삭감된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보육대란을 일으키겠다는 뜻과 다름없다"면서 "대표단 회의 결과 강경대응을 해서라도 예산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이어 "보육대란이 일어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폐업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13일 대표단 회의와 의원총회를 9시와 10시에 연달아 열고 최종 당론을 결정할 예정이다. 양진영기자

31.7 X 16.6 cm

중부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03면 종합



"아이들 볼모로 네탓 공방 그만하라" 경기도사립유치원연합회가 12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관계자 20여명은 "교육당국과 정치권의 다툼으로 35만여 어린이와 학부모가 고통받아야 하는 황당한 사태가 방치되고 있다"며 "문제해결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교육당국과 정치권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노민규기자

23.4 X 8.8 cm

중부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03면 종합

평택시 누리예산 102억 선편성

안성시 '쉽지 않다' 추후 검토

평택시는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보육대란을 막기위해 시 예산을 편성, 선집행 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25일~2월5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추경을 통해 누리과정 6개월분 예산 102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께 누리과정 관련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

평택시 대상 아동은 5천868명(165개 어린이집)이며, 도비로 지원되는 누리과정 예산은 연간 205억원(월 17억원)이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평택시가 선제적으로 추경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 집행키로 했다"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에 위배돼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 시장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초 예산에 누리과정 예산 93억 4천700만원(월 17억원)을 세워놓은 안성시는 선집행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경기도와 의회의 결정을 지켜보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재용기자

17.3 X 5.6 cm

중부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03면 종합

南 "누리과정 갈등 국회·정치권 나서라"

여야대표·부총리 회담 제의
'전남, 조건부 지원도 한 방법'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2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논란과 관련, "지금은 여야 지도부가 국민에게 안정감을 보여줘야 할 때"라며 정치권의 역할을 강조했다.

남 지사는 이날 현재의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당신에게 준 돈으로 6개월치 살고, 모자라면 내가 대줄게 하는 상황"이라고 비유하면서 "이제는 국회와 정치권이 회의체를 구성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당내 누리과정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예산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을 언급하며 새누리당도 대책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고 싶다. 이어 김문성 새누리당 대표, 교육부총리, 경제부총리와 만나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최근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더민주당과 새누리당 지지율이 하락곡선을 그리는 것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며 "여야가 누리과정 문제해결 능력을 보여줘야 국민의 지지율을 늘릴 수 있다"고 여야의 협력 당위성을 강조했다.

남 지사는 13일 예정된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안 통과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기대는 하지만, 도의회가 할 일이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전남교육청의 해법이 기대를 갖게 한다"고 말했다. 전남교육청이 이날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 목적예비비 3천억원이 풀린다는 전제하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하겠다고 밝힌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경기도는 교육협력사업에 2개월분 누리과정 예산(910억원)을 담은 2016년도 수정예산안을 편성해 이날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는 13일 임시회를 열어 예산안을심의할 예정이다.

남 지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누리과정 예산 관련 입장 표명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대통령께 자꾸 대답하라고 하면 더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정치권이 풀어주는게 좋겠다"라고 말했다.

천의현기자

17.1 X 11.2 cm

중부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03면 종합

李 "교육부 이참에 '누리부'로 바꿔라"

지방교육재정 증가 예측 틀려
南지사에도 "예산공부 더해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 논란과 관련, 12일 또다시 교육부와 경기도를 비판하는 입장을 내놨다.

이 교육감은 시·도교육청 예산분석 결과를 발표한 교육부와 관련해 누리과정을 위한 교육부인지, 의무교육을 관장하는 곳인지 이해가 안간다고 밝혔다.

특히 누리과정 도입당시 중앙정부에서 매년 8.8%(3조5천억원) 이상의 지방교육재정 증가를 예측하고 누리과정비를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했으나 추계액 대비 최근 3년간 15조8천101억원이 부족한 것이 팩트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교육감은 "세수가 안늘어나는데 어떻게 8.8%증가를 예측한건지…대통령에게 잘못된 보고를 했으나 자신들 잘못을 감추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당장 활용가능한 재원이 5천688억원이 있다면 작년에 삭감한 8천900억원부터 살려야 맞다"며 "교육부의 무능을 보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올해 교부금 1조8천억원 증가, 목적예비비 3천억원 등 교육부의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4조2천억원을 편성한 누리과정의 경우 2013년도와 동일하다는것을 강조한 후 "2013년에는 누리과정 예산을 경기도가 70%, 도교육청이 30% 부담했고 인건비는 현재 1조원 가량 늘어났다"며 "교육부가 교육현황을 제대로 아는지 의심스럽다. 이참에 누리교육부로 바꾸지 그러냐"고 밝혔다.

남 지사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혁신교육을 위해 남 지사와 손잡고 가야한다는 생각이었다고 전제한 이 교육감은 남지사의 제안에 대해 "예산공부 좀 더해야 한다. 예산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히는 등 거부입장을 전했다.

그는 또 이번 문제는 통합부지사의 과제로 관련 입장을 밝혀도 통합부지사가 해야 맞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자신이 정치적으로 누리과정을 이용한다는 남 지사의 발언에 대해서는 "정부가 못하면 경기도가 하겠다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 발언 아니냐"고 반박했다.

구민주기자

17.1 X 11.7 cm

중부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03B면 종합

공연부터 숙박까지… 고양 한류월드, 2020년 복합관광지 도약

대화동 일대 99만4천여㎡ 부지
내달 모든 사업자 계약 마무리
2천석 공연장·호텔 7곳 등 조성

고양시 한류월드에 K-컬처밸리와 호텔, 주상복합아파트, EBS 디지털 통합사옥,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등이 들어선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한류월드는 대화동 일대 99만4천756㎡에 복합관광단지로 조성된다.

옛 테마파크 부지와 상업시설 부지 33만㎡에는 CJ E&M이 1조원을 투자해 K-컬처밸리사업을 추진한다.

K-컬처밸리는 2천석 규모의 융복합 공연장, 객실 수 270실 규모의 호텔, 한류 체험 및 전시시설을 갖춘 테마파크, 상업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이 사업은 올해안에 공사를 시작해 2018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호텔 부지 7곳도 모두 사업자가 선정됐다. 대명레저산업은 현재 엠블 호텔 인근에 290실 규모의 가족호텔을 지을 계획이며 인근 A3부지 1만452㎡에는 252실 규모의 한류월드호텔이 들어선다.

또 A7 부지 등 2곳에는 SM관광호텔과 세계KRT가 각각 384실, 724실 규모의 호텔을 건설한다.

CJ E&M은 K-컬처밸리에서 제외된 A6부지에 800실 규모의 호텔을 계획하고 있어 한류월드에는 모두 3천실 안팎의 호텔이 건립될 예정이다.

M1~M4 부지에 현대건설·GS건설·포스코건설 컨소시엄과 에이스산업이 2천300여 가구의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도 현재 고양시에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연내 착공을 앞두고 있다.

2014년 8월 착공한 EBS 디지털통합사옥 건립사업도 2017년 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EBS 디지털통합사옥은 부지면적 1만4천㎡, 연면적 6만1천㎡에 지상 20층, 지하 3층 규모로 지어진다.

경기도 관계자는 "K-컬처밸리 우선협상대상자인 CJ E&M과 사업내용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께 부지공급계약을 마치면 한류월드 사업은 사업자가 모두 정해진다"고 밝혔다.

한류월드는 현재까지 대명 엠블호텔(377실)과 빛마루 신축 등 2개 사업만 완료된 상태로, 2020년 이전 모든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허일현기자

32.9 X 11.5 cm

중부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03B면 종합

野 "누리예산 전액삭감" vs 與 "반드시 막아낼 것"

도의회 오늘 임시회 본회의… 정면충돌 불가피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키로 결정하면서 경기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보육대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새누리당은 '대안없는 결정'이라며 강력 대응키로 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를 놓고 여야가 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더민주 누리과정 TF팀은 12일 오후 긴급회의를 열어 남경필 지사의 수정예산안을 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안혜영(수원8) 더민주 수석대변인은 "남 지사가 제안한 2달치 누리과정 예산은 나머지 9개월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서 "수정예산안대로 900억원을 누리과정에 편성하고 나면 그 만큼의 다른 사업을 못하게 돼 도민들에게 또 다른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野 "도비 지원땐 또 다른 피해"
與 "모든 책임 더민주서 져야"

또한 "지방교육비로만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사업들을 중단하고 누리과정에만 예산을 쓰라는 것과 같다"면서 "보육대란이 교육대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 중앙에 대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민주는 13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반영되지 않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해당 예산안에는 경기연구원 출연금 130억5천만원, NEXT경기 스타트업 콜라보레이션 81억원, 곤지암 스포츠밸리 조성 30억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30억7천만원 등 15개 남경필 지사 역점 사업도 전액 삭감돼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대표단 회의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 전액 삭감을 반드시 막겠다며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이승철(수원5) 새누리당 대표의원은 "누리과정이 전액 삭감된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보육대란을 일으키겠다는 뜻과 다름없다"면서 "대표단 회의 결과 강경대응을 해서라도 예산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이어 "보육대란이 일어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폐업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13일 대표단 회의와 의원총회를 9시와 10시에 연달아 열고 최종 당론을 결정할 예정이다. 양진영기자

17.4 X 14.9 cm

중부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06면 지역



독산성 정비 사업 추진 오산시 독산성(禿山城)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비 복원사업이 추진된다. 사진은 독산성 전경. 사진=오산시청

정조대왕 효심 깃든 독산성… 세계유산 만든다

오산시, 2025년까지 복원 진행
세계문화유산에 추가 방안 추진

오산시 독산성(禿山城)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비 복원사업이 추진된다.

오산시는 오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262억원을 들여 국가사적 140호인 독산성(성벽 둘레 1천95m)에 대한 정비 및 복원사업을 끝내고 수원화성, 화성용주사의 융·건능, 독산성, 궐리사를 하나로 묶는 세계문화유산 확대 지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독산성과 세마대지 복원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용역을 발주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2021년까지 시굴과 발굴을 할 계획이다. 또한 2022~2025년에는 성곽 내 시설물 정비 및 복원 등 활성화 사업을 벌여 기록에 남아있는 운주당(運籌堂), 진남루(鎭南樓), 장교청(將校廳), 관청(官廳) 등 13개 시설을 복원한다.

시는 특히 독산성 정상에 위치한 세마대(洗馬臺)에서 아래쪽으로 장군들이 회의를 하던 운주당과 삼문(三門), 진남루가 일직선상에 위치해 있을 것으로 보고 복원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독산성에는 현재 성문 5곳(동·서·남·북·암문)과 세마대, 보적사(寶積寺)만 남아있다. 시는 복원이 완료되면 1997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수원화성과 화성용주사 융·건능에 독산성과 궐리사(공자 성현을 모신곳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담당)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백제 온조왕(BC 8)때 축성한 것으로 알려진 독산성은 선조 26년(1593년)에 전라도 관찰사 권율장군이 백마를 산 위로 끌어올려 흰 쌀을 말에 끼얹으며 말을 씻기는 전략으로 왜군을 퇴각시켜 '세마대'로 불린다. 시 관계자는 "정조대왕의 효심이 깃든 독산성에 대한 정비와 복원을 마무리해 세계문화유산 확대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창균·황영민기자

17.3 X 18.7 cm

중부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07면 사회

"3대 무상복지 대법원 제소땐 南지사 명백한 연정파괴 행위"

이재명 성남시장 성명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성남시 3대 무상복지'에 대한 대법원 제소 방침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 시장은 "대법원 제소 여부는 남 지사의 진정성을 판단할 기준이 될 것"이라며 "만약 제소를 강행한다면 이는 명백한 연정 파괴 행위이므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공식적으로 연정 파기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남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에 복지에 관한 권한을 넘기는 조건으로 '연정'을 선언하고 사회통합부지사로 더민주 이기우 부지사를 임명했다"며 "그런데 남 지사는 중앙정부와 새누리당의 지시에 따라 성남시 복지정책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의 핵심가치인 복지확대와 자치분권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연정의 상징인 이기우 부지사가 명시적으로 재의 요구 철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채 야당에 이양한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고 있다"며 "남 지사의 '연정'이 진정한 '연정'이 아니라 국민을 현혹하기 위한 '연정 코스프레'에 불과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남 지사의 연정 실험은 박근혜 정부의 누리과정 공약파기를 경기도민의 혈세로 봉합하겠다는 대응에서 이미 절반은 무너졌다고 보아야 한다"며 "이제 성남시 복지정책을 무산시키기 위한 대법원 제소 여부가 마지막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

11.4 X 15.9 cm

중부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14면 경제

道 장미 몸값 껑충

외국품종보다 고가 거래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자체 개발한 장미 품종이 꽃시장에서 외국품종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등 시장성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기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서울 양재동 화훼공판장에서 거래된 장미 173품종 가운데 경기도의 개발품종인 레드크라운(사진)의 경매시세는 1속당 1만5천500원으로 외국품종인 아쿠아 품종 1만1천780원 대비 24%높게 거래됐다.



또 다른 개발품종인 레드포켓과 스위트스킨도 아쿠아 품종보다 9.4% 높은 1만3천200원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핑크하트와 피치밸리는 비슷한 수준의 가격대를 형성, 시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핑크하트는 안정적이며 빈티지한 꽃 색깔과 독특한 화형으로, 피치밸리는 꽃모양이 균일하고 가시가 적어 다루기 쉽고 꽃 수명이 길어 중도매인들로부터 주문이 늘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도농업기술원 관계자는 "경기도 개발 장미가 품종 수 면에서는 9%, 거래량은 2.2%로 아직 국내 꽃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며 "시장성이 우수한 우리품종을 집중적으로 대량 보급해 소비자와 생산자를 모두 만족시키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종대기자

5.1 X 20.1 cm

중부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14면 경제

道기능경기대회 참가자 모집

경기도기능경기위원회(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는 오는 29일까지 '2016년 경기도기능경기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전국기능경기대회 예선전을 겸하는 도 대회는 4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 등 5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대회에 참가하려면 2002년 4월 8일 이전 출생자여야 하며 국제대회 또는 전국대회에서 입상 경력이 없어야 한다. 또 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상 학교나 학원에 다니고 있어야 하며 개인 자격으로 참가하려면 6개월 이상 도내 거주자여야 한다.

최남춘기자

5.1 X 9.1 cm

중부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17면 사설/칼럼

성남시의 이중적 잣대

얘기가 이쯤되면 감정싸움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에 성남시의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다. 당장 경기도가 형평성이 안 맞아 불가능하다며 최악의 경우 성남역 없이 개통할 수 있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자치단체장 등 몇 사람의 결정에 주민 수십만명이 자칫 노선이 안 생겨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지면 그 때가서 어떻게 수습할지도 걱정이다. 물론 그런 사태까지 오게 하면 안되지만 지금의 돌아가는 정황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겠다는 염려가 크다. 알다시피 이 노선은 앞으로 5년 후 삼성~수서~분당~용인~동탄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로 성남시가 경기도에 공사비용 분담 비율 조정을 요구하며 분당구 백현·이매동 일원으로 확정된 가칭 성남역 설치 예산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

물론 다른 지자체 즉 용인시와 화성시는 다르다. 이미 경기도가 건설비 중 지방자치단체 부담액을 5:5로 정해 이 두 지자체는 역사 건설비용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부담하고 있는 터다. 일이 이렇게 돌아 가다보니 경기도는 성남시가 건설비용을 부담할 때까지 성남역 건설 일정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다소 감정 섞인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얘기의 중심은 이렇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여러 매체를 통해 3대 무상복지 사업에 연간 200억원 대의 시 예산 투자를 강행키로 했다고 설명한 뒤다. 그런데 성남시가 성남역 건설비용 213억원을 절약하려 이 소란을 일으키면 시원하게 내 뻗어야 할 GTX가 분명 성남 관내를 지나치는 그야말로 반쪽짜리로 전락할 가능성마저 있다.

이미 성남시는 GTX A노선에 설치될 예정인 성남역 건설비용 지난해분 127억5천만원을 아예 내지 않았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경기도가 정한 분담비율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말이 안 맞는 것은 성남시의 변명대로 GTX 노선의 주체가 달라 즉 성남시가 주도했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인데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더구나 성남시 재정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남시가 건설비의 50%를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얘기도 이해하기 어렵다. 생각해 보자. 전국에서 가장 먼저 청년 등 주민들 대상으로 무상복지를 운운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그냥 할 수 있는지.

더구나 "GTX 노선이 개통된다고 해도 성남시민들의 혜택이 크지 않은 만큼 분담비율은 조정해야 한다"는 시 관계자의 얘기를 어찌 넘겨야 하는지 마저 고민스러울 지경이다. 그렇다면 다른 지자체는 이와 달리 도의 요청에 순순히 응했다고 생각하는지 어이가 없다. 성남시가 요구하는 도비와 시비의 비율이 8:2라 해도 다른 지자체의 그것과 상반된다. 자꾸 이렇게 성남시가 비틀어 대면 다른 지자체 마저 곤란하고 전체 일정이 늦어진다. 괜한 소리로 트집을 잡지 말고 주민부터 생각해야 하는 성남시다.

14.0 X 15.4 cm

중부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20면 스포츠

월드컵재단, 수도권 축구장 방문 수익모델 발굴 등 소통 강화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12일 오후 전반적인 경기장 운영 및 공동 수익모델 발굴 등 기관 간 소통을 확대 하고자 서울월드컵경기장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을 방문했다.

월드컵재단은 2개의 경기장을 잇달아 방문해 주요 운영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 축구전용 경기장 간 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으며, 수익사업 성공 및 혁신적 시설개선 사례 등 각 경기장별 운영 노하우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규택 월드컵재단 사무총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수도권 축구 경기장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해 마케팅 공동 추진 등 활발한 교류를 통해 다양한 축구와 문화 컨텐츠 제공으로 연계시켜 나가겠다"며 "앞으로 도민을 위한 문화·체육 분야의 발전과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오창원기자

5.6 X 12.5 cm

중부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22면 사회

'화성방문의 해' 신호탄… 20일 수원관광포럼 연다

3일간 역사·문화적 가치 조명… 관광산업 글로벌화 모색

수원시가 개막주간 행사로 '수원화성 방문의 해'의 신호탄을 쏜다.

시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동안 수원화성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조명하고 정조의 철학을 이해하는 학술대회와 함께 수원관광 글로벌화를 모색하는 관광산업 관계자 포럼을 개최한다.

행사 첫날인 20일 라마다수원 프라자호텔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서 철학자 도올 김용옥씨는 '화성과 정조 그리고 인문도시 수원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기조강연을 한다.

기조강연에 이어 박현모 여주대 교수는 '정조 사상의 글로벌화 전략', 박철상 박사는 '정조시대 문화의 국제성', 김영호 한국병학연구소장은 '정조시대 간행된 무예도보통지를 통해 본 한중일 무예의 기원과 공유', 최재헌 건국대 교수는 '아시아 성곽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한국 성곽의 가치와 역할', 조두원 국제성곽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세계유산 화성의 OUV 심화 연구' 등의 주제발표를 한다. 시는 이번 주제발표를 통해 정조의 사상과 화성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현대적 의미로 해석되고 이같은 가치를 글로벌화 하는 전략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행업 대표들 초청 수원 소개
도올 김용옥 강연·축하무대도

둘째 날 열리는 포럼은 관광산업 관계자들이 수원화성 관광 소재의 다양·선진화를 위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산업적 차원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김종민 전 문화관광부장관이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으로 기조강연을 하며 최진봉 수원문화재단 화성마케팅부장은 '체류형 관광 활성화', 오형은 지역활성화센터 대표는 '전통시장 연계 방안', 최지아 온고푸드커뮤니케이션즈 대표는 '관광먹을거리 방안', 황길식 명소IMC 대표는 '수원화성 명소화 방안', 김대관 경희대 교수는 'MICE 산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한다.

시는 또 서울의 인바운드 여행업 대표자 100여 명을 초청, 수원의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관광정책 설명회를 연다.

22일 마지막 남은 수원화성 방문의 해 개막식과 축하공연이 진행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개막식에서 행사 개최의 취지를 설명하고 시민과 참석 내빈들에게 성공 개최를 위한 동참을 당부할 계획이다.

축하공연은 애니메이션크루, B.A.P, 코요태, 홍진영, 진성, 인순이, 손승연 등이 출연한다.

개막식은 정의화 국회의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주한외교사절, 국회의원을 비롯 역대 정조대왕과 혜경궁 홍씨 역할을 한 시민, 다문화가정 등 5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신병근기자

28.1 X 9.6 cm

중부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23면 사회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시공업체 대표 등 실형

27명의 사상자를 낸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해 시공업체 관계자와 행사 주최자들에게 법원이 과실 책임을 물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강동원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환풍구 시공 하도급 업체 대표 김모(50)씨에게 징역 1년, 재하도급 업체 대표 김모(48)씨에게 징역 10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원청업체 현장소장과 직원에게는 금고 2년~2년6월, 벌금 200만원을, 행사 주최사인 이데일리TV 총괄본부장 문모(50)씨 등 관계자 3명에게는 각각 금고 1년과 금고 1년 집해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구속 기소됐던 행사업체 대표 이모(42)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강 판사는 "시공 관계자들이 원래 감리 승인받은 상세도면대로 시공하고 행사 개최측이 안전관리조치만 제대로 했다면 끔찍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대형인재 사고"라고 판시했다. 이어 "일부 피고인은 공사 관련 자료 등을 조직적으로 파기·삭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형 인명사고 원인이 환풍구 부실 시공과 현장 안전조치 부재 등으로 판단, 관련자 13명(법인 3곳 포함)을 기소했다. 김대성·이주철기자

5.1 X 17.2 cm

중부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24면 문화



경기도미술관이 지난해 9월부터 개최한 '경기 팔경과 구곡: 산·강·사람'展이 진행된 전시장 내부 모습. 사진=경기도미술관

개관 10년… 수도권 넘어 세계와 소통

우리동네 박물관&미술관 둘러보기

<54> 경기도미술관

1천200만 도민을 위한 미술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경기도미술관. 2006년 건립돼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도 미술관은 경기도가 지원하고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도립미술관으로서, 경기도의 미래 자산이 될 현대 미술품의 수집, 보존, 연구, 전시와 교육 활동, 동시대적이고 창의적인 기획전 실행, 관람객과 경기도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관람객과 소통하면서 수도권의 대표적 미술관으로 성장해왔다.



대상별 눈높이에 따라 다양한 미술작품의 감상 체험 교육이 이뤄지는 '꿈★틀 교실'에 전시된 작품들.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화랑유원지 내 위치하고 있는 도 미술관은 대지면적 1만㎡에 건축면적 5천942㎡, 연면적 8천277㎡으로 시각적 개방성이 높고 호수가 인접한 장소성을 가지고 있다.

실내공간은 1, 2층에 사무실과 수장고, 강당을 비롯해 전시실의 구성으로 본격적인 전시공간은 2층이며, 계획부지가 습지임을 감안해 수장고는 1층에 배치됐다.

전시공간은 순환통로 및 가변벽을 둬 다양한 동선을 활용하는 전시를 구사 가능하게 하고, 특히 8.5m 높이의 천창에는 개패의 조정이 가능한 천창시스템 통해 자연채광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국내 전시관 중 거의 최초 시도된 천창시스템으로 특이할만한 점이다.

도 미술관은 지역성과 세계성을 갖춘 미술관, 전문성과 대중성이 조화된 미술관, 미래지향적 가치와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미술관을 지향해 초기부터 기획 전시 범주

전국최초 개방 가능 천창시스템
책임 큐레이터제 도입해 전문화
지역성·세계성 갖춘 전시 다채
눈높이 체험·공공미술 등 활발

를 설정하고 일찍부터 책임 큐레이터제를 도입했다. 이에 다양한 현대미술을 새로운 시각으로 전달하는 '특별 기획전'을 비롯, 경기도의 정치·사회·문화적 이슈를 주제로 한 '경기 아트 프로젝트', 동시대미술의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실험하고 조명하는 '현대미술의 동향전', 미술 인접 분야와 미술의 다양한 크로스 오버 현장을 보여주는 '크로스장르', 한국미술의 해외 소개와 해외미술의 국내 소개를 통해 국제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국제아트 프로젝트', 미술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다룬 교육 특화 전시인 '꿈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미술이 어렵지 않고 생활에서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인 대상 문화 예술 기획 강좌 '경기도미술관 아카데미' '도슨트 양성 교육 프로그램', 기획전시의 목적과 내용을 쉽게 전달하기 위한 '전시연계 교육 프로그램', 초·중·고등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미술관을 또 하나의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학교 연계 교육 프로그램', 대상별 눈높이에 따라 다양한 미술작품의 감상 체험 교육이 이뤄지는 '꿈★틀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 미술관은 경기도 구석구석에도 문화의 향유를 위해 31시·군과 협력을 통한 사업확장에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2년 '예술이 흐르는 공단'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지난해 화성·평택·동두천시 등에 그래피티 아트를 통한 대중적인 예술과 나눔의 실험으로써 대중적인 공공미술의 확장을 이뤄내는 등 각 지역들은 공공미술을 통해 자신만의 색깔을 갖기 위해 노력했고 자생적인 성과를 내기도 했다.

도 미술관은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아 도를 중심으로 한 예술을 총망라하는 전시를 계획하고 있으며, 현대미술관으로서 다양한 장르(스트리트 아트, 판화 등)의 콘텐츠를 통해 미술관이라는 물리적 장을 유연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전시 및 청년작가전시 등을 추진해 현대미술의 선두적 동향을 나누는 미술관으로서 입지를 더욱 다진다.

최은주 관장은 "국내외 현대미술의 다양한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 가치를 더 넓게 확산시키려는 미술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도민의 생활이 문화와 예술로써 좀 더 풍요로워지게 하는 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031-481-7000.

김동성기자

경기신문

2016년 01월 13일 (수)
01면 종합

오산시, '독산성'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동'

2025년까지 262억 들여 진남루 등 13개 시설 복원
수원華城·용주사·융건릉 등 묶어 확대 지정 추진

오산시가 조선 22대 영조대왕의 효심이 깃든 독산성(禿山城)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12일 오산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25년까지 262억원을 들여 국가사적 140호인 독산성(성벽 둘레 1천95m)에 대한 정비 및 복원사업을 끝내고 수원화성, 화성용주사의 융·건능, 독산성, 궐리사를 하나로 묶는 세계문화유산 확대 지정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독산성과 세마대지 복원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용역을 발주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2021년까지 시굴과 발굴을 할 계획이다.

2022~2025년에는 성곽내 시설물 정비 및 복원 등 활성화 사업을 벌여 기록에 남아있는 운주당(運籌堂), 진남루(鎭南樓), 장교청(將校廳), 관청(官廳) 등 13개 시설을 복원한다.

시는 특히 독산성 정상에 위치한 세마대(洗馬臺)에서 아래쪽으로 장군들이 회의를 하던 운주당과 삼문(三門), 진남루가 일직선상에 위치해 있을 것으로 보고 복원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독산성에는 현재 성문 5개소(동·서·남·북·암문)와 세마대, 보적사(寶積寺)만 남아 있다.

시는 복원이 완료되면 1997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수원화성과 화성용주사 융·건능에 독산성과 궐리사(공자 성현을 모신곳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담당)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백제 온조왕(BC 8)때 축성한 것으로 알려진 독산성은 선조 26년(1593년)에 전라도 관찰사 권율장군이 백마를 산 위로 끌어올려 흰 쌀을 말에 끼얹으며 말을 씻기는 전략으로 왜군을 퇴각시켜 '세마대'로 불린다.

선조 35년에는 돌로 성을 다시 쌓아 경기남부 요해처로 삼았고, 정조대왕은 수원 능행차 시 독산성을 들러 마을 촌로를 위로하고 활을 쏘았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수원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되면서 독산성이 새롭게 조명 받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독산성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확대 지정을 적극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오는 3월 용역결과보고를 통해 그동안 훼손된 터를 찾아 시굴조사와 발굴조사를 통해 문화재청의 승인하에 복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용역검토를 토대로 향후 토지매입비, 복원사업비가 선정되면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 22대 영조대왕의 효심이 깃든 오산시 독산성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비 복원사업이 추진된다. /오산시 제공

/오산=지명신기자 msj@

29.9 X 12.4 cm

경기신문
2016년 01월 13일 (수)
01면 종합

道, 누리과정 수정예산안 제출
도의회 오늘 임시회 '이목집중'

道,누리과정 지원 2개월분 담아
도의회 여야 이견… 재충돌 우려

경기도 준예산 사태 이후 경기도의회 첫 임시회 본회의가 13일 열릴 예정이다.

도와 도교육청의 올해 예산안과 2개월분의 누리과정 수정예산안이 함께 상정될 예정이지만 여야 간 합의가 전제되지 않아 무산 가능성이 크다.

12일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며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지난해 여야 충돌로 무산된 도와 도교육청의 올해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더민주는 지난 5일 임시회 개회 요구서를 의회에 제출했었다.

이에 맞춰 도는 이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 910억원을 담은 수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수정예산안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 발의(17명 이상의 의원 동의 후 상정) 형식으로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남경필 지사가 1~2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도비로 지원한 후 2개월 내에 정부가 보육대란 해법을 마련하지 않으면 올해 전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도가 책임지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준예산 사태를 종결할 도와 도교육청의 올해 예산안과 보육대란을 임시 지혈할 2개월분의 누리과정 수정예산안이 임시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가 도의회 다수당인 더민주의 일방적 예산안 처리 계획이어서 의장석 점거 등 새누리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임시회가 열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담은 도의 수정예산안이 상정되더라도 여야 간 표 대결에서 밀려 부결될 가능성이 큰 탓이다.

또 도와 도교육청의 올해 예산안도 남지사의 공약 사업이 대부분 삭감돼 여당 입장에서는 재협상이 아니면 임시회 상정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승철 새누리당 대표의원은 "2개월분의 누리과정 수정예산안은 여야 간 합의가 아니면 상정하지 않겠다"라면서 "합의 없이 임시회를 연다면 의장석 점거 등 여야 간 재충돌도 불사하겠다"고 전했다.

더민주 측은 이날 지도부 회의 직후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대책 마련없는 경기도의 2개월 치 누리과정 예산안은 수용할 수 없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안 원안 의결을 원칙으로 정했다"고 밝혀 본회의장에서의 여야 간 재충돌이 우려된다.

/홍성민기자 hsm@

11.8 X 16.9 cm

경기신문
2016년 01월 13일 (수)
02면 종합

경기신보·경가연, 道 산하 공공기관 중 청렴도 으뜸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전국 최초 광역단체가 산하단체 청렴도 조사
청소년 수련원·도 의료원·경기영어마을 최하위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경기도 산하 26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나란히 유형별 1위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산하 2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조사를 한 것은 도가 처음이다.

도는 기관별 공정 비교를 위해 정원 50명을 기준으로 I·II 유형으로 기관을 나눈 뒤 내·외부청렴도 설문조사 및 부패방지시책 평가를 종합했다.

설문조사는 지난해 6월 민원인 8천44명과 공공기관 소속직원 2천515명 등 1만55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결과 경기신보는 종합청렴도 8.66점(10점 만점)으로 I유형기관 13곳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경기신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공직유관단체 IV유형(직원수 150~300명) 부분에서 최근 2년연속 2등급을 받고 있다.

이어 경기관광공사 8.62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8.45점, 경기연구원 8.25점, 경기과학기술진흥원 8.21점 등의 순이었다.

다만, 이들 기관은 모두 2등급으로 I유형기관 중 종합청렴도 8.72점 이상의 1등급은 없었다.

I유형기관 가운데 종합청렴도가 가장 낮은 곳은 경기도의료원으로 6.83점에 그쳤다.

II유형기관 13곳 가운데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가장 청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종합청렴도 8.97점을 기록, I·II 유형기관 26곳 가운데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다.

이어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8.42점·2등급), 경기테크노파크(8.22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8.18점), 경기도청소년수련원(8.11점, 이상 3등급) 등의 순이었으며 경기영어마을이 7.06점으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각 기관별 취약 분야를 보완하는 부패방지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자율적 반부패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청렴시책 방문교육, 기관별 맞춤형 청렴컨설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경필 지사는 "청렴과 혁신이야말로 경기도 행정서비스의 두 축"이라며 "도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서는 경기도 공무원뿐 아니라 도정의 파트너인 산하 공공기관의 청렴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29.9 X 9.1 cm

경기신문
2016년 01월 13일 (수)
02면 종합



남지사, 도 육상운송단체協 축사 12일 수원 한 음식점에서 열린 경기도 육상운송단체협의회 신년인사 및 간담회에 참석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17.8 X 11.0 cm

경기신문
2016년 01월 13일 (수)
02면 종합

작년 도내 매일 28건 이상 불길 치솟았다

1만333건 발생… 전년比 658건 ↑
부상자 52명 늘고 사망자 14명 줄고

지난해 경기도 화재 발생 수가 1만 건을 돌파했다.

지난 2012년 이후 2년 연속 1만 건을 밑돌았던 화재 발생은 건조한 날씨 등으로 다시 치솟았다.

12일 경기도재난안전본부가 내놓은 '2015년 경기도 화재발생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경기도에서는 1만333건의 화재가 발생해 전년 대비 658건(6.8%)이 증가했다.

부상자도 61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52명(9.3%) 늘었다.

반면 사망자는 63명으로 2014년 대비 14명(18.2%) 줄었다.

연도별로는 2010년 9천321건, 2011년 1만19건 2012년 1만159건, 2013년 9천49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건조한 날씨로 인한 임야 화재와 쓰레기 등의 화재가 전년 대비 각각 182건(27.5%), 407건(19.0%) 늘어난 것이 지난해 전체 화재 발생 규모를 끌어올린 것으로 본부는 분석했다.

화재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4천953건(47.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기적 요인 2천260건(21.9%) △기계적 요인 1천315건(12.7%) 등의 순이다.

부주의 화재 사건 중에서는 3건 중 1건이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1천717건·34.7%)로 발생해 가장 빈도수가 높았다.

장소별로는 △비주거 3천556건(34.4%) △주거 2천120건(20.5%) △차량 1천252건(12.1%) △임야 843건(8.2%) 등의 순이다.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주로 야외에서 담배꽁초 및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많이 늘었다"라며 "대부분의 화재는 작은 관심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니 생활 속 실천으로 화재예방에 동참해 달라"고 주문했다.

/홍성민기자 hsm@

17.8 X 9.2 cm

경기신문
2016년 01월 13일 (수)
02면 종합

道, 병문안 문화개선 실천 앞장선다

복지부- 고양시- 일산병원 협약

경기도와 보건복지부,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해 손을 잡았다.

양복완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김진흥 고양시 제1부시장, 강중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은 12일 고양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병문안 문화 개선 실천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날 협약은 지난해 12월 10일 보건복지부와 강북삼성병원 간 협약에 이어 두 번째다.

협약에 따라 도는 도내 병원들의 참여를 지원·독려하고, 도민 대상 홍보캠페인을 적극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모범 실천 병원을 대상으로 '병문안 문화개선 우수병원' 마크 및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수범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일일 병문안 허용 시간 운영 △병문안 제한 대상 안내 △단체방문 제한 △감염예방 수칙 안내 △외부물품 반입 금지 △병문안객 명부 작성 등을 실천하기로 했다.

/홍성민기자 hsm@

11.8 X 8.4 cm

경기신문
2016년 01월 13일 (수)
02면 종합

해외마케팅 대행 참가 中企 모집
선정시 발굴~ 거래성사까지 지원

경기도가 '해외마케팅대행사업'에 참가할 도내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해외시장 개척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신해 경기통상사무소(GBC) 전문가들이 현지 바이어 발굴부터 계약까지 지원해주는 게 핵심이다.

현재 뭄바이, 모스크바, 쿠알라룸푸르, LA, 상하이, 심양 등 5개국 6곳에 GBC가 설치돼있으며 지역별로 20개사를 선정·지원한다.

또 도는 올해 중국 광저우와 베트남 호치민에도 GBC를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GBC 현지 마케팅 전문가를 통해 바이어 발굴부터 거래 성약까지 밀착지원을 받게된다.

도내에 본사나 공장을 둔 제조기업이 대상이며 신청은 중소기업 지원정보 포털사이트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연중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수출팀(031-259-613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GBC 6개 사무소는 총 111개 기업에 대한 해외마케팅대행을 진행, 2천만 달러(약 240억원)의 수출 계약을 지원했다. /안경환기자 jing@

5.7 X 14.3 cm

경기신문
2016년 01월 13일 (수)
02면 종합

도내 돼지 70% 구제역 면역력 보유
축산위생연, 백신 양성율 68% 향상

경기도내 돼지 10마리 가운데 7마리꼴로 구제역에 대한 면역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는 지난해 구제역 방역사업을 실시한 결과 돼지의 백신 항체 양성율이 2014년 44.7%에서 68.2%로 향상됐다고 12일 밝혔다.

같은기간 항체 양성율 기준이하 농가도 391곳에서 57고승로 77배 정도 줄었다.

연구소는 이를 위해 구제역 백신 항체가 검사를 전년 2만3천685건에서 4만8천553건으로 2배 이상 확대 추진했다.

또 항체 양성율이 낮은 농가는 직접 찾아가 원인분석을 실시, 접종시기를 조정하는 등 집중관리했다.

그러나 여전히 구제역에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축산위생연구소는 밝혔다.

연구소 관계자는 "효과적인 면역을 기대하려면 항체 양성률이 80% 수준은 돼야 한다"며 "지난해 발생한 구제역도 국내에서 완전히 종식됐다고 보기 이르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올해 도내 돼지농가 1천321곳에서 구제역 바이러스와 백신접종 여부, 항체 검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안경환기자 jing@

5.7 X 14.2 cm

경기신문

2016년 01월 13일 (수)
03면 종합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회 회원들이 12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을 즉각 편성·집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노경신기자 mono316@

유치원총연 道會 "도교육청·도의회, 누리과정 예산 편성하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회(회장 이음재)는 12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를 향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회는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성명서를 내고 "35만여 명의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 황당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보육대란 해법을 찾아내는 것이 교육당국과 정치권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음재 경기도회장은 "도교육감과 도의회가 법령 상 의무 지출 경비인 누리과정 예산을 반드시 집행해 보육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라며 "더는 유아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20대 국회의원 선거 부천원미갑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지난달 15일 등록한 상태다.

/홍성민기자 hsm@

17.8 X 13.8 cm

경기신문

2016년 01월 13일 (수)
11면 인물



"올해엔 신성장 경제신도시 발전 노력하자"

평택상의, 신년인사회 개최

평택상공회의소는 12일 상공회의소 2층 대회의실에서 '2016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평택상공회의소 이근찬 회장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공재광 평택시장, 김인식 평택시의회 의장, 원유철·유의동 국회의원, 시·도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근찬 평택상공회의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해에는 평택에 메르스 사태로 인해 지역경제와 내수가 침체되고 수출이 둔화되는 등 어려움이 많은 한해임에도 여러분의 노력으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며 "올해에도 평택시가 신성장경제신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17.9 X 10.5 cm

경기신문

2016년 01월 13일 (수)
18면 사회

"남경필 지사, 예산공부 좀 더하시라"… 교육연정 '삐끗'

이재정 도교육감, 직격탄 날려

"정부 못하면 경기도가 다 하겠다는 건 정치적 발언 누리과정 위한 교육부인가 초·중·고 교육재정 위기"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논란의 중심에 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가 전날 밝힌 예산 지원 방식에 대해 "예산 공부 좀 더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교육감은 12일 경기도교육청 기자실을 찾아 "정치 지도자는 예산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면서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협력사업비 성격으로 우회 지원하겠다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제안에 대해서도 "다른 기관의 예산을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런 전례가 없다"면서 "예산공부 좀 더하시라고 그래요"라는 우회적이면서도 직설적인 표현으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도는 전날 '누리과정 예산 지원 방안 설명자료'에서 도가 포괄 교육협력사업비로 교육청에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1안으로 제시하면서 '이런 편성방식은 교육감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달았다.

도는 교육감이 1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시·군에 직접 전출하는 2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남 지사를 향해 '교육연정' 파트너로서의 서운한 감정을 넘어선, 격앙된 목소리로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이 교육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남 지사를 비난한 적이 없다. 도 예산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얘기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나를 보고 누리과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니…그래서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나. '정부가 못하면 경기도가 다 하겠다'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와 연정하면서 통합부지사를 뒀는데 이런 과제(누리과정)야말로 통합부지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도 지적했다.

또 "누리과정을 위한 교육부인가, 초·중·고 교육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누리과정에 앞서) 초·중·고 교육재정이 근본적인 위기 상황"이라면서 "돈이 없어 올해 본예산에 반영 못한 예산이 5천억원이 넘는다. 교육부의 무지와 무능함에 할 말을 잃을 정도로 대한민국 교육이 정말 걱정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인 만큼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4조원이 넘는 재정 문제를 풀 수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누리과정 특위 구성과 김상곤 전 교육감의 위원장 선임안 추진에 대해서는 "늦은 감이 있지만 지푸라기도 잡아야 할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상훈기자 lsh@

29.9 X 9.1 cm

경기신문

2016년 01월 13일 (수)
19면 사회

"판교 환풍구 끔찍한 人災 원인은 부실시공"

法, 27명 사상자 낸 추락사고 관련 시공·행사관계자 대부분 징역형 선고

27명의 사상자를 낸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의 시공·행사 관계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구속기소된 행사 진행업체 운영자 이모(42)씨는 유일하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강동원 판사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환풍구 시공 하도급업체 대표 김모(50)씨에게 징역 1년, 재하도급업체 대표 김모(48)씨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원청업체 현장소장 김모(49)씨에겐 금고 2년6개월에 벌금 200만원, 원청업

재하도급 업체 도면대로 시공 안해
행사 개최자도 안전관리 소홀
생명경시에 엄정한 책임물어야

체 차장 정모(49)에겐 금고 2년에 벌금 200만, 행사를 주최한 이데일리TV 총괄본부장 문모(50)씨 등 관계자 3명은 금고 1년 및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아울러 환풍구를 시공한 법인 3곳에 대해선 각 벌금 200만~1천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시공관계자들이 원래 감리 승인받은 상세시공도면대로만 시공했더라면, 행사 개최자들이 안전관리조치만 제대로 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끔찍한) 대형 인재사고라 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또 "(사고 원인은)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소홀히 하는 문화가 건설업계 등 사회 전반에 만연하고, 피고인들도 그러한 문화에 녹아있기 때문일 것"이라며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타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직결되는 건물의 건축이나, 대규모의 인원이 동원되는 행사를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전문성과 자격, 지식에 부합하는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형을 정함에 있어 주의의무의 정도, 각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 독자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등에 개별적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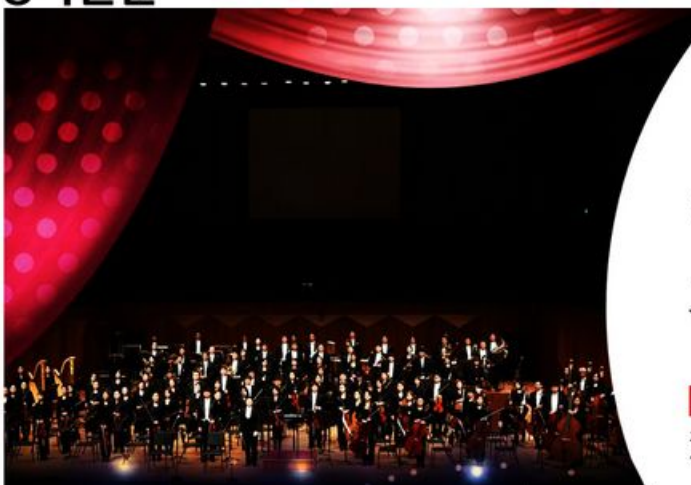
지난 2014년 10월 17일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에서 환풍구 철제 덮개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환풍구 위에서 인근 야외광장에서 진행중인 공연을 보던 시민 27명이 18.55m 아래로 추락, 1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검찰은 관련자 10명과 법인 3곳을 기소했다.

/양규원기자 ykw@

23.8 X 10.1 cm

경기신문

2016년 01월 13일 (수)
20면 특집







막 오른 '5色 향연' 도민 눈과 귀 사로잡는다

미리 보는 경기도립예술단 2016년 기획공연

지난해 각자의 자리에서 도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왔던 경기도립예술단은 2016년 병신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더 많은 도민들을 만나고 즐거움을 주기위해 다양한 기획공연을 준비했다.

◆ 고전을 통한 시대와의 공감에 나선 경기도립극단

상실의 시대 절망에 익숙한 현대인에게 경기도립극단은 수백 년 전에 쓰여진 고전을 내세워 시대와의 소통에 나선다. 도립극단의 2016년 명작시리즈 첫 포문은 노르웨이 국민 극작가 헨릭 입센의 '들오리'(5.11~15)가 연다. '인형의 집', '유령', '페르 귄트'등으로 잘 알려진 입센은 사회적 문제를 사실적으로 그려내며 많은 이들을 열광시킨 작가이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순수한 영혼의 희생을 그린 이 작품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갈등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프랑스 고전 희극의 거장 몰리에르의 천재성이 빛나는 '귀족수업'(12.1~4) 또한 놓칠 수 없는 작품중 하나다. '귀족수업'은 몰리에르 작품 가운데 대중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풍자 희극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속물근성을 유쾌하게 풀었다. 수백 년 전에 쓰여진 두 작품에서 발견되는 오늘날에도 동용되는 이 이야기들은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시공간을 뛰어넘는 고전의 힘을 발견하게 한다. 김철리 예술단장 특유의 현대적 어법에 도립극단 배우의 명품 연기가 더해진 명작시리즈로 웰 메이드 연극의 정수를 경험해보자.

한편 2016년에도 관객과 가까워지려는 경기도립극단의 노력은 계속된다. 공연장 문턱을 낮춘 무료 공연으로 가족극'내 마음 고향 언덕에'(2.20~21)와 서부극 '스니키 회치의 부활'(8.25~28)이 관객을 찾는다. 또한 2010년도부터 이어온 정신건강프로젝트 공연 중 자살 예방, 생명 사랑의 메시지가 담긴 뮤지컬 '4번 출구'가 4월부터 경기도 곳곳을 찾는다. 시각장애인들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소리책' 제능기부도 올해로 4년째 이어간다.

◆ 한국춤의 무한한 가능성을 선보일 경기도립무용단

경기도립무용단은 한국 춤의 매력을 관객에게 친근하게 전달하고자 스토리 중심적인 무용극을 선보인다. 이는 감각적인 이미지극이 주류인 무용계에 한국 춤의 대중화를 위한 도립무용단의 선택이다. 판소리 다섯마당 중 '심청가', '춘향가', '흥보가', '수궁가'를 소재로 한 우리춤 한마당(7.23/8.20/9.10/10.22)이 바로 그것이다. 누구나 아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였기에 우리 춤이 지닌 본연의 매력에 집중하게 한다.

또한 도립무용단 단원 창작 무대로 꾸며지는 이번 무대는 춤꾼들의 독창적인 안무세계로 안내하며 한국 춤의 다양한 변주를 확인하는 시간을 선물한다. 작년 많은 관객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창작 무용극 '황녀, 이덕혜'(6.24~25) 또한 완성도를 높여 도립무용단의 대표 브랜드 공연으로 자리매김 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부채춤, 모듬북, 북의 합주 등 어린이부터 외국인까지 사로잡는 우리 춤 레퍼토리 상설공연(3.26/4.30/5.28)이 어김없이 관객을 찾으며 정재, 민속 등 우리 춤의 해체와 재구성을 통한 신작 무대가(11.25~26)가 기대를 모은다. 또한 도립무용단의 청소년을 위한 우리 춤 문화나눔 강좌는 3월부터 6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된다.

◆ 창단 20주년 맞은 경기도립국악단의 특별한 무대

경기도 소리를 중심으로 한국 전통음악의 계승 발전이란 목표아래 1996년 8월에 창단된 경기도립국악단이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그간 100회에 이르는 정기연주회와 1천여회가 넘는 상설·순회·초청공연 등으로 다양하고 왕성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도립국악단. 올 한해 그들의 여정을 돌아보며 현재의 우리네 삶과 맞닿은 우리 음악을 찾기 위한 도립국악단의 행보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국악의 미래와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 첫 무대로 아시아 민요에서 국악의 가능성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아시아음악회(4.21)가 관객을 찾아간다. 음악 안에서 다름에 대한 이해와 포용을 발견하는 자리로 음악적 가치와 더불어 오늘날 이 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적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역대 도립국악단 예술단장과의 조우가 기대되는 '국악칸타타'(8.20)는 도립국악단의 발걸음을 살펴보고 최상화 예술단장과 함께 국악관현악의 미래를 그려본다. 국보급 문화재 명인, 명장이 함께하는 '레전드, 대한민국음악제'(11.19) 또한 큰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도립국악단의 새로운 20년을 그려보는 국악 대축제를 펼쳐 보인다.



경기도문화의전당

미래 세대를 위한 도립국악단의 행보도 눈에 띈다. 작년에 처음으로 아동극 레퍼토리 개발에 나선 도립국악단은 미래 국악애호가를 길러내는 중요한 걸음을 이어간다. 한글 동요보다 영어 동요가 더 익숙하고, 동요보다 가요가 더 익숙한 어린이들에게 국악의 매력을 전할 국악아동극(5.31~6.6)이 기대를 모은다. 올해로 16년 째 신예 국악인재 발굴을 위한 '명인을 꿈꾸다'(9.30)도 계속 된다.

◆ 다양한 레퍼토리로 만나는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성시연호 2기가 시작됐다. 2014년 취임한 성단장은 지난 2년동안 내실다지기에 주력했다면, 올해부터는 레퍼토리 확장으로 명실공히 국내 최정상 오케스트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지겠다는 계획이다.

2016년 클래식 음악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해를 맞았다. 한국의 젊은 연주자들의 성과가 두드러지고 관객 또한 함께 성장하는 이 시기, 경기필은 다양해진 관객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멘델스존과 동시대의 음악'이라는 주제로 총 5편의 마스터 시리즈(3.23/ 6.9/7.9/10.21/11.25~26)를 선보인다. 멘델스존, 브루크너, 슈트라우스, 바그너, 말러 외에도 쉰베르크, 알반 베르크 등 제2빈 악파까지 다루기 때문에 유태인과 반유대주의 대결구도를 살펴보는 것 또한 음악 감상의 묘미를 더한다.

세계적 명연주자들과 함께 하는 경기필의 협연 무대를 놓칠 수 없다. 세계 4대 바이올리니스트로 불리는 핀커스 주커만과의 무대(4.30/5.1), 슬로보 민츠와의 무대(7.9)가 관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세계 오페라 극장에서 주역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소프라노 캐슬린 킴(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주역)과 테너 박지민(런던 로열 오페라 극장)과의 협연으로 2016년 새해를 여는 신년음악회(1.16)도 기대를 모은다. 한국 젊은 연주자들이 세계를 대표하는 가운데 파아니스트 이진상(1.16)과 바이올리니스트 김수연(3.23)의 놀라운 음악 세계를 만나볼 수 있다.

이 외 통영국제음악제 개막공연(3.25), 국제현대음악협회 세계현대음악제(4.1), 롯데아트홀 개관 초청 공연(9.2) 등 2016년 클래식 주요 현장에서 경기필의 음악적 성장을 확인할 수 있다.

◆ 관객의 삶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온 경기팝스앙상블

요양원, 군부대, 시장, 회사 등 관객이 원한다면 어디든 찾아가는 경기팝스앙상블. 관객의 삶터가 곧 무대인 이들의 문화나눔을 통해 경기도내 문화소외지역민의 마음의 온도가 올라간다. 관객과의 최접점에서 그들의 노고를 위로하며 예술의 감동을 나누는 팝스앙상블의 행보는 2016년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6월 17일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극장에서 이들의 실험적 무대가 관객을 기다린다. /편경희기자 mkh@



성시연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장

경기도립극단
헨릭 입센 '들오리' 등 명작시리즈로 시대와 소통
시공간 넘는 '고전의 힘' 보여주는 웰메이드 연극

경기도립무용단
이미지극 아닌 스토리 중심적인 '우리춤 한마당'
창작 무용극 '황녀, 이덕혜' 대표 공연 자리매김

경기도립국악단
창단 20돌 맞아 '국악칸타타' 등 특별한 무대 선봬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마스터 시리즈·세계적 명연주자와의 협연 등 눈길

경기팝스앙상블
찾아가는 문화나눔 활발… 6월17일 실험적 무대

36.3 X 48.9 cm

기호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01A면 종합

도의원들 "여의도 갑니다" 줄사퇴 예고

총선 리포트 D-91 **내일 공직사퇴 시한 앞두고 6~7명 거론**

강득구 의장, 안양 만안 출사표… 이종걸 원내대표와 경쟁할 듯
조광명, 화성 분구 놓고 막판 고심… 윤은숙 의원은 安 신당行

4·13 총선 공직사퇴일(1월 14일)을 앞두고 경기도의원들의 사퇴가 잇따를 전망이다.

공무원 등 공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려면 선거일 90일 전인 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6~7명가량의 의원이 총선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우선 강득구(민·안양2)의장이 안양시 만안구 출마를 위해 사퇴시한 마지막 날인 14일 의원직을 내려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강 의장은 지난달 28일 출판기념회를 열었으며,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같은 당 소속의 이종걸 원내대표를 향해 지역 현안인 안양교도소 이전 등과 관련된 쓴소리를 내놓고 대립각을 세워 오기도 했다.

새누리당 이승철(수원5)대표의원도 강 의장과 같은 날 사퇴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그는 지역구(수원병) 국회의원인 김용남 의원과 공천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조광명(민·화성4)의원도 화성지역 출마를 염두에 두고 의원직 사퇴 여부를 막판 고심 중이다.

조 의원은 "화성지역 분구가 예상되지만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최종 결정에 대한 고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칠승(민·화성3)의원도 의원직을 사퇴키로 결정했다. 권 의원은 화성 분구 예상 지역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의원직 사퇴에 대한 부분은 이미 결정을 내렸다"며 "당내 공천과 경선 등의 문제가 있어 완전한 출마라 말하기엔 이르지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신당 합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은숙(성남4)의원은 이미 성남 중원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상태로 13일께 의원직을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헌(민·군포1)의원은 의왕·과천지역 출마를 뜻에 두고 사퇴 여부를 조율중인 상태다.

한편,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양주·구리시장 재·보궐선거에서는 안전행정위원회 홍범표(새·양주2)위원장과 안승남(민·구리2)의원이 각각 출마할 것으로 전해졌다.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30일 전인 3월 14일까지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어 실제 의원직 사퇴까지는 다소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22.8 X 21.2 cm

기호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01A면 종합

누리과정 910억 담은 수정예산안 오늘 도의회 처리 가능성은 희박

원안과 동시 상정… 표결 땐 與 불리

경기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2개월분을 담은 수정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예산안 처리를 위해 13일로 예정된 도의회의 본회의 개회 가능성은 안갯속 양상이다.

도는 12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인 910억 원이 추가로 담긴 올해 수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지방세 수입을 늘려 당초 예산안보다 2천억 원이 많은 19조8천55억 원 규모로 수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지방세 수입은 도교육청 전출금, 시·군조정교부금, 시·군징수보조금 등으로 나눠 쓰도록 돼 있어 도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은 2천억 원 중 910억 원이다.

도가 이처럼 수정예산안을 낸 것은 남경필 지사가 앞서 지난 10일 당장의 보육대란을 막겠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도비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도가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지난해 11월 도의회에 제출한 당초 예산안을 수정한 것이어서 이미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가 끝난 만큼 도지사 명의로 도의회에 접수될 경우 예결위의 심의·조정 내용이 담기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도의회 회의규칙 상 의원 17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 예결위가 의결해 본회의에 회부해 둔 올해 예산안을 수정하는 동의안을 발의해 상정해야 한다.

때문에 새누리당은 당내 의원의 찬성만으로 도 의견을 반영한 수정예산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가 열리면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0원'인 사태에서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안과 남 지사의 요청에 따라 새누리당이 발의하는 형식의 수정예산안이 함께 상정된다.

하지만 이 같은 수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남 지사의 2개월분 도비 투입 방안이 전국적 문제로 대두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런 가운데 74대 53의 의석 점유 구조 속에서 수정예산안을 표결하면 부결될 가능성이 크고, 수정예산안이 부결되면 예결위 통과 예산안(원안)을 표결에 부치게 돼 있어 새누리당으로서는 표결 결과에 대한 부담이 뒤따른다.

특히 도의회 더민주가 이날 대표단 회의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 국고 지원' 관철을 위해 예결위 통과 예산안을 처리키로 방침을 세우면서 새누리당은 지난달 31일과 같이 본회의장 점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표결을 의식한 새누리당의 반대로 본회의가 아예 열리지 못하고 파행되거나 본회의 개회 시에도 의장석을 둘러싼 여야의 몸싸움 재현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새누리당 이승철 대표의원은 "수정예산안이 부결되면 예산안 원안이 표결돼 더민주에 처리 여지를 줄 수 있다"며 "13일 오전 9시와 10시 대표단 회의, 의원총회를 거쳐 대응 방침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

11.5 X 20.8 cm

기호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01A면 종합



연장구간 30일 개통… 미리 타 본 '신분당선' 12일 오후 수원시 광교(경기대)역에서 열린 신분당선 연장선(광교~정자) 복선전철 특별시승행사에서 참석자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신분당선 연장선은 오는 30일부터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11.5 X 18.4 cm

기호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01A면 종합

도, 갈피 못 잡는 '일자리재단' 설립

집행부 발의→의원 발의 바꾸겠다…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돌연 철회
추경 편성 등 일정 지연 이유… 오락가락 행정에 안팎서 비난 목소리

경기도가 경기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를 철회했다. 도 집행부 발의가 아닌 의원 발의 방식으로 선회하기 위함인데, 도청 안팎에서 오락가락 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12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일자리재단 설립계획을 발표한 뒤 재단 운영비 120억 원을 올해 본예산안에 담아 지난해 말 경기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조례도 없이 예산부터 편성했다"며 재단 운영비를 전액 삭감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을 설립하려면 관련 조례가 필요하다.

당시 도는 예산안 제출과 함께 의원 발의로 조례 제정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이에 도는 지난 6일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조례안에는 일자리재단이 경기도일자리센터, 경기도기술학교,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의 각종 일자리사업을 통합·수행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러나 도는 입법예고 6일 만인 이날 조례안 입법예고 철회 공고를 냈다. 오는 3월 임시회에서 조례 제정이 가능하고, 추경예산 편성 등 일정을 감안하면 하반기는 돼야 일자리재단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차라리 도의회와 협의 후 뒤늦게라도 의원 발의로 전환해 입법예고를 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행정기관이 입법예고를 철회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 같은 오락가락 행정에 도청 안팎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가 조례안을 제출하는 방식일 경우 일자리재단 설립이 늦춰질 것을 우려해 기획조정실에서 의원 발의 방식으로 방향을 다시 틀어 이달 말 임시회에 조례안을 내기로 한 것"이라며 "실무부서로써도 황당한 행정이라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

23.4 X 8.5 cm

기호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02면 종합

"누리예산 우회지원 될 말인가"

이재정 교육감 교육연정 신경전
남 지사에 "공부하라" 쓴소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남경필 지사에게 '예산 공부 좀 더하라'는 일침을 가하며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는 '교육연정'의 파트너이자 러닝메이트로 뜻을 함께하던 남 지사가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는 것에 대한 섭섭함과 누리과정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가려는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재정 교육감은 12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금까지 한 번도 남 지사를 비난한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누리과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니 그래서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나. '정부가 못하면 경기도가 다하겠다'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 발언"이라고 격양된 목소리로 비난했다.

이어 "도의회와 연정하면서 통합부지사를 뒀는데 이런 과제(누리과정)야말로 통합부지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도 지적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협력사업비 성격으로 우회 지원하겠다는 남경필 지사의 제안에 대해서는 "예산공부 좀 더하시라고 그래요"라는 직설적인 표현으로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전날 '누리과정 예산 지원 방안 설명자료'에서 도가 포괄 교육협력사업비로 교육청에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1안으로 제시하면서 '이런 편성 방식은 교육감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달았다.

도는 교육감이 1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시군에 직접 전출하는 2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누리과정 특위 구성과 김상곤 전 교육감의 위원장 선임 추진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늦은 감이 있지만 지푸라기도 잡아야 할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이날 예산분석 결과 발표로 시·도교육청을 압박한 교육부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토해냈다.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을 위한 교육부인가. 초·중·고 교육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누리과정에 앞서) 초·중·고 교육재정이 근본적인 위기 상황"이라며 "이참에 '누리교육부'로 바꾸지 그러냐. 교육부가 누리과정에만 '올인'하면서 초·중·고 공교육 재정 위기는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완태 기자 myt@kihoilbo.co.kr

20.0 X 9.0 cm

기호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03A면 종합

'도지사 직속' 재난본부 광교신청사 들어가고파

20년된 낡은 건물에 포화 상태 일부 인력만이라도 입주 희망
도, 칸막이 없애고 부서별 소통 강화… 공간 부족에 '유보적'

경기도재난안전본부가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입주를 희망하고 있지만, 도가 유보적 입장을 취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 재난본부는 지난해 10월 광교에 건립 예정인 도 신청사로 본부 이전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도에 전달했다.

지난해 도 재난본부 편제가 도지사 직속으로 바뀐 만큼, 지시나 상황보고 등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해 신청사 입주가 당연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20년이 다 된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공간 부족으로 최근 별관동을 지어 사용하고 있는 점, 오는 2022년까지 4천 명가량의 소방공무원이 신규 채용되는 점 등도 이유로 들었다.

다만 신청사에 도 재난본부 전체가 모두 입주할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여의치 않을 경우, 별도의 상황실을 만들어 일부 상황근무 인력만이라도 입주를 바란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도 재난본부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 7일 있었던 이재율 도 행정1부지사 주재 신청사 '스마트 오피스' 구축 관련 회의에서도 논의됐다.

하지만 도는 재난본부 신청사 입주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신청사에 기둥과 칸막이를 최대한 없애 여러 부서가 한 공간에 머물며 소통을 강화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무실 밖에는 소규모 룸을 셀형으로 다수 배치해 토론 등 소통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다.

앞서 도는 도청사 내부를 구글 본사와 서울대가 최근 신축한 중앙도서관처럼 '스마트+효율적'인 공간으로 꾸미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도 관계자는 "한 개 층을 한 개 실·국이 쓰는 것은 옛날 방식"이라며 "예전처럼 일부 공간을 내주면서 칸막이 치는 것으로 사무실 이전을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도 재난본부가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기 힘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는 "도 재난본부 차원에서도 스마트 오피스 환경에 나름대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재난을 담당하는 부서의 경우 신청사의 층고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 재난본부 측은 신청사 입주를 위해 도와의 논의를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도 재난본부 관계자는 "도에서도 열악한 재난본부 청사, 조직 확대 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논의를 계속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
25.1 X 9.9 cm

기호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03A면 종합

도 "누리과정 예산 지원 위법 아니다"

교육청 "보통교부금으로 지급 명시… 영유아법 위반" 지적에
"다른 주체 부담 금지 조항도 없어… 해석 차이일 뿐" 논란 일축

경기도가 도내 시군에 직접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 법령에 위배된다는 논란과 관련, 도가 법령 해석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논란을 일축하고 나섰다.

1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2개월분 910억 원을 증액한 본예산 수정안을 만들어 도의원 발의로 13일 예정된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도는 취득세 증액, 예비비 투입, 기존사업비 축소 등을 통해 910억 원의 세입을 늘리고 세출 항목에는 '누리과정 지원비'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렇게 수정한 예산안을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확정 지은 후 이르면 12일 도의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교육청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등은 도의 이 같은 직접적 재원부담이 영유아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실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무상보육 실시비용)는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도는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예산부담 주체의 지원까지 금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도 관계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돼 있으나 이는 다른 주체(경기도)가 부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법하다는 뜻이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도는 이 같은 해석을 바탕으로 ▶시군 직접 전출방식 ▶도 교육청 전출방식 등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도는 시군 직접 전출방식의 경우 현행법상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경기도 보육조례 제17조 10호는 도지사는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 교육청의 전출방식은 학생급식, 학교시설 개선 등은 교육청 고유사무이지만 교육협력사업으로 도의 지원이 가능한 만큼 교육청 전출 방식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
14.9 X 13.2 cm

기호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03A면 종합

보육현장 목소리 듣겠다… 도의회 새누리, 유치원 등 릴레이 방문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대표단이 11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를 풀기 위한 어린이집·유치원 릴레이 방문을 이어갔다.

도의회 새누리당은 이날 안양 청명어린이집과 안산 블루밍어린이집을 방문해 누리과정과 관련한 보육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새누리당 대표단은 지난 8일에는 용인과 성남의 어린이집·유치원을 찾았으며, 12일에는 고양의 보육 현장을 찾을 계획이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중앙정부의 설명도 교육청의 설명도 모두 타당성이 있지만 당장 시급한 것은 보육대란을 막는 것"이라며 "당리당략을 떠나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을 생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승철 대표의원은 "새누리당 차원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적극 설득하고 있다"며 "남경필 경기지사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설명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14.8 X 5.5 cm

기호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03A면 종합

도내 화재사고 절반이 '부주의'

지난해 1만333건…63명 사망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지난해 도내에서 총 1만333건의 화재가 발생, 63명이 사망하고 610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도 재난본부가 분석한 화재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4천953건(47.9%)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2천260건(21.9%), 기계적 요인 1천315건(12.7%)등의 순이었다.

부주의화재 중에서는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1천717건(34.7%)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물 조리 682건(13.8%), 쓰레기 소각 643건(13%)이 뒤를 이었다.

장소별로는 비주거 3천556건(34.4%), 주거 2천120건(20.5%), 차량 1천252건(12.1%), 임야 843건(8.2%)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

특히 비주거의 공장과 창고, 음식점에서는 사람이 많이 활동하는 오후 12부터 5시 사이에 화재 발생이 집중됐다.

도 재난본부에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도는 부주의한 화재가 크게 증가했으며, 주로 야외에서 담배꽁초 및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많이 늘었다"라며 "대부분의 화재는 작은 관심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니 생활 속 실천으로 화재예방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나훔 기자
14.9 X 7.0 cm

기호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03A면 종합

도내 스타트업 25억 투자유치 성과

창조혁신센터 육성 프로 12개사 수출 등 성장기반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경기센터)가 육성한 12개 스타트업이 지난 9개월간 매출 15억 원, 투자 유치 25억 원, 신규 고용 30명을 달성했다.

경기센터와 KT는 12일 판교 혁신센터에서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K-챔프 랩' 1기의 첫 성과 발표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K-챔프 랩 1기 스타트업들은 지난해 4월부터 9개월 동안 경기센터에 입주해 사업비용 지원은 물론 금융·법률·특허 자문과 사업모델에 관한 멘토링 등을 지속적으로 받고, KT 내 사업부서와 연계해 기술개발·판로개척·해외진출 등 신생 기업들이 뚫기 어려운 사업 영역에서 전방위로 지원을 받아왔다.

그 결과 울랄라랩은 자체 개발한 스마트 센서 위콘을 기반으로 스마트 공장 플랫폼을 구축하고 KT와 상용화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외 투자회사로부터 22억 원의 투자 유치 협의를 진행 중이다.

홍채 인식 솔루션을 개발한 이리언스는 BC카드와 결제 서비스 개발을 추진 중이다. 싱가포르-말레이시아 국경출입국 사업 관련 양해각서, 중국 과학원과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감시 카메라 제작업체인 유아세이프는 제주 해군기지, KT 주요 보안시설 등에 특수 카메라를 납품했다. 중국 상하이, 장쑤성 등 철도역에도 카메라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성과 발표회와 함께 졸업하는 1기에게는 '포스트 K-챔프 랩'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가천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입주 공간도 제공한다.

경기센터 임덕래 센터장은 "향후 경기센터는 스타트업들과 KT, 미래부, 각종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더 많은 양질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9.9 X 17.9 cm

기호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04면 정치

"무상복지 대법원 제소 말길" 성남시장, 도지사에 촉구

이재명 성남시장이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성남시 3대 무상복지'에 대한 대법원 제소 방침 포기를 촉구했다.

이 시장은 12일 전날에 이어 재차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 제소 여부는 남 지사의 진정성을 판단할 기준이 될 것"이라며 "만약 제소를 강행한다면 이는 명백한 연정 파괴 행위이므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공식적으로 연정 파기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정의 상징인 이기우 부지사가 명시적으로 재의 요구 철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 이를 묵살한 채 야당에 이양한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고 있다"며 "남 지사의 '연정'이 진정한 '연정'이 아니라 국민을 현혹하기 위한 코스프레에 불과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남 지사의 연정 실험은 박근혜 정부의 누리과정 공약 파기를 경기도민의 혈세로 봉합하겠다는 대응에서 이미 절반은 무너졌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제 성남시 복지정책을 무산시키기 위한 대법원 제소 여부가 마지막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4.8 X 15.8 cm

기호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06면 경제

평택상의 신년인사회… "활발한 기업활동으로 더 많은 고용 창출"

평택상공회의소는 12일 대회의실에서 '2016 신년인사회'를 열었다.

신년회에는 이근찬 평택상의 회장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원유철·유의동 국회의원, 공재광 평택시장, 김인식 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임송학 평택해양수산청장, 김용태 평택직할세관장, 상공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이근찬 회장은 "투자와 기회의 도시, 활발한 기업 활동은 앞으로 더 많은 고용 창출이 이뤄져 우리 시의 미래 또한 더 밝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 지사는 축사에서 "세계와 국내는 물론 경기도내 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해는 경기도가 주식회사가 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공유적 경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중소기업들은 더욱 용기를 내 기업 활동을 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9.9 X 7.5 cm

기호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13면 문화

도문화의전당, 경쾌한 연주로 한 해 시작

함신익&심포니 송 오케스트라
16일 음악회서 베토벤 등 선봬

경기도문화의전당은 신년음악회로 '함신익&심포니 송 오케스트라'를 마련, 오는 16일 오후 5시 대극장에서 희망을 담은 새해 첫 연주를 선보인다.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 예일대 교수 자리에 오른 마에스트로 함신익과 그가 이끄는 심포니송 오케스트라가 베토벤 에그몬트서곡과 교향곡 7번 등으로 관객과 함께한다. 또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는 영국 리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지난 1984년 우승을 거머쥔 후 세계 무대를 활약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존 기무라 파커가 이날 신년음악회의 협연으로 나서 모차르트 피아노협주곡 21번을 들려준다.

신년음악회에서 존 기무라 파커가 협연하는 모차르트의 피아노협주곡 21번은 모차르트의 창작력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에 발표된 곡으로 전체적으로는 피아노와 관현악의 대화, 관악기의 아름다운 속삭임과 독백 그리고 서로 앞다투듯 연주되는 경쟁 같은 양상도 연출되며 우아한 정서를 표현하는 곡으로 관객의 귀를 즐겁게 한다. 또한 연주회 시작을 알리는 베토벤의 에그몬트서곡과 후반부에 연주될 베토벤 교향곡 제7번 등으로 베토벤 음악의 다양한 창작 기법을 감상하면서 특유의 긴장감과 감동이 흐르는 연주회를 선사받는다.

도문화의전당 정재훈 사장은 "맑고 경쾌한 리듬의 연주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노훈 기자 nhp@kihoilbo.co.kr

11.6 X 10.8 cm

기호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14면 인물

환자 배려하는 병문안 에티켓 지키기 약속

道, 보건복지부·고양시·건보 일산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허용시간 준수· 응원영상 전달 등 개선 문화 정착 앞장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와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과 함께 '병문안 문화 개선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11월 27일 복지부가 마련한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기준'의 실천과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일산병원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양복완 도 행정2부지사와 방문규 복지부 차관, 김진흥 고양시 제1부시장, 강중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도와 고양시는 도내 병원들의 병문안 문화 개선 참여를 지원·독려하고, 도민 대상 홍보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모범 실천 병원을 대상으로 '병문안 문화개선 우수병원' 마크 및 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모범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일산병원은 일일 병문안 허용 시간을 운영하고 병문안 제한 대상 안내, 단체방문 제한, 감염 예방수칙 안내, 외부 물품 반입 금지 등의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기준'을 실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일산병원은 현재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환자를 응원하는 '영상·편지 전달 문화' 정착 캠페인과 별도의 면회실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병문안 문화 개선 사업을 진행 중이다.



양복완 부지사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 병문안 문화 개선의 목소리가 커졌다"며 "앞으로 건강한 병문안 문화가 지역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26.8 X 13.9 cm

기호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17면 교육/입시/NIE

"누리과정 예산 즉각 편성하라"

유치원총聯 도교육청 앞 성명

보육대란 문제 해결책 찾는 것

"교육 당국·정치권 책임" 주장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회(이하 총연합회)는 12일 경기도교육청 정문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육대란 해결을 위해 누리과정 예산을 즉각 편성·집행할 것을 경기도교육감과 경기도의회에 촉구했다.

총연합회는 성명서에서 "교육당국과 정치권의 다툼으로 인해 아무런 잘못도 없는 35만여 명의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 황당한 사태가 방치되고 있다"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보육대란을 막아낼 문제해결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야 말로 지금 교육당국과 정치권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이와 학부모들의 입장으로 돌아가 사태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누리과정 지원은 시·도교육감의 법적의무인 만큼 어린이들을 보육할 법률적, 사회적 책임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총연합회는 또 "경기도 교육감과 경기도 의회는 더 이상 법적의무 불이행으로 부모님들과 보육현장의 걱정과 불안을 가중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며 "즉각 준예산을 편성해 법령 상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비인 누리과정 예산을 반드시 집행하고 보육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음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회 회장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보육대란을 막아낼 문제해결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지금 교육당국과 정치권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다.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할 때가 결코 아니다"라며 "경기도 교육감과 경기도 의회의 책임방기로 끝내 보육대란이 현실화할 경우, 유아교육 책임자들과 학부모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완태 기자 myt@kihoilbo.co.kr

20.0 X 9.5 cm

기호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18면 사회

성남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주최·시공업자 등에게 실형

지난 2014년 10월 모두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성남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해 행사 주최자와 시공업자 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강동원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행사를 주최한 이데일리TV 총괄본부장 문모(50)씨 등 주최 측 관계자 3명에게 각각 금고 1년 및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또 환풍구 시공 하도급 업체 대표 김모(50)씨에게 징역 1년, 재하도급 업체 대표 김모(48)씨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시공 원청업체 현장소장 김모(49)씨와 원청업체 관계자 정모(49)씨도 각각 금고 2년~2년6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행사대행업자 이모(43)씨는 행사 진행에 필요한 장비 항목으로 국한해 대행계약을 체결한 점을 인정해 안전관리 책임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시공 관계자들이 원래 감리 승인받은 상세 시공도면대로만 시공했다면, 그리고 행사 주최 측이 안전관리 조치만 제대로 했다면 끔찍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대형 인재사고"라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4.7 X 19.9 cm

인천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01(경기판)면 종합



12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광교(경기대)역에서 신분당선 연장선(광교-정자) 복선전철 차량들이 시험운행을 하고 있다(왼쪽). 특별시승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열차를 시승하고 있다. 신분당선 연장선은 오는 30일부터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수원 - 서울 강남 '30분 시대'

경기철도㈜ 신분당선 연장 복선전철 30일 개통 앞두고 첫 시승행사

지역 단체장·시·도의원·주민 150여명 참석 … 교통불편 해소 전망

광역버스 이용 比 '18분 단축' 효과 … 2250원 비싼 기본요금 숙제

수원-서울 강남을 30분만에 연결하는 시대가 열렸다.

경기철도㈜는 분당과 광교신도시를 잇는 신분당선 연장구간 복선전철이 5년 만에 개통을 앞둔 12일 지역 유관단체장과 시·도의원을 비롯한 주민 150여명을 대상으로 첫 시승행사를 가졌다.

오는 30일 오전 5시30분 첫 운행을 시작하는 신분당선 연장선이 강남-광교구간으로 이어지면서 광교에서 강남까지 한 번에 30분대 진입할 수 있어 용인 수지 및 수원 서북부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최첨단 무인운전 시스템(RF-CBTC)을 도입한 신분당선 연장선은 기관사 없이 자동운행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종합관제센터에서 실시간 원격감시 및 전반적인 제어를 하고, 열차제어 및 감시장치(VOBC)로 자동제어·자체진단·자동복구 등 가능해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지금까지 강남에서 판교를 거쳐 정자까지 운행했던 노선을 미금-동천-수지구청-성복-상현-광교중앙(아주대)-광교(경기대)역까지 하루 양방향 320회(출·퇴근시 5분, 평시 8분 간격)운행된다. 운행시간은 평일 막차 익일 1시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24시까지다.

광교중앙(아주대)역 지하1층에는 지하철역사와 버스환승센터가 함께 건립되고 있어 지하철과 버스 환승이 가능해졌다.

이날 시승행사에 참석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은 철도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운행시간 단축과 접근의 편리함은 물론 인적·물적 교류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수원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활력 넘치는 도시, 젊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동안 수원지역 시민들은 강남까지 이동하기 위해 광역버스를 이용해왔다. 그러나 광역버스는 긴 시간이 소요되고 ,이용자가 많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신분당선 연장선이 개통됨에 따라 광역버스 이용대비 약 18분의 단축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황영선 광교1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오랫동안 주민들이 기다려 온 개통식"이라며 "수원지역의 교통난 해소는 물론 서울시민들도 광교신도시를 관광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개통을 반겼다.

하지만 비싼요금은 향후 해결해야할 숙제로 떠오르고있다.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가 적용된 신분당선 연장선은 10㎞ 이내 기본요금이 2250원(후불교통카드 이용 시 2150원)으로 10㎞를 초과할 경우 5㎞당 거리비례운임 100원이 추가된다.

전체구간(광교-강남)을 이용할 시 기본요금에서 거리요금 500원 등 800원이 추가돼 3050원이다.

이같은 내용으로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시행자인 경기철도㈜는 이달 국토교통부로부터 요금체계를 승인받았다.

전체 학생 중 80% 가량이 서울에서 통학하는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관계자는 "교통난으로 통학을 어려워했던 학생들이 복선전철이 개통된다는 소식을 접하곤 너무 좋아하고 있지만, 하루 만 원 가량 하는 교통요금이 너무 비싸서 걱정들도 많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25.8 X 29.2 cm

인천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01(경기판)면 종합

"누리과정 갈등 정치권이 나서야"

남 지사, 올 수정예산안 제출… "여야 지도부에 문제 해결 촉구"

남경필 경기지사가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 지도부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2면〉

남 지사는 12일 도의회에 2개월분 누리과정 예산을 담은 2016년도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후 "지금은 여야 지도부가 국민에게 안정감을 보여줘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교육청의 현재 갈등에 대해 남 지사는 "당신(교육청)에게 준 돈으로 6개월치를 살고, 모자라면 내(정부)가 대줄게 하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국회와 정치권이 회의체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누리과정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예산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며 "새누리당도 대책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의 이같은 발언은 도가 2개월분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부담하겠다는 제안에 대해 도교육청과 도의회 야당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거부입장을 밝히자, 시급한 보육대란을 막은 이후 누리과정에 대한 해법을 여야 지도부에 재차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 지사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고 싶다. 이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교육부총리, 경제부총리와 만나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더민주당과 새누리당 지지율이 하락곡선을 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야가 누리과정 문제해결 능력을 보여줘야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13일 예정된 도의회 임시회에서 새해 예산안 처리가 가능할지에 대해 "기대는 하고 있지만, 도의회가 할 일"이라면서도 "전남교육청의 해법이 기대를 갖게 한다"고 말했다.

전남교육청은 이날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 목적예비비 3000억원이 풀린다는 전제 하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으로 일부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도 시의회가 전액 삭감한 올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521억원을 다시 편성해 달라고 지난 11일 시의회에 요구한 상태다.

남 지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대통령께 자꾸 대답하라고 하면 더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정치권이 풀어주는게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19.4 X 16.0 cm

인천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01(경기판)면 종합

道 일자리재단 설립·운영 조례

입법예고 이틀 만에 '돌연 철회'

"의원 발의 형식 재추진…이달 말 임시회 제출"

경기도가 통합취업지원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일자리재단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일 입법예고했던 조례를 이틀만에 돌연 철회한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었다.

그동안 도는 법적 근거도 없이 재단 설립을 추진하다가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리자 뒤늦게 조례 제정에 나서는 등 졸속 추진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12일 도에 따르면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 27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일자리재단은 경기도일자리센터, 경기도기술학교,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의 각종 일자리 사업을 통합·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입법예고 이틀만인 지난 8일 도는 조례안 입법예고 철회 공고를 냈다. 행정기관이 입법예고를 철회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 일자리재단 설립 계획을 발표한 뒤 재단 운영비 120억원을 올해 본예산안에 담아 지난해 말 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조례도 없이 예산부터 편성했다며 재단 운영비를 전액 삭감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을 설립하려면 관련 조례가 필요하다.

당시 도는 예산안 제출과 함께 의원 발의로 조례 제정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이처럼 당초 이달 설립을 목표로 했던 일자리재단 출범이 불가능해지자 집행부 제출 방식으로 변경해 지난 6일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럴 경우 3월 임시회에서 조례 제정이 가능하고 추경예산 편성 등 일정을 감안하면 하반기나 돼야 일자리재단 운영이 가능하다는 판단, 도가 입법예고를 철회했다.

도 관계자는 "집행부가 발의하는 형식보다 의원 발의 형식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이달말 임시회에 조례안이 다시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9.1 X 21.1 cm

인천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02(경기판)면 종합

남 지사, 누리과정 2개월분 포함 수정예산안 도의회 제출

강득구 의장·양당 대표 "예산공백 상태 해소"…오늘 본회의 처리 미지수

與·野 합의점 도출 '뾰족수' 있나

경기도의회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누리과정 2개월분이 담긴 수정예산안에 대해 여·야간 의견을 좁히지 못해 13일 예정된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2016년도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12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 910억원을 포함한 수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수정예산안 규모는 지난해 11월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보다 2000억원 늘어난 19조8055억원이다. 2000억원은 취등록 세입으로 충당되며, 도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910억원이다. 다른 예산은 도교육청 전출금, 시군조정교부금, 시군징수보조금 등으로 나눠 쓰게 돼 있다.

도는 도의회가 수정예산안 가결 후에도 2월 말까지 누리과정 예산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3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할 계획이다.

도의 수정예산안은 도의회 회의규칙상 의원 17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의원발의 형식으로 본회의에 상정이 가능하다.

강득구 도의회 의장과 양당 대표는 13일 오전 11시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 공백 상태를 해결한다는데까지 협의를 마쳤다.

하지만 도의회 여·야는 수정예산안과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안을 놓고 협의점 도출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민주는 이날 오후 4시 대표단 회의를 열어 논의에 들어갔지만, 우선 2개월분 누리과정 예산을 투입한 후에도 해답을 찾지 못할 경우 경기도가 빚을 내 책임진다는 남 지사의 제안이 '미봉책'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지난달 31일 본회의장에서 일어난 여·야 '몸싸움'을 재현하지 않겠다는 것에 다수 의원들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도 같은 날 오후 5시 대표단 회의를 열어, 누리과정 예산안에 대한 양당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임시회 소집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 한 의원은 "야당이 예산안 '날치기' 등 돌출행동만 하지 않는다면 본회의장 점거나 몸싸움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야당 대표단 회의 결과에 따라 새누리당이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 기자 lee@incheonilbo.com

23.4 X 13.4 cm

인천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02(경기판)면 종합



"새해에도 희망차게"

12일 오후 평택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106년 평택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서 남경필 경기지사가 신년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17.5 X 11.9 cm

인천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02(경기판)면 종합

"남 지사,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제소 포기를"

이재명 시장 "명백한 연정 파괴 행위…강행땐 공식적 파기 요구"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성남시 3대 무상복지'에 대한 대법원 제소 방침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대법원 제소 여부는 남 지사의 진정성을 판단할 기준이 될 것"이라며 "만약 제소를 강행한다면 이는 명백한 연정 파괴 행위이므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공식적으로 연정 파기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남 지사는 더민주당에 복지에 관한 권한을 넘기는 조건으로 '연정'을 선언하고 사회통합부지사로 더민주당 이기우 부지사를 임명했다"며 "그런데, 남 지사는 중앙정부와 새누리당의 지시에 따라 성남시 복지정책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며, 더민주당의 핵심가치인 복지확대와 자치분권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 연정의 상징인 이기우 부지사가 명시적으로 재의 요구 철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채 야당에 이양한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고 있다"며 "남 지사의 '연정'이 진정한 '연정'이 아니라 국민을 현혹하기 위한 '연정 코스프레'에 불과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도가 수원시를 제외하고 성남시에만 재의요구를 지시한 것에 대해 이 시장은 "결국 재의요구가 법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라 정략적인 선택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 지사는 성남시 3대 복지정책에 대한 대법원 제소 포기를 선언하라"며 "이것이 '연정'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김아라 기자 ara@incheonilbo.com

23.4 X 7.3 cm

인천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02(경기판)면 종합

고양시 '한류월드 사업' 10여년 만에 개발 윤곽

씨제이이앤엠 협상 마무리…2020년 완료 전망

고양시 대화동 일대 99만4756㎡에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는 한류월드 사업이 10여년 만에 개발윤곽을 드러냈다.

경기도 한류월드사업단 관계자는 "K-컬처밸리 우선협상대상자인 씨제이이앤엠(CJ E&M)과 사업내용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께 부지공급계약을 마치면 한류월드 사업은 사업자가 모두 정해진다"고 1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한류월드 사업은 K-컬처밸리를 비롯해 호텔 7곳, 주상복합아파트 2300여 가구, EBS 디지털 통합사옥,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빛마루')로 구성된다.

현재까지 대명 엠블호텔(377실)과 빛마루 신축 등 2개 사업만 완료된 상태지만 2020년 이전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전망이다.

옛 테마파크 부지와 상업시설 부지 33만㎡에는 씨제이이앤엠이 1조원을 투자해 K-컬처밸리 사업을 추진한다.

K-컬처밸리는 2000석 규모의 융복합공연장, 객실 수 270실 규모의 호텔, 한류 체험 및 전시시설을 갖춘 테마파크, 상업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이 사업은 연내 공사를 시작해 2018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호텔 부지 7곳도 모두 사업자가 선정됐다.

대명레저산업은 현재 엠블 호텔 인근에 290실 규모의 가족호텔을 지을 계획이며 인근 A3부지 1만452㎡에는 252실 규모의 한류월드호텔이 들어선다. 또 A7 부지 등 2곳에는 SM관광호텔과 세계KRT가 각각 384실, 724실 규모의 호텔을 건설한다.

씨제이이앤엠은 K-컬처밸리에서 제외된 A6 부지에 800실 규모의 호텔을 계획하고 있어 한류월드에는 모두 3000실 안팎의 호텔이 건립될 예정이다.

M1~M4 부지에 현대건설·GS건설·포스코건설 컨소시엄과 에이스산업이 2300여 가구의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도 현재 고양시에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연내 착공을 앞두고 있다.

2014년 8월 착공한 EBS 디지털통합사옥 건립사업도 2017년 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EBS 디지털통합사옥은 부지면적 1만4000㎡, 연면적 6만1000㎡에 지상 20층, 지하 3층 규모로 지어진다. /연합뉴스

11.6 X 22.1 cm

인천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03(경기판)면 종합

도, 돼지구제역 백신항체 양성률 크게 향상
〈68.2%〉

2014년比 23.5%↑… "백신 효과적" 농가 인식 한몫

경기도가 지난해 구제역 방역사업을 실시한 결과, 돼지 구제역 백신항체(SP) 양성률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도에 따르면 연구소가 지난해 돼지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방역사업을 실시한 결과, 돼지의 구제역 백신항체 양성율이 68.2%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44.7%보다 23.5%가 향상된 것이다.

돼지에서 항체양성율이 크게 높아진 것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일제접종과 발생 위험성이 높은 경우 백신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농가의 인식이 한 몫 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연구소는 효과적인 면역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항체 양성율이 80% 수준이 돼야 한다며 '방심은 금물'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구제역이 현재 국내에서 완전히 종식됐다고 보기에는 이르기 때문이라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구제역 야외바이러스'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돼지 4만3496두를 대상으로 항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도내 농가 72곳에서 감염항체가 검출됐다. 현재까지도 타 시·도에서 종종 검출되고 있어 바이러스 순환 감염이 우려되고 있다.

임병규 도 축산위생연구소장은 "현재 전국 돼지농장에서 야외감염 항체가 계속 검출되고 있는데다 주변국에서 상시 발생되고 있어 백신접종이 제대로 이뤄져 있지 않거나 출입통제, 소독 등이 완벽하지 않으면 언제든 재발할 위험이 있다"며 "백신접종을 철저하게 실시해 항체수준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도 축산위생연구소는 돼지농장 1321곳의 사육돼지에 대해 백신접종여부 항체검사를 강화 실시할 방침이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17.7 X 12.4 cm

인천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09면 경기

독산성 예전모습 되살려 세계문화유산 편입 추진

오산시, 대대적 복원 계획
2025년까지 262억원 투입
수원화성·용주사 등 묶어
유네스코 확대 등재 예정



조선 22대 영조대왕의 효심이 깃든 경기도 오산시 독산성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비 복원사업이 추진된다. /사진제공=오산시

조선 22대 영조대왕의 효심이 깃든 경기도 오산시 독산성(禿山城)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비 복원사업이 추진된다..

오산시는 2025년까지 262억원을 들여 국가사적 140호인 독산성(성벽 둘레 1095m)에 대한 정비 및 복원사업을 끝내고 수원화성, 화성용주사의 융·건능, 독산성, 궐리사를 하나로 묶는 세계문화유산 확대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독산성과 세마대지 복원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용역을 발주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2021년까지 시굴과 발굴을 할 계획이다.

2022~2025년에는 성곽내 시설물 정비 및 복원 등 활성화 사업을 벌여 기록에 남아있는 운주당(運籌堂), 진남루(鎭南樓), 장교청(將校廳), 관청(官廳) 등 13개 시설을 복원한다.

시는 특히 독산성 정상에 위치한 세마대(洗馬臺)에서 아래쪽으로 장군들이 회의를 하던 운주당과 삼문(三門), 진남루가 일직선상에 위치해 있을 것으로 보고 복원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독산성에는 현재 성문 5개소(동·서·남·북·암문)와 세마대, 보적사(寶積寺)만 남아있다.

시는 복원이 완료되면 1997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수원화성과 화성용주사 융·건능에 독산성과 궐리사(공자 성현을 모신곳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담당)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백제 온조왕(BC 8)때 축성한 것으로 알려진 독산성은 선조 26년(1593년)에 전라도 관찰사 권율장군이 백마를 산 위로 끌어올려 흰 쌀을 말에 끼얹으며 말을 씻기는전략으로 왜군을 퇴각시켜 '세마대'로 불린다.

선조 35년에는 돌로 성을 다시 쌓아 경기남부 요해처로 삼았고, 정조대왕은 수원 능행차 시 독산성을 들러 마을 촌로를 위로하고 활을 쏘았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시 관계자는 "독산성은 수원화성과 같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어야 하는데 당시 지자체가 다른데다 소홀히 하는 바람에 제외됐었다"며 "정조대왕의 효심이 깃든 독산성에 대한 정비와 복원을 마무리해 세계문화유산 확대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산=이상필 기자 spiee1004@incheonilbo.com

17.5 X 21.6 cm

인천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11면 사설/칼럼

준예산, 언제까지 방치하나

경기도는 지금 비상시국이다.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준예산 사태를 맞았으나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문제를 풀어야할 각 주체들의 긴박한 움직임 속에서도 아직 이렇다 할 해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각각의 입장차이만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도지사는 도비를 투입해서라도 풀어가겠다는 입장이고, 교육감은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며 맞서고 있다. 이런 입장 차이는 도의회 여와 야,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입장을 가르는 기준이 되고 있다. 원인이야 어디서 비롯됐건 간에 이대로라면 부담은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생겼다. 어떻게든 결론이 필요하다.

도의회가 13일 임시회를 연다. 도의회가 가장 중요하다. 이번에야 말로 도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주어진 책임과 소명을 완수하고 스스로 그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신망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주기 바란다.

도의회는 이번 준예산 사태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예산안 처리는 도의회의 마땅한 권한이면서 동시에 무한책임이 따르는 의무이다. 사태를 여기까지 끌고 오는 과정에서 도의회가 보여준 역량은 도민들에게 실망과 상처를 안겨줬다. 이유야 어쨌든 무책임 했고, 무능력했다. 다수당인 야당지도부는 좀 더 치밀하고 세련된 전략을 구사해야 했다. 탁월한 조정능력을 발휘했어야 한다.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가 역부족이었다면 적어도 여당과의 협상과정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라도 충분히 보여줬어야 한다. 그러나, 아쉽지만 지나간 일은 그렇다 치자. 이제부터라도 이 무겁고 엄중한 현실을 제대로 바라봐야 한다. 지금은 같은 결과를 반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를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쉽게 타협하고 극복할 수 있는 차이를 넘어서는 것이야 누군들 하지 못하겠는가.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 게 진짜 정치다. 그것이 정치가 존재해야 할 이유이며 숙명이다.

도의회뿐이 아니다. 각 기관들도 근본적인 입장과 태도에만 매몰되지 말고,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12.0 X 14.9 cm

인천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15면 문화

신선하고 친근하게 대중 곁으로



경기도문화의전당 2016년 프로그램

지난해 경기실내악축제, 문화나눔 Win-Win 영아티스트 콘서트, DMZ2.0 음악과 대화 등 기존 공연문화의 틀에 벗어나 새로운 시도로 도민들의 문화향유 증대에 애써온 경기도문화의전당. 올해는 아시아 최초로 시도되는 세계적인 음악가 리카르도 무티의 아카데미, 천재 연주자 핀커스 주커만이 참여하는 경기실내악축제, Win-Win 영아티스트 시즌2 등 기획공연과 도립예술단의 지난해 보다 한층 업그레이드 된 공연들을 마련해 도민들과 함께 호흡한다. 기획 프로젝트로는 2016 경기실내악축제, 리카르도 무티의 아카데미, 브런치 콘서트 등이 마련됐다.

▲무티의 아카데미·경기실내악축제

전당은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과 레너드 번스타인 뒤를 잇는 세계적인 명 지휘자 '리카르도 무티'(사진)를 초청해 '경기 리카르도 무티 아카데미'를 5월에 연다. 지휘, 성악, 오페라코치 등 세 가지 파트로 분류했고 아시아에 거주하는 음악전공자를 대상으로 한다. 작년 7월 이탈리아에서 처음 시작된 이후 아시아 최초이자 전 세계 두 번째로 진행돼 그 의미가 남다르다. 또한, 아카데미에서 트레이닝 된 음악도 들은 5월 중에 연주회도 가질 예정이다.

올해 2회째인 '경기실내악축제(4·5월)'에는 천재 연주자로 불리는 핀커스 주커만이 함께한다. 주커만은 이스라엘 출신으로 레멘트리 국제 콩쿠르(1967)과 최고의 실내악 연주 그래미 어워드(1981) 등 20세기 후반부에 등장한 가장 걸출한 음악가 손꼽힌다. 두 번의 세션으로 진행되는 이번 실내악축제에 첫 번째는 핀커스 주커만이 맡았다. 실내악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고밀도의 호흡과 연주스킬 등 세계 최정상의 아티스트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두 번째 세션에는 음악감독 강동석과 국내외 정상급 아티스트가 대중에게 좀 더 친숙하고 대중적인 실내악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책과 음악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지는 '책 읽는 공연장'은 3월부터 연간 4회가 진행된다. 책을 중심 콘텐츠로 하는 공연은 글 작가와 음악가가 함께하는 새로운 브랜드 공연이다.

이 밖에도 재즈, 퓨전, 클래식 등을 '클래식 기타 콰르텟' 따위로 해석해, 이야기와 음악이 함께하는 '브런치 콘서트', 경기도국악당 활성화와 창작국악공연 확대를 위해 지역예술인의 참여와 창작의 범위를 넓혀주기 위한 '지역예술인 아우르기' 등도 진행된다.

5월 亞최초 무티 아카데미 개최

주커만과 함께 경기실내악축제

신예 발굴 영 아티스트 콘서트

▲문화복지 프로젝트·신예 발굴 멘토링

문화복지 프로젝트로는 지난해 젊은 음악가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Win-Win 영아티스트 콘서트 시즌2'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는 분들의 삶과 희생정신을 공감하기 위한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마련됐다.

특히 유망한 신예를 발굴해 멘토링과 독주무대, 오케스트라와 협연 등 다양한 기획으로 국제무대 발판을 만들어 주기 위한 'Win-Win 영아티스트 콘서트 시즌2'에는 지난해 바이올린 계 거장 바딤 레핀에 이어 피아니스트 존 키무라 파커를 비롯한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마스터클래스를 진행한다.

▲도립예술단 다채로운 기획

다채로운 기획 프로젝트와 아울러 도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문화 저변 확대에 선두 역할을 하는 도립 예술단들의 활약도 기대된다.

경기도립극단(예술단장 김철리)은 고전을 통한 시대와의 공감과 소통에 나선다. 명작시리즈 노르웨이 국민극작가 헨릭 입센의 '들오리(5월), 프랑스 고전 희극의 거장 몰리 에르 ' 귀족 수업(12월) 등, 김철리 예술단장의 특유의 현대적 어법과 극단 배우의 명품 연기가 더해져 명작시리즈로 웰 메이드 연극의 정수를 경험할 수 있다. 또한 극단은 관객과 좀 더 긴밀한 공감을 끌어내기 위한 스킨십도 함께한다. 가족 극 '내 마음 고향 언덕에(2월)', 서부극 '스니키 휘치의 부활(8월)', 7년째 이어진 정신건강 프로젝트로 자살예방과 생명에 대한 사랑의 메시지가 담진 '4번 출구'는 4월부터 도내 곳곳을 찾아간다.

한국의 춤과 경계, 그 너머에서 만난 무한한 가능성을 넘나드는 경기도립무용단(단장 김정학)은 스토리 중심적인 무용극을 선보인다. '심청가(7월)', '춘향가(8월)', '흥보가(9월)', '수궁가(10월)' 등 판소리 다섯마당 등을 선보여 감각적인 이미지 극이 주류인 무용계에 한국 춤의 대중화를 꾀했다. 또한 작년 관객들로 많은 호평을 받은 '황녀 이덕혜(6월)'도 올린다.

올해 창단 20주년을 맞는 경기도립국악단(예술감독 최상화)은 현재의 우리네 삶과 맞닿은 우리 음악을 찾기 위한 행보를 이어간다. 아시아 민요에서 국악의 가능성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아시아 음악회(4월)', 역대 도립국악단 예술단장과 조우가 기대되는 '국악 칸타타(8월)', 국보급 문화재 명인과 명창이 함께하는 '레전드, 대한민국음악제(11월)' 등이다.

낯선 클래식의 부흥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단장 성시연)는 다양한 레퍼토리 확장으로 명실공이 국내 최정상의 오케스트라로 입지를 굳건히 다질 계획이다. '멘델스존과 동시대의 음악' 주제로 총 5편의 마스터 시리즈(3월·6월·7월·10월·11월)를 선보인다. 멘델스존, 브루크너, 말러 외 쇤베르크 등 제2빈악파까지 다룬다.

요양원, 군부대, 시장 등 관객이 원하는 곳 어디든 찾아가는 경기팝스앙상블(예술감독 원영조)은 문화 나눔을 통해 문화 소외지역민의 마음을 두드린다.

/정태영 기자 jty1414@incheonilbo.com

35.5 X 17.5 cm

인천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18(경기판)면 사회

경기 신보·道가족여성硏 도 산하기관 중 가장청렴

50명 이상·미만기관 분류
설문 조사·시책평가 결과

경기도 산하 26개 공공기관 중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가장 청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6월 민원인 8044명(외부청렴도)과 공공기관 직원 2515명(내부청렴도) 등 1만5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같은해 10월 각 기관별 부패방지 시책에 대한 평가를 종합한 결과를 12일 이같이 발표했다.

전국 최초로 실시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조사는 남경필 경기지사의 특별지시로 추진됐다.

이번 조사는 정원 50명 이상인 기관과 미만인 기관을 나눠 실시됐다.

종합청렴도는 외부·내부 청렴도 및 부패방지시책 평가결과를 합산하고 부패사건 및 신뢰도 저해행위에 대해 감점을 적용해 10점 만점으로 산출했다.

설문 내용은 외부청렴도의 경우 ▲금품·향응·편의 제공 직·간접 경험 유무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여부, 연고 관계에 의한 업무처리 ▲알선·청탁·압력 행사 유무 ▲사익추구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공개성등 19개 항목이다. 내부청렴도의 경우 ▲업무처리 투명성 ▲책임성, 금품·향응·편의 제공 직·간접 경험 유무 ▲여비·업무추진비 부당집행 경험과 빈도 ▲부당한 업무지시 ▲복지부동 ▲책임회피 등 35개 항목을 조사했다.

정원 50명 이상인 기관 중에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8.66점으로 가장 높은 청렴도를 기록했고, 경기관광공사(8.62점),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8.45점)가 뒤를 이었다.

50명 미만의 기관 중에서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8.97점으로 가장 높았고,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 재단(8.4점), 경기테크노파크(8.22점) 등의 순이었다.

외부청렴도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는 지난 1년간 친지·동료 등의 주변사람들이 관련 직원에게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한 적이 있다고 답변한 부패 간접 경험률(7.15점)로 나타났다.

정원 50명 이상의 기관만 실시한 내부청렴도 조사에서는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실효성(6.57점) 항목과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 비율(5.04점) 항목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11.6 X 21.1 cm

인천일보

2016년 01월 13일 (수)
19(경기판)면 사회

'성남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시공업체·행사 주최자 실형

법원 "안전불감증 대형 인재"
행사업체 대표는 무죄 선고

2년 전 27명의 사상자를 낸 성남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의 행사 주최자들과 시공업체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강동원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환풍구 시공 하도급 업체 대표 김모(50)씨에게 징역 1년, 재하도급 업체 대표 김모(48)씨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시공 원청업체 현장소장 김모(49)씨에겐 금고 2년6월에 벌금 200만원, 원청업체차장 정모(49)에겐 금고 2년에 벌금 200만을 선고했다.

사고당시 행사를 주최한 이데일리TV 총괄본부장 문모(50)씨 등 주최측 관계자 3명에겐 각각 금고 1년 및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또 시공사 법인 3곳에 대해선 각 벌금 200만~1000만원이 내려졌다.

반면 구속기소된 행사업체 대표 이모(42)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시공 관계자들이 원래 감리 승인받은 상세 시공도면대로만 시공했더라면, 그리고 행사 개최측이 안전관리조치만 제대로 했다면 끔찍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대형인재 사고"라고 판시했다.

또 "일부 피고인은 신속한 사고원인의 규명이 필요함에도 대책회의를 열어 공사에 관한 자료 등을 조직적으로 파기·삭제하고, 사실관계 일체를 부인하거나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를 어렵게 했고, 책임을 다른 피고인에게 전가하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행사대행업체 대표에 대해선 "행사주최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안전관리 항목은 빼고 행사진행에 필요한 장비항목으로 국한해 계약을 체결했다"며 안전관리 책임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해 무죄라고 결정했다.

/성남=김아라 기자
ara@incheonilbo.com

23.4 X 7.8 cm

연합뉴스
2016년 01월 12일 (화)
종합

"보육대란은 안돼"...누리예산 편성 지자체 확산

"경기도·평택·수원, 강원 영월·강릉, 전남도 예산 편성하겠다"

"어린이집 누리 과정은 국가 부담"…법령 위반 가능성 제기

(전국종합=연합뉴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사태와 관련해 '보육 대란'이 우려되자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교부금으로 지원하게 돼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 법령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됐다.

◇ "보육대란 막자"…경기·강원·전남 지자체 예산 편성 '도미노'

경기도는 12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 910억원을 담은 수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남경필 지사가 앞서 1~2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도비로 지원하고 나서, 2개월 내에 정부가 보육 대란 해법을 마련하지 않으면 올해 전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도가 책임지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경기 평택시도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보육대란을 막고자 오는 25일~2월 5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추경을 통해 누리과정 6개월분 예산 102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예산이 편성되면 이르면 이달 말께 누리과정 관련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평택시가 선제적으로 추경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 집행키로 했다"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에 위배돼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 시장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 8일 경기 31개 시군 가운데 최초로 시민의 불안을 해소시켜야 한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시비를 투입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수원시는 이달 중순까지 경기도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올해 시 예산에 편성된 '누리과정 운영 예산'에 해당하는 159억원을 시비로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강원도에서도 영월군과 강릉시가 잇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영월군은 강원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군비 11억원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강릉시도 도교육청으로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내려오지 않으면 100억원 을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정부가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편성한 목적예비비 3천억원이 풀린다는 전제하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하기로 했다.

전남교육청은 228억원을 받으면 일단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3개월분을 책정,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 전액 삭감됐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83억원도 넣어 도의회에 추경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 부담"…지자체 직접 예산 지원 논란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법적 논란도 일고 있다.

강원 18개 시·군 가운데 가장 먼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영월군은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재정 교부금으로 충당하게 돼 있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영월군의 한 관계자는 "만 3~5세 아동 보육비는 지방재정 교부금법 시행령에 교부금으로 편성하게 돼 있어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법령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부분은 정부가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귀띔했다.

강원도 관계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보육 혼란을 막고자 일부 지자체장이 결단을 내린 것 같다"면서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나중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 다른 예산을 쓰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직접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하자 경기도의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무상보육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무상보육 실시비용)는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규정, 국가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경기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는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며 "정치적 목적이 앞서 법률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기도는 이 조항이 다른 예산부담주체의 지원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어서 위법하지 않다고 입장이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교육감)는 이날 "정부는 보육대란 사태를 악화시키는 일련의 행위를 중단하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근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해용·김인유·최찬흥·형민우 기자)

dmz@yna.co.kr

14.4 X 34.5 cm

연합뉴스
2016년 01월 12일 (화)
종합

경기도의회 13일 임시회...누리과정 놓고 재충돌 예고

더민주 "남경필 수정안 거부"…새누리 "0원 누리예산 저지"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여야가 임시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과 관련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본회의장에서 다시 충돌할 것으로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누리과정TF팀은 12일 오후 긴급회의를 열어 남경필 지사의 수정예산안을 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누리과정TF팀 관계자는 "남 지사가 2개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910억원을 담은 추경예산안을 제출했지만 이는 인기영합적 발상인 만큼 해당 예산안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발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면 이를 부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신 예결위를 통과한 누리과정 '0원 예산'을 포함한 예산안 원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새누리당이 의장석을 점거하더라도 지난번처럼 원안 가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도 대표단 회의를 개최해 누리과정 예산 910억원과 도 역점사업 예산을 추가한 수정예산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대표단 관계자는 "의원 발의에 17명 이상이 필요하고 필요 인원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며 "더불어민주당에서 우리당의 수정예산안을 부결시키고 원안을 통과시키려 할 경우 분명하게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당은 13일 오전 9시 의원총회에서 이날 결정사항에 대해 추인을 받을 예정이다.

도의회는 13일 오전 11시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올해 도와 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도의회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은 끝에 지난달 31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준예산 사태와 함께 보육 대란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의장석을 점거한 새누리당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간에 거친 몸싸움이 빚어져 다수 의원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폭력사태까지 벌어졌다.

chan@yna.co.kr

14.4 X 15.5 cm

연합뉴스
2016년 01월 12일 (화)
종합

경기도 2개월분 누리예산 910억 담은 수정예산안 제출(종합)



남경필 "보육대란 해법 안나오면 경기도가 책임"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남경필 경기지사가 10일 보육대란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남 지사는 "보육대란 문제에 대한 해법이 안 나오면 경기도의회와 협의해 이번에는 경기도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2016.1.10 << 경기도 제공 >> chan@yna.co.kr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12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 910억원을 담은 수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남경필 지사가 앞서 1~2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도비로 지원한 뒤, 2개월 내에 정부가 보육 대란 해법을 마련하지 않으면 올해 전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도가 책임지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지방세 수입을 늘려 잡아 당초 예산안보다 2천억원 많은 19조8천55억원 규모로 수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지방세 수입은 도교육청전출금, 시군조정교부금, 시군징수보조금 등으로 나눠 쓰게 돼 있어 도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2천억원 가운데 910억원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의 수정예산안은 작년 11월 도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2천억원을 더한 것으로 도의회 회의규칙상 의원 17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뒤 의원 발의 형식으로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작년 11월 제출 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가 끝난 만큼 새누리당 의원들이 도의 수정예산안을 다시 고친 제3의 수정예산안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강득구 도의회 의장과 양당 대표는 13일 오전 11시 임시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안과 새누리당이 발의하는 제3의 수정예산안이 함께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의회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은 끝에 지난달 31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준예산 사태와 함께 보육 대란에 직면했다.

chan@yna.co.kr

연합뉴스
2016년 01월 12일 (화)
종합

누리과정 예비비 3천억 바로 푸나...보육대란 해법 기대

이르면 열흘 내 집행 가능…교육청 추경 여부 따라 선별 지원 가능성도

(서울·세종=연합뉴스) 이윤영 황희경 기자 = 서울과 전남 등 일부 교육청들이 정부의 목적예비비 지원을 전제로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나마 편성하겠다는 뜻을 밝혀 목전의 보육 대란을 피할 길이 열릴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국회가 올해 예산안에 누리과정 우회지원용으로 책정한 목적예비비 3천억원을 정부가 바로 집행하는 것을 전제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5개월분을 추경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1.5개월분'은 한해 12개월치를 모두 편성하라는 정부의 요구에 비하면 '새 발의 피' 수준이지만 한 푼도 편성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과 비교하면 그나마 진전된 안이라고 볼 수 있다.

전남교육청 역시 이날 예비비 3천억원이 풀린다는 전제하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3개월분을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남경필 경기도 지사도 이날 "전남교육청 등의 해법이 기대를 갖게 한다"고 말해 예비비 우선 지원을 통한 누리예산 해법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미리 일정액을 책정해 두는 금액을 말한다.

국회는 지난해 말 누리과정 예산 책정에 따른 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이 심화하자 예비비 3천억원을 책정해 누리과정에 '우회지원'하도록 하고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명목상 학교 재래식 변기 교체, 찜통교실 해소 등에 이 3천억원을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여유가 생긴 돈을 누리과정에 쓰도록 한 것이다. 일종의 '편법 국고지원'인 셈이다.

정부와 국회는 그 전년도에도 예비비 5천64억원 우회 지원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한 바 있다.

교육부도 예비비 조기 집행을 통한 누리과정 예산 충당을 해법 가운데 하나로 모색하고 있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한 추경예산안을 이날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는데, 제출 여부와 누리예산 편성 여부 등을 살펴본 뒤 예비비 지원 방안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예비비는 기재부 소관 예산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예비비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등의 세부 사항을 결정해 기재부에 예산 집행 신청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재부가 안건을 국무회의에 부치고, 국무회의에서 안건이 통과하면 예비비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각 시도 교육청의 추경안 제출 시한이 12일까지이고, 국무회의도 매주 화요일마다 열린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략 열흘 가량이면 예비비 배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교육부는 그러나 서울, 전남 교육청처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체가 아닌 일부만 편성하는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면서 1년치 예산을 다 짜는 것을 전제로 예비비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못박았다.

따라서 교육부가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추경 예산안을 교육부 요구대로 작성해 제출한 시도에 대해서만 예비비를 선별 배분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각 교육청 역시 예비비 3천억원이 지원되더라도 누리과정 전체 예산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맞서고 있다.

실제 서울의 경우 교부율 기준에 따라 3천억원의 16.5%인 495억원, 전남은 7.6%인 228억원을 교부받게 되는데 이는 실제 서울의 경우 어린이집 1.5개월분, 전남은 3개월분에 불과한 액수이기 때문이다.

서울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1개월 소요액이 317억원, 전남은 79억원 가량이다.

이보형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은 "예비비 3천억원 외에 순세계잉여금(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면 교육청이 12개월치 예산을 전부 다 짤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yy@yna.co.kr

연합뉴스

2016년 01월 12일 (화)
종합

의정보고하는 김학용 의원



(안성=연합뉴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12일 오후 경기도안성 시민회관에서 제19대 국회 종합의정보고회를 하고 있다. 왼쪽은 남경필 경기도지사. 2016.1.12 << 의원실 제공 >>

photo@yna.co.kr

14.4 X 12.0 cm

연합뉴스
2016년 01월 12일 (화)
종합

경기소방, 지난해 오인출동 하루 45번꼴...전국 최다

도내 화재 건수 1만333건…63명 숨지고 610명 다쳐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도 소방이 지난해 1년 동안 하루 45번꼴로 화재 오인 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2015년 오인출동은 모두 1만6천415건이다.

같은 기간 전국 오인출동 건수(6만1천549건) 가운데 26.6%를 차지, 전국에서 최다 출동 건수를 보였다.

사유별로는 '연기'가 5천90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보오동작' 2천740건, '타는 냄새' 1천676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해충 퇴치를 위한 연막소독으로 말미암은 출동도 183건에 달했다.

지난 5일 여주소방서는 "한 공사장에서 불이 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신속히 현장에 출동했으나, 공사장 관계자들이 추위를 피해 피워둔 모닥불 연기가 화재로 잘못 신고된 것으로 확인했다.

같은 날 시흥에서도 "산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지만,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다.

한 소방 관계자는 "시민의 투철한 신고 정신이 화재 초기 진압에 큰 도움이 되지만, 정확히 확인하고 나서 신고하면 오인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도재난안전본부는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1만333건으로 63명이 숨지고 610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 4천953건(47.9%), 전기적 요인 2천260건(21.9%), 기계적 요인 1천315건(12.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주의 화재 가운데 담배꽁초로 시작된 불이 1천717건(34.7%)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물 조리 683건(13.8%), 쓰레기 소각 643건(13%)이 뒤를 이었다.

장소별로는 공장 등 비주거지 3천556건(34.4%), 주거지 2천120건(20.5%), 차량 1천252건(12.1%), 임야 843건(8.2%)으로 집계됐다.

도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부주의 탓인 화재가 2014년과 비교해 6.8퍼센트가 증가했다"며 "대부분 화재는 작은 관심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you@yna.co.kr

14.4 X 17.8 cm

연합뉴스
2016년 01월 12일 (화)
종합

이재명 성남시장 "경기도 '무상복지' 제소 포기하라"



이재명 성남시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성명을 내고 '3대 무상복지사업'에 대한 대법원 제소 방침을 포기하라고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촉구했다.

이 시장은 제소를 강행한다면 이를 연정 파괴행위로 보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연정 파기를 공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남경필 지사는 더민주당에 복지에 관한 권한을 넘기는 조건으로 '연정'을 선언하고 사회통합부지사로 더민주당 이기우 부지사를 임명했다"며 "이 부지사가 재의요구 철회를 요청했는데 도 이를 묵살하고 야당에 이양한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또 과거 진주의료원 해산과 관련한 재의요구 사례를 소개하며 대법원 제소 포기를 거듭 촉구했다.

2013년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재의를 요구했지만 홍준표 지사가 이를 거부하자 복지부는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경남도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진주의료원 해산 때도 대법원 제소는 없었다"며 "성남시민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복지정책에 대해 대법원 제소 절차를 밟는다면 남 지사에게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gaonnuri@yna.co.kr

연합뉴스
2016년 01월 12일 (화)
종합

판교 환풍구 부실의 '민낯'..."무등록업체가 대충 시공"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 직후 구조 작업 (성남=연합뉴스) 신영근 기자 = 17일 오후 환풍구 덮개가 붕괴돼 수 십명의 추락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에서 사고 직후 소방관들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14.10.18 << 독자 제공 >> drops@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geenang

불법재하도급·설계도면 무시…환풍구 하중 ¼토막

2억원 행사 8천만원으로 축소…"안전관리 비용 '0'원"

(성남=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행사장 인근 환풍구 덮개가 무너지면서 관람객 16명이 18m 아래로 추락해 숨진 판교 환풍기 사고 참사는 부실시공과 행사 주최측의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인재'(人災)였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강동원 판사는 시공사 및 행사주최 측 대표 등 6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교 환기구 사고현장에 놓인 꽃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년여 전 지하주차장 환기구(환풍구)가 한순간에 무너져내려 27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유스페이스 야외광장 환기구 근처에 15일 오전 시민들이 갖다 놓은 꽃이 놓여 있다. 사고 후 환기구 주변에는 대형 철제 구조물이 세워져 시민들의 접근이 통제되고 있다. 2015.10.15 xanadu@yna.co.kr

90쪽이 넘는 판결문에는 사고 원인을 밝혀내고 그 과실과 책임을 묻는 사법부의 고민적인 판단과 함께 부실시공과 이를 묵인한 시공사, 그리고 안전을 외면한 행사주최 측의 민낯이 그대로 담겼다.

◇ 무등록 업체에 불법 재하도급…부실시공으로 이어져

성남시 분당구 판교 테크노밸리 SD-1 공사 시공사 A건설은 2010년 11월 금속구조물 및 창호공사를 위해 B업체에 금속공사 시공을 맡겼다.

B업체는 세부작업을 위해 이듬해 C업체에게 재하도급했다. 문제는 C업체가 무등록 건설업체였다는 점이다. B업체는 재하도급을 준 사실 조차 A건설사에 통보하지 않았다.

이들의 불법행위는 곧바로 부실시공으로 이어졌다.

출입 통제되는 판교 환기구 사고 현장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년여 전 지하주차장 환기구(환풍구)가 한순간에 무너져내려 27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유스페이스 야외광장 환기구 근처를 15일 오전 출근길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사고 후 환기구 주변에는 대형 철제 구조물이 세워져 시민들의 접근이 통제되고 있다. 2015.10.15 xanadu@yna.co.kr

C업체가 감리확인을 받은 환풍구 도면과 달리 "대충 막연한 경험과 짐작만으로 임의시공"하기에 이른 것이다.

애초 도면에는 환풍구 위를 6개의 덮개(그레이팅)로 덮고 그레이팅은 환풍구 안쪽 시멘트 벽면에 설치한 ㄱ자 형강 위에 설치한 앵글이 받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그러나 C업체는 "도면대로 그레이팅을 설치할 수 없다"며 구조안전 검토없이 환풍구 중간을 가로지르는 앵글과 각관 2개만을 설치한 뒤 그레이팅 6개를 13개로 절라 덮는 것으로 시공을 마쳤다.

이 과정에서 환풍구 위를 덮은 그레이팅의 하중은 ¼ 수준으로 줄어들고 말았다.

C업체 작업인부가 공사 과정에서 자재에 직접 매달려보며 시험해본 결과 강도가 약하니 보강작업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이마저 무시됐다.

판교 환풍구 덮개 받침대 하중 실험 (성남=연합뉴스) 신영근 기자 =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를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가 사고 현장의 덮개를 지탱하고 있던 받침대(지지대)에 대한 하중 실험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실험은 사고현장에 남은 알자형 받침대 1개를 아래쪽으로 잡아당겨 하중을 얼마나 견디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014.10.21 << 지방기사 참조 >> drops@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geenang

작업인부의 우려는 현실이 됐고, 환풍구 사고 원인을 조사한 감정단은 "그레이팅을 받치는 부재들이 접촉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깎이면서 콘크리트에 고정된 앵커볼트가 뽑과, 그레이팅이 떨어지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 행사 협찬금 줄자 행사비 축소…안전관리 외면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 행사를 마련하면서 이렇다 할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은 주최 측도 사고 책임에서 자유로울순 없다.

행사를 주최한 이데일리TV는 당초 예산을 2억2천만원으로 책정했으나 후원 및 협찬이 예상을 밑돌자 8천만원으로 축소해 계획을 수정했다.

그러면서 "안전요원 등 70명의 인건비 등 총 3억2천만원이 필요하다"고 단가를 제시한 최초 대행업체가 아닌 다른 대행업체와 접촉, 4천400만원에 계약했다.

<그래픽> 판교 환풍구 부실시공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한 결과, 환풍구가 부실하게 시공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jin34@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대행업체가 작성한 간적서에는 안전관리 비용이 전혀 책정되지 않았고 이데일리TV 측도 이에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행사 예산이 줄면서 안전의식은 뒷전이 된 셈이다.

행사 당일 관람용 의자 500석을 웃도는 2천여명의 관중이 몰렸음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사고가 난 환풍구는 무대에서 약 24m 떨어져 있었고 관람의자 끝부분과는 4m 거리였다. 환풍구가 보행자 통로에 위치해 있고 무대를 내려다볼 수 있어 사람들이 환풍구 위로 올라가 공연을 관람할 거란걸 쉽게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펜스나 안전요원을 적절히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법원 "안전불감으로 인한 참혹한 사건 반복 없어야"

<그래픽> 판교 야외공연장 환풍구 덮개 붕괴사고(종합2)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17일 오후 5시 53분께 성남시 분당구 판교테크노밸리 유스페이스 야외공연장에서 관람객 20여명이 환풍구 덮개 위에서 걸그룹 공연을 관람하던 중 덮개가 붕괴되면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bjb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판결문은 환풍구 부실시공과 붕괴사고의 인과관계를 따지면서 "누구라도 올라갈 수 있는 환풍구"를 시공할 때는 각별히 안정성에 비중을 두어 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그것이 지면으로부터 18.55m 깊이의 수직낙하통로 위에 시공되는 것이라면 각별히 고려해야 하고, 최소한 설계도면대로 시공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은 "우리 사회는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같은 큰 희생을 치르고도 지금까지 뿌리깊은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이 사건 발생 직전에는 마무나리조트 행사장 붕괴사고, 세월호 참사 등 안전불감으로 인한 참혹한 사건을 겪었다"며 "이런 사고가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young86@yna.co.kr

14.4 X 51.3 cm

연합뉴스
2016년 01월 12일 (화)
종합

신분당선 연장선 요금 논란...인터넷서 '갑론을박'

기본요금 2천250원…"서민 주머니만 얇아진다"vs."비싼만큼 값어치"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신분당선 연장선(정자역~광교역)의 30일 개통을 앞두고 요금이 비싸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인터넷 카페에서는 수원과 용인, 성남 주민들이 신분당선 연장선 요금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신분당선 연장선은 10㎞ 이내 기본요금이 2천250원(1회용 교통카드 기준)으로 결정됐다. 지하철 이용객의 90% 이상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겸용 후불 교통카드 기준으로는 1회용 교통카드보다 100원 저렴한 2천150원이다.

신분당선 전체구간(강남역~광교역) 요금은 기본요금에 거리요금 500원과 별도요금 300원 등 800원이 추가돼 3천50원(후불 교통카드 기준)으로 책정됐다. 현재 강남역~정자역 요금은 2천350원이다.

또 10㎞를 초과할 경우 5㎞당 거리비례운임 100원이 추가되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가 적용됐다.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시행자인 경기철도㈜는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이런 내용의 요금체계를 승인받았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신분당선을 이용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들 사이에 비싸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회원수 2만5천여명인 한 광교맘카페의 아이디 '아*****' 회원은 "지하철이 생기면 좋겠다 했는데, 기본요금이 너무 비싼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사랑*****'는 "한달 꽉채워 출퇴근하면 장난 아니겠어요, M버스도 비싼데 자차 이용이 더 싸다는 말이 맞나봐요"라고 맞장구쳤다.

그러나 비싼 만큼 값어치를 한다는 반론도 있다.

같은 카페의 '퍼블*****'는 "싸진 않죠, 그러나 M버스나 광역버스도 별 차이 없고, 승용차는 직접 운전하고 막히면 힘들고, 톨게이트비용도 만만치 않다"면서 "신분당선 타보면 빠르고 괘적하다. 절대값은 비쌀지 몰라도 그 값어치 하기에 개인적으로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기*****'도 "비싸긴 해도 정시 출발에 빨라서 버스보다 나은 것 같다"면서도 "민자라 비싼게 좀 아쉽다"고 지적했다.

회원수 28만명의 한 부동산 관련 카페에서도 신분당선 이용요금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파*****'은 "돈 없어서 수도권으로 밀려온 서민들 주머니만 얇아지겠다"고 비싼 요금책정을 지적했다.

그러나 '네버*****'는 "광교에서 강남까지 1회 2천950원이지만 한달 9만1천600원짜리 정기권이 있어 평일에 매일 출퇴근하면 44회에 편도 2천82원, 주말까지 매일 60회 다 탄다면 편도 1천527원의 효과가 있다. 광역버스 보다 싸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비싼 요금체계 논란에 대해 경기철도 관계자는 "이용자의 부담을 고려해 요금을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운임이 높아진 부분은 죄송하다"면서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금으로 이해해달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애초 국토교통부와 사업협약을 맺을 때 구간요금 제였던 것을 통합환승할인으로 바꿔 적용했다"면서 "요금결정과정에서 이용자의 요금인상 부담 부분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말했다.

경기철도는 오는 30일 개통을 앞두고 이날 오후 시민, 국회의원, 시장 등을 초청해 시승식을 열었다.

신분당선 연장선 운행시간은 평일과 토·일요일, 공휴일 모두 오전 5시30분 첫차가 출발하며, 막차의 경우 평일은 오전 1시까지,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자정까지 운행된다.

hedgehog@yna.co.kr

14.4 X 27.3 cm

연합뉴스
2016년 01월 12일 (화)
경제

고양 한류월드에 2천석 규모 공연장·7개 호텔 들어선다

고양 한류월드에 2천석 규모 공연장·7개 호텔 들어선다CJ E&M과 K-컬처밸리 협상 마무리…10년 만에 개발 밑그림 완성

(고양=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 일대 99만4천756㎡에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는 한류월드 사업이 10여년 만에 개발윤곽을 드러냈다.

경기도 한류월드사업단 관계자는 "K-컬처밸리 우선협상대상자인 씨제이이앤엠(CJ E&M)과 사업내용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께 부지공급계약을 마치면 한류월드 사업은 사업자가 모두 정해진다"고 12일 밝혔다.

한류월드는 경기도가 한류(韓流)를 테마로 한 복합관광단지를 짓는 사업으로, 2005년부터 추진됐지만 그동안 진행하던 사업이 줄줄이 무산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K-컬처밸리 우선협상대상자로 씨제이이앤엠을 선정, 개발 윤곽이 나왔다.

도에 따르면 한류월드 사업은 K-컬처밸리를 비롯해 호텔 7곳, 주상복합아파트 2천300여 가구, EBS 디지털 통합사옥,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빛마루')로 구성된다.

현재까지 대명 엠블호텔(377실)과 빛마루 신축 등 2개 사업만 완료된 상태지만 2020년 이전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전망이다.

옛 테마파크 부지와 상업시설 부지 33만㎡에는 씨제이이앤엠이 1조원을 투자해 K-컬처밸리사업을 추진한다.

K-컬처밸리는 2천 석 규모의 융복합공연장, 객실 수 270실 규모의 호텔, 한류 체험 및 전시시설을 갖춘 테마파크, 상업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이 사업은 연내 공사를 시작해 2018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호텔 부지 7곳도 모두 사업자가 선정됐다.

대명레저산업은 현재 엠블 호텔 인근에 290실 규모의 가족호텔을 지을 계획이며 인근 A3 부지 1만452㎡에는 252실 규모의 한류월드호텔이 들어선다. 또 A7 부지 등 2곳에는 SM관광호텔과 세계KRT가 각각 384실, 724실 규모의 호텔을 건설한다.

씨제이이앤엠은 K-컬처밸리에서 제외된 A6 부지에 800실 규모의 호텔을 계획하고 있어 한류월드에는 모두 3천실 안팎의 호텔이 건립될 예정이다.

M1~M4 부지에 현대건설·GS건설·포스코건설 컨소시엄과 에이스산업이 2천300여 가구의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도 현재 고양시에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연내 착공을 앞두고 있다.

2014년 8월 착공한 EBS 디지털통합사옥 건립사업도 2017년 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EBS 디지털통합사옥은 부지면적 1만4천㎡, 연면적 6만1천㎡에 지상 20층, 지하 3층 규모로 지어진다.

wyshik@yna.co.kr
(끝)

연합뉴스
2016년 01월 12일 (화)
종합

GTX 성남역 건설비 분담비율 놓고 경기도-성남시 갈등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와 성남시가 2021년 개통 예정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삼성~동탄(39.5㎞) 노선 공사비 분담비율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도는 건설비 중 지방자치단체 분담액을 5:5로 정해 시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시는 협의를 통한 분담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며 공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12일 두 기관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6월 동탄~용인~성남~수서~삼성 지역을 잇는 총연장 39.5㎞ GTX 노선을 착공했다.

총 사업비는 1조5천547억원이다.

성남시는 그러나 분당구 백현·이매동 일원으로 확정된 가칭 '성남역' 건설비용의 지난해분 127억5천만원을 도에 납부하지 않았다.

도가 정한 지자체와의 공사비 분담비율 5:5가 너무 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도 방침대로라면 총 356억원을 분담해야 한다며 시비 부담비율을 줄여달라는 입장이다.

도는 그러나 같은 노선에 역사를 신설하는 용인시와 화성시가 이미 지난해 5:5 비율로 공사비를 납부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용인시는 보정동에 짓는 용인역 건설비용으로 70억7천여만원(총 분담비 197억원)을 냈고, 화성시도 64억4천여만원(총 분담비 155억원)을 납부했다.

도는 공사비 분담비율을 놓고 지난해 성남시와 2~3차례 과장급 실무협의를 하고 6월 부단체장과 협의 과정도 거쳤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8월 분담비율을 5:5로 시행해달라는 공문을 시에 보냈다.

성남시 관계자는 "공사비 분담비율은 지자체와 협의해 결정하게 돼 있는데 아직 결론 나지 않았다"며 "도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 역시 "성남시가 올해 납부해야 할 공사비 예산도 확보하지 않은 걸로 안다"며 "시가 추경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더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GTX는 지하 40~50m에 건설된 터널로 평균 시속 100㎞로 달릴 수 있는 철도 시스템이다.

gaonnuri@yna.co.kr

14.4 X 17.0 cm

연합뉴스
2016년 01월 12일 (화)
종합

남경필 "정치권이 누리과정 갈등 해결해야"



남경필 경기도지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여야 대표 면담 제안 "국민에게 안정감 보여줄 때"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2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논란과 관련, "지금은 여야 지도부가 국민에게 안정감을 보여줘야 할 때"라며 정치권의 역할을 강조했다.

남 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현재의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당신에게 준 돈으로 6개월치 살고, 모자라면 내가 대줄게 하는 상황"이라고 비유하면서 "이제는 국회와 정치권이 회의체를 구성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당내 누리과정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예산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을 언급하며 새누리당도 대책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고 싶다. 이어 김문성 새누리당 대표, 교육부총리, 경제부총리와 만나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최근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더민주당과 새누리당 지지율이 하락곡선을 그리는 것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며 "여야가 누리과정 문제해결 능력을 보여줘야 국민의 지지율을 늘릴 수 있다"고 여야의 협력 당위성을 강조했다.

남 지사는 13일 예정된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안 통과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기대는 하지만, 도의회가 할 일이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전남교육청의 해법이 기대를 갖게 한다"고 말했다.

전남교육청이 이날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 목적예비비 3천억원이 풀린다는 전제하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하겠다고 밝힌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경기도는 교육협력사업에 2개월분 누리과정 예산(910억원)을 담은 2016년도 수정예산안을 편성해 이날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는 13일 임시회를 열어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남 지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누리과정 예산 관련 입장 표명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대통령께 자꾸 대답하라고 하면 더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정치권이 풀어주는게 좋겠다"라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연합뉴스
2016년 01월 12일 (화)
종합

경기창조혁신센터 12개 스타트업 9개월 간 15억 매출

25억 투자유치, 30명 신규고용…첫 성과 발표회·졸업식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육성한 12개 스타트업이 지난 9개월 간 매출 15억원, 투자 유치 25억원, 신규 고용 30명을 달성했다고 KT가 12일 밝혔다.

KT는 이날 경기도 판교 혁신센터에서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K-챔프 랩' 1기의 첫 성과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울랄라랩은 자체 개발한 스마트 센서 위콘을 기반으로 스마트 공장 플랫폼을 구축하고 KT와 상용화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외 투자회사로부터 22억원의 투자 유치 협의를 진행 중이다.

홍채 인식 솔루션을 개발한 이리언스는 BC카드와 결제 서비스 개발을 추진 중이다. 싱가포르-말레이시아 국경 출입국 사업 관련 양해각서, 중국과학원과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감시 카메라 제작업체인 유아세이프는 제주 해군기지, KT 주요 보안시설 등에 특수 카메라를 납품했다. 중국 상하이, 장쑤성 등 철도역에도 카메라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KT와 혁신센터는 그동안 이들 기업에 창업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했다. KT는 현직 임원과 전문가들이 스타트업에 조언하도록 했고, 혁신센터는 기술 상담을 제공했다.

이번 성과 발표회와 함께 졸업하는 1기에게는 '포스트 K-챔프 랩'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가천대,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입주 공간도 마련해준다.

김영명 KT 창조경제추진단장은 "K-챔프 랩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이 성장해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K-챔프를 육성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hanjh@yna.co.kr

14.4 X 13.2 cm

연합뉴스
2016년 01월 12일 (화)
종합

경기도 2개월분 누리예산 910억 담은 수정예산안 제출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12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 910억원을 담은 수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남경필 지사가 앞서 1~2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도비로 지원한 뒤, 2개월 내에 정부가 보육 대란 해법을 마련하지 않으면 올해 전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도가 책임지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지방세 수입을 늘려 잡아 올해 본예산안보다 2천억원 많은 19조8천55억원 규모로 수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지방세 수입은 도교육청전출금, 시군조정교부금, 시군징수보조금 등으로 나눠 쓰게 돼 있어 도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2천억원 가운데 910억원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가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의원 발의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물론 상정 권한은 도의회 의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강득구 도의회 의장과 양당 대표는 13일 오전 11시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올해 본예산안을 심의하기로 해 수정예산안도 자동적으로 상정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앞서 도의회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은 끝에 지난달 31일까지 올해 본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준예산 사태와 함께 보육 대란에 직면했다.

chan@yna.co.kr

14.4 X 11.3 cm

NEWSis.
2016년 01월 12일 (화)
종합

7개 교육청, 누리과정 추경계획 제출거부...' 강vs강 힘겨루기 여전'



【수원=뉴시스】이정선 기자 =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0일 오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누리과정 예산 관련 경기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경기도는 보육대란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최소한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고 어려운 지방 재정의 현실을 잘 살펴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호소했다. 2016.01.10. ppljs@newsis.com

12일 제출 마감, 경북·울산·전북만 제출

전남교육청은 입장변화 감지

교육부, 시간 더 주기로

【세종=뉴시스】이혜원 기자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중인 7개 시도교육청이 교육부가 요구한 누리과정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 제출을 끝내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일 전국시도교육청에 국고 목적 예비비,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지자체 추가 전입금 등을 활용해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한 추경예산 편성계획을 12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마감일인 이날 추경예산 편성계획을 제출한 곳은 경북, 울산, 전북 등 세 곳이다.

이 중 경북과 울산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2개월분을 모두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담은 계획을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에 추경예산 편성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으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시도교육청(서울·광주·경기·전남·세종·강원·전북) 중 입장을 선회한 곳도 있어 타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발등의 불'인 보육대란을 피하고자 추경안을 통해 어린이집 5개월분, 유치원 8개월분을 우선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액수로는 어린이집 400억원, 유치원 320억원 정도다. 유치원 예산을 쪼개서 어린이집을 메꾸는 형식이다.

하지만 서울, 광주, 경기, 강원 등은 여전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사태해결 가능성은 여전히 낮아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제시한 목적예비비는 현재 교부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만일 교부된다 하더라도 이 예산만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체를 편성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르다"며 "이를 추경예산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할 사안으로 이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은 달라진 바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몇몇 교육청에서 의사결정이 아직 끝나지 않아 마감 기한을 늦춰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조금 더 기다려 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jaelee@newsis.com

NEWSis.( )
2016년 01월 12일 (화)
종합

경기교육청 "누리과정 추경 편성? 우리는 해당 없어" 교육부 회신



【수원=뉴시스】 이승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가 12일까지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관련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을 제출하라는 지시에 대해 '해당 사항이 아니다'라고 회신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교육부에 보낸 회신 공문을 통해 '경기도는 현재 전년도에 준해 예산을 집행하는 상황이어서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31일까지 도의회 여·야가 누리과정 문제로 충돌하면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준예산(불성립 예산) 사태를 맞고 있는 한 상황만을 설명한 것으로, 누리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도 교육청은 그동안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인 만큼 국비 지원만이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런 가운데 서울, 전남 등 일부 교육청은 정부의 목적예비비 지원을 전제로 그 배당액만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겠다는 내용의 계획을 교육부에 보냈다.

국회가 올해 예산에 세운 누리과정 우회지원용 목적예비비 3000억원 가운데 경기도에 배당될 액수는 614억원(1.3개월분)이다.

도 교육청은 목적예비비가 지원되더라도 누리과정을 우회지원하라는 것인지를 정확히 따진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애초 올해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반영하지 않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1년치(4929억원)를 편성했지만,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유치원분도 모두 삭감했다.

"누리과정은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차별해서도 안된다"는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모두 삭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보육 대란은 막아야 한다"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막아서면서 여·야가 충돌, 결국 새해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해 도와 도 교육청은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맞고 있다.

jayoo2000@newsis.com

14.4 X 40.8 cm

NEWSis.

2016년 01월 12일 (화)
종합

경기도, 해외마케팅지원사업 참가 중소기업 모집

【수원=뉴시스】 김동식 기자 = 경기도는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참가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외마케팅대행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해외 현지의 경기통상사무소(GBC)를 통해 바이어 발굴부터 계약까지 도움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 지역은 GBC가 위치한 뭄바이, 모스크바, 쿠알라룸푸르, LA, 상해, 심양 등 5개국 6곳이다. 지역별로 20개사씩 120개사를 선정한다.

또 도는 오는 3월 조만간 중국 광저우와 베트남 호찌민에 GBC를 추가 개소해 해외마케팅대행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지난해 GBC 6개 사무소는 111개 기업에 대한 해외마케팅대행을 진행, 2000만 달러(240억 원)의 수출 계약을 지원했다.

참가 신청은 경기지역에 본사나 공장이 소재한 제조 기업이면 가능하고 중소기업 지원정보 포털사이트인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수출팀(031-259-6136)에 문의하면 된다.

dsk@newsis.com

14.4 X 10.2 cm

NEWSis.

2016년 01월 12일 (화)
종합

경기도 장미, 외국 품종보다 '잘 나가'



【수원=뉴시스】 김동식 기자 =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자체 개발한 장미품종이 화훼시장에서 외국품종보다 비싼 가격에 팔리는 등 시장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왼쪽부터 레드크라운, 레드포켓, 스위트스킨, 피치밸리, 핑크하트) (사진=경기도농업기술원 제공)
photo@newsis.com

레드크라운 1송이당 1만5500원에 거래

외국 품종인 아쿠아는 1만1780원 그쳐

【수원=뉴시스】 김동식 기자 =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장미 품종이 화훼시장에서 높은 외국품종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12일 경기도농업기술원(도농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서울시 양재동 화훼공판장에서 거래된 장미는 173품종이다.

이중 도농기원이 개발한 9품종 중 레드크라운의 경매시세는 1송이당 1만5500원으로 외국품종인 아쿠아 품종 1만1780원보다 24% 높았다.

레드포켓과 스위트스킨도 아쿠아 품종보다 9.4% 높은 1만3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밖에 핑크하트도 아쿠아 품종보다 비싼 1만2150원의 가격대를 형성했다.

꽃 시장에서 레드크라운은 꽃이 크고 색깔도 고급스러운 빨간색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스위트스킨은 두 가지 색으로 최근 꽃 소비 유행에 적합한 품종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박주상 양재동화훼공판장 경매사는 "아직 가격이 높지는 않지만 도농기원이 개발한 피치밸리는 꽃모양이 균일하고 가시가 적어 다루기 쉽고, 꽃 수명이 길어 중도매인들로부터 주문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dsk@newsis.com

14.4 X 17.0 cm

NEWSis.

2016년 01월 12일 (화)
종합

경기 안성 돼지 농가, 구제역 예방 소독



【안성=뉴시스】 이정선 기자 = 전북 김제시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며 위기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된 가운데 12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의 한 돼지농장에서 관계자들이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2016.01.12.

ppljs@newsis.com

14.4 X 24.2 cm

NEWSis

2016년 01월 12일 (화)
종합

경기 유치원연합회 "누리과정 예산 편성·집행하라" 촉구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회 회원 10여 명은 12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을 즉각 편성·집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당국과 정치권의 다툼으로 아무런 잘못도 없는 35만여 명의 어린이와 학부모가 고통받아야 하는 황당한 사태가 방치되고 있다"며 "문제해결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교육당국과 정치권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음재 경기도회 회장은 "누리과정 지원은 교육감의 법적 의무인 만큼 어린이들을 보육할 법률적, 사회적 책임을 더는 방기해서는 안 된다"며 "즉각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집행해 보육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도 교육청이 편성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재정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할 의지가 없는 것 같아 도 교육청에 촉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달 15일 부천원미갑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jayoo2000@newsis.com

14.4 X 17.4 cm

NEWSis

2016년 01월 12일 (화)
종합

이재명 "道, 3대 무상복지 제소하면 '연정' 파기 요구"

【성남=뉴시스】 이정하 기자 =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12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에 '성남시 3대 무상복지' 건을 제소하면 '연정 파기'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요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 시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남 지사는 더민주에 복지에 관한 권한을 넘기는 조건으로 '연정'을 선언하고 사회통합부지사로 더민주 이기우 부지사를 임명했다"며 "그런데, 남 지사는 중앙정부와 새누리당의 지시에 따라 성남시 복지정책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며, 더민주당의 핵심가치인 복지확대와 자치분권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정의 상징인 이기우 부지사가 명시적으로 재의 요구 철회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야당에 이양한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고 있다"며 "남 지사의 '연정'이 진정한 '연정'이 아니라 국민을 현혹하기 위한 '연정 코스프레'에 불과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또 "남 지사의 연정 실험은 박근혜 정부의 누리과정 공약파기를 경기도민의 혈세로 봉합하겠다는 대응에서 이미 절반은 무너졌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제 성남시 복지정책을 무산시키기 위한 대법원 제소 여부가 마지막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남의 진주의료원 해산에 대한 재의요구 사례도 언급했다. 2013년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대해 복지부가 재의요구를 했지만 홍 지사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실익이 없다는 판단 하에 최종적으로 대법원 제소를 포기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진주의료원 해산에 대해서도 대법원 제소는 없었다"며 "하물며 성남시민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복지정책에 대해 대법원 제소 절차를 밟는다면 이는 남 지사에게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남경필 지사는 성남시 3대 복지정책에 대한 대법원 제소 포기를 선언하라"며 "이것이 '연정'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더민주 이찬열 도당위원장은 "연정 문제는 당에서 충분히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남경필 지사는 연정 차원에서라도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 대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jungha98@newsis.com

14.4 X 15.1 cm

NEWSis.

2016년 01월 12일 (화)
종합

이재정 교육감 "남 지사 '누리 예산' 공부 좀 더하라"



【수원=뉴시스】 이승호 기자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12일 경기도가 전날 밝힌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지원 방식에 대해 "예산 공부 좀 더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정치 지도자는 예산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면서 남경필 경기지사를 겨냥했다.

이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2개월 치인 910억원을 포괄 교육협력사업비로 도 교육청에 지원하면 도 교육청이 이 돈으로 학교협력 시설비 등 교육재정교부금에 활용한 뒤 여유 재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하게 하겠다는 전날 도(道)의 발표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편법으로 예산을 전용하자는 도의 제안에 도 교육청은 동의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교육감은 "다른 기관의 예산을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런 전례가 없다"면서 이번 발표뿐만 아니라 최근 도가 도 교육청의 재정 상황을 분석했던 사례를 지적했다.

그는 "이런 점들을 보면 남 지사가 생각하는 연정(연합정치)의 가치와 방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된다. 회의감이 들 정도"라고 수위를 높였다.

이어 "(교육감) 당선증 받는 날부터 혁신 교육을 위해 도와 손잡고 가자고 결심했다. 한 번도 남 지사를 비난하거나 비판한 적이 없고, 도 예산에 대해서도 일언반구(一言半句) 얘기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남 지사는) 이재정이 정치적이라고 얘기한다. 정치적이라면 정치적으로 이득이 있어야 할 텐데 어떤 이득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할 일(누리과정)을 놓고 '정부가 못하면 도가 하겠다'는 남 지사 발언이야말로 정치적인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를 향해서는 "의무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가 누리과정만 얘기한다. 누리과정을 위한 기관인지, 유·초·중·고 교육을 책임지는 곳인지 도대체 모르겠다"며 "교육부 발표대로 도 교육청에 5688억원의 여유 자금이 있더라도 이를 누리과정에 쓸 게 아니라 지난해 삭감된 학교 운영 경비 등을 회복하라고 해야 하는 게 교육부 역할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또 "돈이 없어 올해 본예산에 반영 못한 예산이 5000억원이 넘는다. 교육부의 무지와 무능함에 할 말을 잃을 정도"라며 "대한민국 교육이 정말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인 만큼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4조원이 넘는 재정 문제를 풀 수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jayoo2000@newsis.com

14.4 X 34.3 cm

news1
2016년 01월 12일 (화)
종합

경기일부·강원·충북·경북에 한파특보...당분간 -10도 내외 강추위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8도를 기록하는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노들섬 주변 나무에 고드름이 열려 있다.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화요일인 12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다.

오후 4시 현재, 동해안을 제외한 강원도와 일부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북도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상태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떨어져 이틀 이상 지속하거나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낮아질 것으로 예상할 때 발효한다.

오후 5시 현재 ▲서울 영하 0.8도 ▲인천 영하 2도 ▲철원 영하 2.3도 ▲대관령 영하 3.4도 ▲대전 영하 0.8도 ▲대구 3.5도 등을 기록했다.

체감 온도는 ▲서울 영하 4.2도 ▲인천 영하 6.5도 ▲철원 영하 6.5도 ▲대관령 영하 9.3도 ▲대전 영하 1.4도 ▲대구 영하 3.5도 등에 달한다.

앞서 오전 7시 기준 ▲대관령 영하 18.3도 ▲제천 영하 14.5도 ▲계룡 영하 11.8도 ▲안동 영하 11.8도 ▲대구 영하 5.9도 ▲남원 영하 7.2도 ▲군산 영하 6도 ▲전주 영하 5.7도 등은 올 겨울 들어 가장 낮은 최저기온을 기록한 바 있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당분간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떨어지겠고, 그 밖의 중부내륙과 남부내륙에서도 영하 10도 내외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이 밖에도 강원도 영동과 경상도, 서울을 포함한 일부 경기도와 충청북도에 건조특보가, 제주도남쪽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한편 기상청은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6도로 예보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

news1
2016년 01월 12일 (화)
지역

이재명 시장 "경기지사, 3대 무상복지 제소 포기하라"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지난 4일 3대 무상복지정책 전면 시행 방침을 설명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모습. ⓒ News1 이재명 기자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성남시 3대 무상복지'에 대한 대법원 제소 방침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성명서에서 "대법원 제소 여부는 남 지사의 진정성을 판단할 기준이 될 것"이라며 "만약 제소를 강행한다면 이는 명백한 연정 파괴 행위이므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공식적으로 연정 파기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 지사는 더민주당에 복지에 관한 권한을 넘기는 조건으로 '연정'을 선언하고 사회통합부지사로 더민주당 이기우 부지사를 임명했다"며 "그런데 남 지사는 중앙정부와 새누리당의 지시에 따라 성남시 복지정책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며, 더민주당의 핵심가치인 복지확대와 자치분권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연정의 상징인 이기우 부지사가 명시적으로 재의 요구 철회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야당에 이양한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고 있다"며 "남 지사의 '연정'이 진정한 '연정'이 아니라 국민을 현혹하기 위한 '연정 코스프레'에 불과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남 지사의 연정 실험은 박근혜 정부의 누리과정 공약파기를 경기도민의 혈세로 봉합하겠다는 대응에서 이미 절반은 무너졌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제 성남시 복지정책을 무산시키기 위한 대법원 제소 여부가 마지막 시험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보건복지부가 성남시와 함께 수원시에도 재의요구를 지시했지만 경기도가 수원을 제외하고 성남에만 재의를 요구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라 정략적인 선택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2013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대해 복지부의 재의요구를 거부한 사례도 언급했다.

이 시장은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진주의료원 해산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았다"며 "성남시민이 바라고 있는 복지정책에 대해 대법원 제소 절차를 밟는다면 이는 남 지사에게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경필 지사는 성남시 3대 복지정책에 대한 대법원 제소 포기를 선언하라"며 "이것이 '연정'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다"고 말했다.

14.4 X 37.3 cm

news1
2016년 01월 12일 (화)
사회

개통 앞둔 신분당선 연장 '광교에서 강남 39분'

(수원=뉴스1) 박세연 기자



12일 경기도 수원시 광교차량기지에서 경기철도 관계자들이 개통을 앞둔 신분당선 연장(정자-광교) 전동차 점검을 하고 있다. 30일 개통을 앞둔 신분당선 연장(정자-광교) 복선전철을 이용하면 광교에서 서울 강남까지 39분이면 이용할 수 있다. 2016.1.12/뉴스1

14.4 X 11.7 cm

news1
2016년 01월 12일 (화)
종합

경기도의회, 道 수정예산안 반려...“문서형식 미비”



경기도의회/ ⓒ News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가 12일 2개월분의 누리과정 예산을 담은 도 집행부의 새해 수정예산안을 제출받자마자 돌려보냈다.

통상적으로 도의회에 안건을 제출할 경우 정해진 서식에 따라야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도의회에 따르면 도 집행부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도의회에 당초예산안보다 2000억원이 늘어난 19조8055억원 규모의 수정예산안을 제출했다.

도는 늘어난 2000억원은 지방세 추가분으로 충당하고 이 가운데 교육협력국 교육협력사업에 2개월분 누리과정 예산 910억원을 배정했다.

수정예산안 반려에 대해 도의회 측은 누리과정 갈등에 따른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도 집행부의 단순한 실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안건을 도의회에 제출할 경우 의안 제출일자와 제출자 등 정해진 형식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번 수정예산안은 계획서 형식의 일반 페이퍼로 넘어왔다”며 “ 형식을 갖춰서 다시 보내라고 했을 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도의회 다수당이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여당인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 지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해 12월31일까지 새해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했고, 도는 결국 이달 4일부터 준예산(準豫算) 체제에 돌입했다.

더민주는 누리과정 예산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므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새누리당은 몇 개월분이라도 우선 편성해 보육대란을 막은 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남경필 지사가 최근 보육대란을 우려해 2개월분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더민주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syh@

news1
2016년 01월 12일 (화)
종합

경기농기원 개발 장미품종 시장성 인정받아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개발한 레드크라운 등 장미품종이 외국품종보다 고가에 팔려 시장성을 입증받았다./사진제공=경기농기원 ⓒ News1 진현권 기자

레드크라운, 양재 화훼공판장 경매서 아쿠아 품종比 가격 24%↑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자체 개발한 장미 품종이 꽃시장에서 외국품종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등 시장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기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 초까지 양재동 화훼공판장에서 거래된 장미 173품종 분석한 결과, 경기도개발품종인 레드크라운의 경매시세가 1속 당 1만5500원으로 외국품종인 아쿠아 품종(1만1780원)보다 24% 높게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개발 품종인 '레드포켓'과 '스위트스킨'도 아쿠아 품종보다 9.4% 높은 1만3200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핑크하트'와 '피치밸리'는 비슷한 수준의 가격대를 형성해 시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재동 화훼공판장에서 거래되는 경기도 장미는 모두 9개 품종이다.

박주상 양재동화훼공판장 경매사는 "레드크라운은 꽃 색깔이 고급스러운 빨간색으로 꽃이 크고 모양이 좋다"며 "'스위트스킨' 은 꽃이 큰 대형이고 투톤컬러로 최근 꽃 소비 흐름에 적합한 품종"이라고 인기비결을 설명했다.

'피치밸리' 3만5000주를 재배하고 있는 고양시 정솔농원의 이춘성 대표는 "경기도 개발장미는 외국품종 사용에 대한 로열티가 없어 종묘비 4200만원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며 "가시가 적어 다루기 쉽고 인건비가 10~20% 정도 절감될뿐 아니라 전염병에도 강해 약제 방제 비용이 50% 절감된다. 생육이 빠르고 꽃 수확량이 많아 외국품종을 재배시 보다 연간 소득이 6% 높아졌다"고 말했다.

임재욱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경기도 개발 장미가 품종 수 면에서 9%, 거래량은 2.2%로 아직 국내 꽃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며 "따라서 시장성이 우수한 우리품종을 대량 보급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만족시키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jhk102010@

news1
2016년 01월 12일 (화)
종합

경기도, 지난해 화재 1만333건 발생에 사망자 63명



10일 오전 11시52분께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의 도료생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에 인근 11개 소방관서에서 펌프차 등 장비 59대와 소방인력 298명을 투입,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제공) 2016.1.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지난해 경기도내에서는 1만333건의 화재가 발생해 63명이 사망하고 610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 화재발생건수는 658건(6.8%) 증가, 사망자는 14명(18.2%) 감소, 부상자는 52명(9.3%) 증가한 것이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화재조사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4953건(47.9%)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이 2260건(21.9%), 기계적 요인이 1315건(12.7%) 등으로 나타났다.

부주의 화재 중에서는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1717건(34.7%)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물 조리 682건(13.8%), 쓰레기 소각 643건(13%)이 뒤를 이었다.

장소별로는 비주거 3556건(34.4%), 주거 2120건(20.5%), 차량 1252건(12.1%), 임야 843건(8.2%)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

특히 비주거의 공장과 창고(1231건), 음식점(492건)에서는 사람이 많이 활동하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시간대에 주로 발생했다.

화재 증가 이유로는 건조한 날씨로 인한 임야화재가 전년대비 182건(27.5%), 기타 쓰레기 등의 화재가 407건(19.0%)으로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초 발생한 의정부시 대봉그린아파트 화재로 126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면서 전년대비 부상인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도는 부주의한 화재가 크게 증가했고 주로 야외에서 담배꽁초 및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많이 늘었다"며 "대부분 화재는 작은 관심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니 생활 속 실천으로 화재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syh@

news1
2016년 01월 12일 (화)
종합

경기혁신센터 첫 졸업기업 배출...25억 투자유치 성공

(서울=뉴스1) 맹하경 기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 News1 조희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12일 오후 2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난해 3월30일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입주기업들의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경기센터가 '케이 챔프랩(K-Chanp Lab) 1기'로 선발·지원한 12개 스타트업의 성과물 소개와 투자자 유치를 위한 '데모데이'(Demo day) 행사가 진행됐다. 케이 챔프랩은 경기센터와 이를 지원 중인 KT의 역량이 결집된 스타트업 육성프로그램으로 1기 스타트업들은 지난해 4월부터 약 9개월간 경기센터에 입주해 사업비용, 금융·법률·특허 자문, 사업모델 멘토링 등을 지원받았다.

지원 결과 카비, 울랄라랩, 루크코리아, 씨브이티, 쇼베, 유아세이프 등 케이 챔프랩 1기 스타트업들은 약 15억원의 매출과 30여명의 고용창출, 약 25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대표적 육성기업인 이리언스는 홍채인식 솔루션 개발업체로서 KT의 해외마케팅 지원으로 싱가폴, 말레이시아와 국경 출입국 사업관련 양해각서(MOU) 체결하는 등 글로벌 진출 성과를 일궈냈다.

울랄라랩은 자체 개발한 스마트센서 위콘(WICON)을 기반으로 제조업 대상 스마트팩토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원천기술을 인정받아 KT와 플랫폼 상용화를 위해 공동협력 중이다. 지난해 12월 중국 창주발해신구 투자유치 대상업체로도 선정돼 중국진출을 준비 중이며 현재는 국내 및 해외 벤처캐피탈을 통해 22억원의 투자유치 협의를 진행 중이다.

감시 카메라 제작업체인 유아세이프는 초저도 촬영 카메라가 포함된 특수 카메라 시장에 진입, 지난 9월 제주 해군기지를 시작으로 납품을 진행했다. 지난달에는 카타르와 양해각서 체결 및 중국 상해시 강소성 외 2개시 철도역에도 설치를 추진 중이다. 얼굴인식 모듈 개발사 씨브이티는 KT텔레캅과 5년간 최소 12억원 상당의 신제품 구매조건부 사업계약을 맺었다.

경기센터는 이번에 졸업하는 케이 챔프랩 1기에게 가천대학교,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입주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졸업 이후에도 투자유치, 판로개척 및 홍보 등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최성준 미래부 창조경제진흥과장은 "12개 케이 챔프랩 스타트업들의 가시적인 성과는 기업의 노력은 물론이고 경기센터와 KT의 지원을 포함한 '민·관'의 지원 역량을 집중한 결과"라며 "이제는 창업자들이 좋은 아이디어만 있다면 쉽게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됐고, 올해 그 토대 위에서 유망기업들이 고속 질주를 할 수 있도록 센터간 협업 강화와 정부부처 사업 연계 등으로 더욱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news1
2016년 01월 12일 (화)
종합

경기도, '해외마케팅대행사업' 참가기업 연중 모집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는 '해외마케팅대행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연중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외마케팅대행사업'은 자력으로 해외시장 개척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해외 경기통상사무소(GBC)의 현지 전문가들이 바이어 발굴부터 계약까지 지사 역할을 대행해주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지역은 GBC가 있는 뭄바이, 모스크바, 쿠알라룸푸르, LA, 상해, 심양 등 5개국 6개소이다. 지역별로 20개사를 선정해 총 120개사를 지원한다.

올해 중국 광저우와 베트남 호치민에 GBC를 추가 개소해 해외마케팅대행 지역을 넓혀갈 예정이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GBC의 현지 마케팅 전문가를 통해 바이어 발굴부터 거래 성사까지 밀착지원을 받게 된다. 현지에서 운영되는 유명 전시회에 GBC가 대신 참가해 바이어 발굴에 나선다.

지난해 GBC 6개 사무소는 111개 기업에 대한 해외마케팅대행을 진행해 2000만 달러가 넘는 수출 계약을 이뤄냈다.

특히 부천시 빙수기계 제조업체인 바스코리아는 GBC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5월 기아자동차 등 각국의 자동차를 말레이시아에 독점으로 공급중인 말레이시아 N그룹과 MOU를 체결했다.

경기도에 본사나 공장이 있는 제조 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중소기업 지원정보 포털사이트인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수출팀(031-259-6136) 문의.

jhk102010@

14.4 X 13.6 cm

news1
2016년 01월 12일 (화)
지역

'경기도 누리예산 우선 지원'에 기초단체 입장 '엇갈려'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관련 긴급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이 열린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유아들이 선생님과 동화책을 읽고 있다. 2016.1.5/뉴스1 ⓒ News1

정부와 시·도교육청, 여야가 누리과정 책임전가를 놓고 미창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일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들이 자체 예산을 투입해 급한 불을 끄겠다고 나서고 있다.

누리과정비를 선 투입한 뒤 향후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충당하겠다는 '임시방편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하지만 일선 지자체 예산으로 누리과정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관련법상 위법성이 짙다는 주장도 있어 해당 기관들이 꺼내 든 카드가 실제 사용될 지는 안갯속이다.

누리과정 불발로 준예산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경기지역에서는 경기도와 수원시, 평택시가 자체 예산을 선 투입해 보육대란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12일 해당 지자체들에 따르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 2~6개월분의 어린이집분 누리과정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경기도는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겠다는 남경필 지사의 주장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수정예산안 규모는 지난해 11월 도가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보다 2000억원이 늘어난 19조8055억원이다.

도는 늘어난 2000억원은 지방세 추가분으로 충당하고, 이 가운데 교육협력국 교육협력사업에 2개월분 누리과정 예산 910억원을 배정했다.

평택시도 자체 예산을 투입해 누리과정비를 해결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우고, 시의회와 협상에 들어간다.

평택시는 6개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 예산 총 102억원을 원포인트 추경예산안으로 올려 누리과정사태를 수습하겠다는 구상이다.

시 여성가족과장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은 맞지만 공익적 차원에서 누리과정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수원시도 먼저 잉여금과 전년도 이월 예산으로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한 뒤 향후 도에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해당 지자체들의 누리과정 선 투입이 과연 가능할 수 있는지 여부다.

누리과정 책임전가를 놓고 시작된 여야 정치인들의 충돌이 자존심 싸움으로 번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쉽게 허락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고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무상교육인 누리과정비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보통교부금 안에서 지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인지 일부 지자체는 추이를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오산시는 도의회의 수정예산안이 의결되면 누리과정비를 선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직까지 일관된 지침과 내시(來示)도 없는 상황에서 섣부른 판단이 오히려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안성과 화성시도 관련법상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과 재정자립도 등의 이유를 들어 자체 예산을 투입한 누리과정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13일 예정된 도의회 심의 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성남과 시흥시 등도 누리과정 지원은 대통령 공약사업인 만큼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누리과정 지원에 반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는 추이를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로부터 명확한 지침과 공문이 내려왔을 때 생각해 볼 문제이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지난 11일 "보육대란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최소한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한 남경필 지사의 주장은 부적절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 교육감은 "대통령께서 결단만 하신다면 당장이라도 중앙정부가 부담할 수 있는 일이다. 1~2개월 후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왜 지금 하지 않겠느냐"며 "남 지사의 담화문은 누리과정 사태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14.4 X 41.6 cm

news1
2016년 01월 12일 (화)
종합

경기도·시군 누리과정 지원 '난항'...더민주 반대·절차위반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0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 관련 경기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경기도청 제공) 2016.1.10/뉴스1 © News1 진현권 기자
경기도, 누리과정 '수정예산안' 제출…더민주, '받지 않겠다' 통과 난망, 시군도 대부분 '관망세'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의 어린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지원에 반대방침을 밝혀 보육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시군의 누리과정 예산지원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도에 따르면 보육대란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도가 11일 누리과정 재원분담방안으로 '교육청 전출방식'과 시군 직접 전출방식 등 2가지 대책을 내놨지만 도의회 다수당인 더민주가 반대의사를 표명해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도는 누리과정 2개월 예산(910억원)이 포함된 2016년 수정예산안을 이날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수정예산안 규모는 지난해 11월 도가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보다 2000억원이 늘어난 19조8055억원이다.

도는 늘어난 2000억원은 지방세 추가분으로 충당하고, 이 가운데 교육협력국 교육협력사업에 2개월분 누리과정 예산 910억 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더민주가 이 수정예산안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도의 시군에 대한 예산 직접 지원은 물론 시군 차원의 누리과정 시군비 투입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을 올해 본예산에 반영했거나 지원의사를 밝힌 시군은 7개시군이다.

이 가운데 올해 본예산에 누리과정사업비를 반영한 수원, 안산, 안성 등 3개시는 도와 도의회의 합의 여부에 따라 예산투입을 결정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누리과정 대상자인 3~5세 어린이 1만1339명의 4~5개월분 예산 159억원을 올해 본예산에 반영한 상태다. 안산시와 산산시는 각각 12개월분 누리과정 예산으로 260억원과 93억4700만원을 올해 본예산에 확보했다.

따라서 도와 도의회간 수정예산안 합의가 불발되면 이들 시군은 법위배 부담을 안고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투입해야 한다.

누리과정예산이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경기도교육청에 내려주면 그 돈을 경기도가 받아 시군에 다시 내려보내 지원되기 구조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경기도가 사후 보전을 해주기로 했지만 지자체 입장으로선 여전히 부담이다.

올해 본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안양, 평택, 용인, 여주 등 4개시는 원포인트 추경이나 예비비 집행 등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평택시의 경우, 원포인트 추경이나 예비비 집행 등을 통해 6개월치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예비비로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것은 목적범위를 벗어난 집행이란 지적이 있어 이 또한 법위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대안으로 원포인트 추경을 통한 누리과정 예산편성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안도 의회승인을 받아야 돼 여야 구도에 따라 추진불가시군이 상당히 나올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시군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예비비로 쓰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다. 따라서 추경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거나 도에서 예산이 확정되어야 부담없이 누리과정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회계절차상의 문제를 따지기 보다 주민불편을 먼저 고려해 보육대란의 급한 불을 끄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이 도와 일부 시군이 추진중인 누리과정 예산 직적 지원방안이 여러 문제를 안고 있어 교육부가 보육대란을 막이 위해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jhk102010@

14.4 X 40.0 cm

news1
2016년 01월 12일 (화)
종합

'12첼리스트 콘서트', 23일 경기문화전당서 펼쳐져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첼리스타 첼로 앙상블&지안왕이 함께하는 '12첼리스트 콘서트'가 23일 오후 5시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극장무대에서 펼쳐진다./사진제공=경기문화의전당 ⓒ News1 진현권 기자

첼리스타 첼로 앙상블&지안왕이 함께하는 '12첼리스트 콘서트'가 23일 오후 5시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극장무대에서 펼쳐진다.

이탈리아어로 '첼로를 연주하는 사람' '별처럼 빛나는이란' 뜻의 '첼리스타 첼로 앙상블'과 중국을 대표하는 첼리스트 '지안왕(Jian Wang)'이 클래식 명곡에서 대중적인 팝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사한다.

피아졸라의 '탱고'부터 드뷔시 외 유명 작곡가들의 클래식 음악 그리고 비틀즈와 퀸의 팝 음악을 '첼리스타 첼로 앙상블'만의 스타일로 편곡해 신선하고 이색적인 공연을 준비했다.

조지 거슈윈의 <랩소디 인 블루(Rhapsody in Blue)>, 비틀즈의 <헤이 주드(Hey Jude)> 등 주옥같은 명곡들을 통해 활기찬 새해맞이 콘서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부에서는 탱고의 황제라 불리는 아스트로 피아졸라(Astor Piazzolla)의 <망각 (Oblivion)>을 들려준다. 탱고 고유의 매혹적이고 애절한 선율로 관객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탱고 음악에 이어 조지 거슈윈(G. Gershwin), 클로드 드뷔시(C. Debussy) 등 유명 작곡가의 대표곡을 통해 클래식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다.

2부는 경쾌하고 대중적인 팝 음악으로 구성했다. 팝 음악의 아이콘 '비틀즈'의 명곡과 함께 익숙함과 흥미로움을 더한 공연레퍼토리가 마음을 설레게 한다. 비틀즈의 명곡 메들리 연주 후 하드록을 팝뮤직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퀸의 아름다운 음악이 이어진다.

경기도문화의전당 정재훈 사장은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젊고 실력있는 첼리스트들의 화려한 테크닉과 아름다운 선율을 한껏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티켓은 R석 2만원, S석 1만원이다.

14.4 X 24.1 cm

news1
2016년 01월 12일 (화)
지역

이재정, "무지한 교육부, '누리교육부'로 이름 바꿔라"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21일 오전 서울 청와대 앞 신문고에서 누리과정 예산 국고지원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시위에서 교육청 예산으로는 누리과정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전달하고, 누리과정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했다. 2015.12.21/뉴스1 ⓒ News1 임경호 기자

교육부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경기도교육청 등 7개 시·도 교육청의 예산 분석 결과를 공개한데 대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무지한 교육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교육감은 12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출입 기자들과 만나 "교육부의 분석대로라면 교육청이 계산을 잘못했거나 뭔가 속이고 있거나 인데 정말 일방적인 계산(주장)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당장 활용 가능한 재원 5688억원이 있다고 하면 뭐부터 해야겠나. 본예산에 반영도 못한 학교운영경비 이런 것을 우선 회복시켜야하는 것 아니냐. 교육부가 그렇게 이야기해야 옳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황우여)교육부 장관도 저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던데 예산을 정말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교육계 현안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인지 의문"이라며 "정말 대한민국 교육계가 걱정이다. 기본을 모른다"고 꼬집었다.

이 교육감은 "교육부는 지금 명백한 왜곡을 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의도인지를 모르겠다"며 "(지금의)상황을 보면 누리과정만을 위한 교육부인가를 묻고 싶다. 이름을 '누리교육부'로 바꾸라. 그러면 (이름이 비슷하니)새누리당하고도 잘 갈 수 있지 않겠냐"고 냉소했다.

교육연정을 함께 하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교육감이 정치적으로 누리과정을 다루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뭐가 정치적인가. 정치적이라고 하면 정치적인 이득이 있어야하는데 어떤 이득이 있는가. 오히려 '정부가 못하면 경기도가 하겠다'는 남 지사의 발언이 정치적인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남 지사가 '2개월분의 누리과정 예산을 도교육청에 지원하고, 이 재원을 교육청이 학교협력시설비 등 교육재정 교부금에 사용하고 여유분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에 대해서는 "(남 지사는)예산공부 더 하시라"고 일축했다.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 문제는 국가적 어젠다가 됐다. 국가가 0~5세 사업을 책임지겠다고 한 말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 대통령의 결심이 있어야한다"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전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교육청에 대한 예산분석 자료를 발표하면서 "시·도교육청이 자체예산을 재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최소 5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